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제주발전연구원 총서 1

『제주평화포럼』-남북정상회담 1주년기념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제주발전연구원 편



평화의 저울추, 『제주평화포럼』을 기대하며

제주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그리고 평화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평화를 염원하는 주요 국가의 전직 수반, 정치지도자, 석학 및 메신저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장벽의 두께를 파악하는 일과 더불어 이를 허물어버리는 작업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가 평화의 율타리 안에서 공존공영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는 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주평화포럼』기간 동안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엮은 것입니다.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 저울질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평화포럼』이 평화의 저울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평화는 그 척도의 바른 가늠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평화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이 때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널리 읽혔으면 합니다.

『제주평화포럼』에서 좋은 의견개진과 토론 등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의 새 지평을 여는 데 일조한 모든 참가자들, 본 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제주평화포럼』을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의된 담론을 모아 책을 엮는 데 수고하신 제주발전연구원 가족들의 노고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차례

- 평화의 저을추, 『제주평화포럼』을 기대하며 - 고충석 / 5
 - 축 시: 제주도에서 평화의 노래 - 고 은 / 13
 - 제주평화선언문 / 19
- ◆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 김대중 / 21
 - 특별 논평 - 윌리엄 페리 / 26
 - ◆ 특별영상메시지: 냉전종식의 회고와 전망
 - 외교정책 대물림을 통한 평화정착을 이룰 때 - 조지 부시 / 29
 - 동아시아 경제·안보 연합공동체 구축 - 나카소네 야스히로 / 33
 - 동북아·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 - 노태우 / 35
 - 한·소 정상회담의 의의 - 미하일 고르바초프 / 39

제1부: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전망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43

-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 윌리엄 페리 / 43
-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환경에서 일본의 역할과 6자협력
- 나카야마 타로 / 57
- 남북 화해와 한반도 냉전종식 - 공로명 / 65
- 동북아시아와 러시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 - 바딤 메드베데프 / 75
- 동북아시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 유재건 / 93
- 세계 속에서 논의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소고 - 이부영 / 99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103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 일본의 견해
- 테라다 테루스케 / 103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평화 및 안보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 EU의 견해
- 프랑크 헤스케 / 109
- 현대 세계 상호의존의 심화현상: 러시아의 견해
- 테이무라츠 라미쉬빌리 / 115
- 한반도에 대한 미국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미국의 견해 - 에반스 리비어 / 119
-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중견국들의 포용정책 지속: 호주의 견해
- 조리카 맥카시 / 123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한국의 견해 - 최영진 / 127
- <외교지도자 원탁회의의 소결>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전제로
- 도날드 그렉 / 131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135

-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햇볕정책 - 손지애 / 135
- 한반도 문제가 미·일·중·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필립 바우링 / 137
- 포용정책은 곧 보장정책 - 윌리엄 태런트 / 141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 - 모리 치하루 / 143
- 북한의 두 얼굴 - 존 라킨 / 147
- 남·북한의 경제여건 및 전망 - 제이 솔로몬 / 149
-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각 - 도날드 킅 / 153
- 국제언론인 원탁회의의 결론 - 심재훈 / 155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157

-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 강성모 / 157
-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 김민하 / 161
-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과제 - 백낙환 / 165
-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 정몽준 / 169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목표의 달성 방안 - 이종석 / 171
-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과제 - 최학래 / 177
- 1차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 - 한승수 / 181

제2부: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189

- 신세계질서의 도래와 한반도의 미래 - 로버트 스칼라피노 / 189
-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시나리오 - 이노구치 타카시 / 219
- 한반도 평화안보와 중국의 역할 - 장 원링 / 233
-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 문정인 / 251
- 21세기 동북아시아 탈냉전의 중요한 관건들 - 고성준 / 281
-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과정과 국제협력 강화 - 권영민 / 285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스템 - 김동성 / 287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제2분과회의 소결) - 정진위 / 289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 기업의 시각에서 291

-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 구축과 번영 - 팀 그로서 / 291
- 동북아 공동 평화와 번영, 기업의 시각에서 - 손길승 / 301
-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으로서의 자유무역지대 - 김재철 / 311
- 동북아시아 번영의 조건, 금융시스템의 제도화 - 데이빗 쥐처 / 317
- 동북아시아 공동번영과 기업, 일본인의 견해 - 후카쓰 세이지 / 321

제3부: 21세기 제주비전

I. <기조연설>

-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제주 위상
 - 우근민 327

II. <제3분과회의>

-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337
- 국제관광사업과 평화, 일반적 견해와 동북아시아의 사례
 - 후란시스코 후랑기알리 / 337
-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조건, 환경친화적인 ‘제주형’으로 추진돼야
 - 현경대 / 353
-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미래 - 이해찬 / 361
- 동북아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과 제주의 역할 - 김세원 / 363
- 제주도,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데올로기 - 고진부 / 383
- 제주도,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 김부찬 / 387

【 종합토론: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

- 오코노기 마사오 / 391 ·스펜서 김 / 394
- 김태지 / 396 ·양영식 / 398
- 심재훈 / 402 ·종합토론소결 - 문정인 / 405

축 시

제주도에서 평화의 노래: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고 은*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야만에 희생된 한스러운 영혼의 섬 제주도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 냉전잔재를 청산할 의지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파도처럼 가슴 벅차오르며 한라산처럼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파도입니다.

파도처럼 살아있습니다.

그 파도아래

온갖 고기들이 헤엄쳐 살아있습니다.

온갖 산호들이 자라납니다.

그 파도 위

그 어디에도 저 혼자 높이 않고

* 1958년 문단 등장 이래 시집, 소설, 평론집 등 저서 120권 간행, 고은시전집, 고은전집, 서사시 백두산 7권, 만인보 15권 등. 1974년 자유실천 문인 협의회 대표. 1985년 이래 영, 불, 독, 서반아, 일어, 중국어판 시집 번역 출간. 1988년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의장. 1992년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남북작가회담 준비위원장. 경기대 대학원 교수. 1999년 미 버클리대 한국시론 강좌 초빙교수 및 하버드엔칭 연구교수로 시낭독 및 시론 강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UN총회 주최의 UN평화정상회담에 참가, 평화의 노래 낭독. 2001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시인의 날 아시아시인 대표로 참가.

해지는 수평선까지
누구에게나 자유이고 누구에게나 평등입니다.
그 평화의 파도 위 내달리는 흰 돛폭 팽팽합니다.

평화는 밥입니다.
지난 시절 두메산골 몇 가호 마을에서
밥짓는 저녁 연기 거룩하였습니다.
빵굽는 아침연기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는 밥이고 빵이고
그 이전에 쌀이고 밀이고 옥수수입니다.
평화는 밥처럼 빵처럼 절실합니다.
동북아시아 상형문자로
평화는 곱고루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함께 빵 먹는 날이 평화입니다.
지상의 모든 굶주림 사라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꽃입니다.
평화는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괴로운 날들
슬픈 밤을 지나쳐
한 송이 꽃이 없다면
어떤 것이 평화인지 모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나무와 새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거기 한 송이 꽃 들어올리는

그 조용한 미소가 없다면
평화 그것은 애타게 기다리던 일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 절망입니다.

평화는 어린아이입니다.

어여빠라

어여빠라

어디에 이 세상의 어린 아이만한 것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야

비로소 가정과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엄마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고모가 되고

이모부가 됩니다.

외할머니가 됩니다.

꼭 와야 할 세상의 내일이 옵니다.

그러므로 온갖 정성으로

그 아이를 길러내야 합니다.

평화야말로 그렇게 길러내는 아이입니다.

평화야말로 그런 아이의 친구이고 아저씨이고 이웃들입니다.

평화는 별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우주가 곧 평화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가 물었고

별을 바라보며 뱃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해하는 자의 마음 속에

온갖 파란 이겨내는 평화가 깃들입니다.
몇 천년동안 인간은 아주 긴 전쟁의 시간 속에서 죽고
아주 짧은 평화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평화조차도
곧 잘 전쟁의 욕망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늘 위기였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전쟁포로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문명들이 만들어 낸 이기(利器)는
차라리 전쟁용 흥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평화는 새였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다 날라가버린 새였습니다.
지난 20세기는 특히 큰 전쟁들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지루한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슨 비극인가
그 냉전이 진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들이 방황했습니다.

20세기 한국 분단시대는
21세기 한국 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낡은 세월 보내고
새로운 총소리 북소리의 연대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남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초토에서 다시 숲과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장벽이다가
어느새 길들여져
그것이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모순의 세월은 길었습니다.

그 역겨운 분단의 증오 걷어내고

함께 숨 통하는 평화의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다리입니다.

전쟁은 다리를 폭파해버리지만

인간과 인간이 오고 가는 다리는

오직 평화만이 다시 이어집니다.

단절을 넘어 평화는 수많은 강의 다리입니다.

아 평화는 푸른 꿈입니다.

꿈꾸는 자 없이는

평화라는 말은

탱크 캐터필러에 짓눌려 죽어버립니다.

평화는 꿈입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되는 꿈입니다.

그런 꿈 절반만으로도

세상은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평화는 미래의 육친이고 등지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마중 나가야겠습니다.

6월의 제주도 남쪽바다 해풍처럼 오고있습니다.

제주평화선언문

우리는 2000년 6월 15일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고,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 우리는 평화가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만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구조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상호 관용과 인내, 그리고 화해에 기초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만이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통일을 실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창출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민족화해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시켜 나간다.
- 우리는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평화의 섬, 제주’ 정신을 제주평화포럼에 반영,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제주도가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구축에 전인

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를 총망라하는 평화와 번영의 지식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분쟁 예방 및 해소, 신뢰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정신의 보편적 확산과 국가간의 자유로운 관광교류의 확대, 그리고 공동번영의 연체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우리는 제주평화포럼을 계기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평화센터”를 제주에 설립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물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1년 6월 17일
제주평화포럼 참여자 일동

남북정상회담 1주년, 회고와 전망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평화를 사랑하는 국내외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한국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6·15남북정상회담은 우리 한국 민족과 세계평화 역사에 참으로 의미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 만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북한은 적대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냉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저는 바로 그런 시점에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위한 극적인 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전세계가 놀라움과 기쁨 속에 환호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

화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과 세계 앞에 햇볕정책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해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의 여러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북한과 대화하고 경제지원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대 한국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위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한·미·일공조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최고 목표이자 그 가능성을 추구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이러한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미·일·중·러를 위시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와 지도자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일궈 냈었습니다.

그 첫째는, 남북간에 처음으로 민족통일에 대한 접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당장 완전한 통일은 어렵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남북이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종래 일관되게 주장하던 “중앙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바뀌어서 우리 정부의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매우 가까이 접근해 왔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마침내 통일정책에서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미군의 항구적인 한반도 주둔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6·15남북정상회담에서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

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대북안보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일·중·러의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과 평화유지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도 보다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한 이후에도 서유럽국가들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구한 것은 그것이 유럽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당한 반론을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쪽 신문을 통해서 이미 김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심으로 ‘어쩌면 김 대통령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 조상들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감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고 상봉, 경제협력, 사회·문화·스포츠 등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남과 북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공동번영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져야만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은 그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북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다짐해 온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금년 중에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3,600여 이산가족들의 상봉과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장면은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다시는 민족이 싸우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4개의 협정에 합의하고 경의선 복원공사의 착공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올해 들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북관계의 일시적 정체와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동반 정체상태가 몇 달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으로,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한은 물론 주변 4강과 세계 모든 나라의 이익과 평화에의 염원에 합치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절대다수의 우리 국민도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같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에서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짐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약속도 지키겠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실험을 2003년까지 연기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의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서 그동안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정책입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를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미·북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금강산의 육로관광과 금강산 지역의 관광특구지정 문제

가 남북간에 합의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15일에는 남북간의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명의로 정상회담 1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메시지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미·북관계 개선과 병행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미·북관계 역시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의 실현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 발전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병행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역시 성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세계의 열망이며 남·북한과 미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남북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은 장차의 문제입니다. 남북이 서로 안심하고 살고 협력하면서 살다가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남·북한 모두가 ‘이만하면 통일을 해도 되겠다’고 할 때 통일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참으로 지난한 사업입니다.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햇볕정책은 역사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바램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빙벽을 녹이는 햇볕정책에 뜨거운 열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논평

윌리엄 페리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

지난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한국 국민들은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과 같은 전쟁 발발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중무장한 200만의 군인들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군인들은 그동안 일촉즉발의 전쟁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었다면,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사망했을 것이며, 한국전쟁 이후 한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성과들이 한 순간에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1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개회식에 함께 입장했을 때, 세계는 진정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만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검은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남북 화해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든 작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만 합니다. 예컨대 김정일 위원장이 1년 전에 약속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장관급회담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남·북한을 이어줄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이 확대되고 정례화되어야 하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어야만 남북 화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한국 내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미국의 지도부가 다시 재개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최고 권력자들이 함께 만나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이 남북 화해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전제되어야만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우 귀중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역사는 우리를 매우 신랄하게 평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라는 최상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교정책 대물림을 통한 평화정착을 이룰 때

조지 부시 (George H. W. Bush)
전 미국 대통령

먼저 제주평화포럼이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에 저를 초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근민 제주도지사, 연세대학교 및 미국의 태평양시대연구소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 포럼에서 제 오랜 친구들인 김대중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수상 등과 머리를 맞대고 그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성취해 왔던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미리 짜여진 제 일정상 부득이 이 포럼에 참석할 수 없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과거 그들의 업적으로 인하여 세계는 큰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 간의 이른바 《론·야스》 파트너십은 미·일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켜 놓았으며, 아주 어려웠던 상황에서 1985년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장례식에서 비롯된 제 자신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과의 관계도 급속하게 깊은 우정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만나기로 합의하였을 때를 아주 기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과 모스크바 간 외교관계가 급속히 수립되었을 때에도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이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평화포럼에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초청되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1년 9월 18일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는 데에도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서울을 방문하여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한·중 외교관계의 수립을 논의한 당사자가 바로 전기침 당시 중국외상이었으며, 양국은 1992년 9월에 마침내 완전한 외교관계의 수립을 이룩해 내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침 현 부총리 역시 제주평화포럼에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전 부총리께 지난 10여 년간 한반도에서 중국이 수행한 긍정적 역할에 대하여 감사와 아울러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이 따르고자 하는 경제개혁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북방정책>>이라 일컬어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효율적인 외교를 발전시킴으로써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한국의 역사상 가장 좋은 관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이렇게 확립된 관계에 기초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작년 6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작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에까지 이르게 된 김대중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적 노력에 대하여 깊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반도에서 과거 냉전의 잔재가 말끔히 제거되기까지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충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정책이슈들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진지하게 가늠하고 정립해야만 합니다. 저는 1989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였을 당시 소련에 관한 14개항의 정책 어젠다를 채택하였으며, 이른바 <<봉쇄정책을 넘어서>>라고 명명된 이 정책을 신념을 갖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로서 곧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말타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그 이후의 일들은 이미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의 현 세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하게 단결력과 신념으로 전향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코자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리라 믿지만 저는 미국이 남·북한의 전 한민족이 평화와 화해의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아주 강력하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포럼의 모든 참석자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건설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도 가히 역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아시아 경제·안보 연합공동체 구축

나카소네 야스히로 (NAKASONE Yasuhiro)
전 일본 수상

국내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겨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화포럼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제주도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에 있기에 이 지역 평화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안정되고 이들 국가가 번영하는 것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을 먼저 외교의 기점으로 삼아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며, 여기에 중국을 포함해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자연스럽게 모이기 좋은 곳인 제주도에 모여 아시아 평화를 모색하고 또한 아시아 평화구축을 위한 지혜를 함께 짜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긴 역사를 통해 관계를 해왔습니다. 먼 옛날에는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불교만 해도 그렇고 문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이 반성해야 할 과거 역사도 있었으며, 거울삼아 반성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나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호·친선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있을 월

드넓은 한·일 양국 국민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해 나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 통일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심을 압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과감히 해결해 나가시는 대통령의 용기에 저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답방해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고 또 이를 지속해 나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되도록 빨리 국교 정상화하길 바라며, 또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협력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남쪽으로는 아세안 10개국에 있는데 여기에 일본, 한국, 중국 3국이 “10+3”이란 협력관계를 다음 시대에 확립하여 ‘동아시아 경제 및 안보 연합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한국의 여러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호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동북아·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

노태우 (전 대한민국 대통령)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가 본인이 추진했던 북방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포럼장소가 북방정책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곳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본인에게는 감회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인 1991년 4월 19일, 본인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이곳 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과 이념을 달리 해온 나라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있어 금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지 10주년을 맞았고, 금년에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에는 중국과 수교한 지 10주년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각국의 지도력있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와 번영을 논의하게 된 것은 본인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본인과 대한민국에 보여준 성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등 세 분 역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북방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해 주었으며,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 보여준 그분의 지도력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는 한·소 수교라는 역사적 관계 개선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동서간 냉전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분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동서 냉전의 벽을 허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198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를 통해 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국내외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념 및 체제의 장벽 때문에 국교가 없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지구 북반부의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북한과 과감히 관계를 개선해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자는 것이 북방정책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 위에서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성취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본인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구상 어떤 나라와도 이념을 초월해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1990년 10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어 석달 뒤인 12월에는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효된 이 문서는 오늘날에도 유효해 남·북한

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합의서는 통행, 통신, 통상, 등의 실현 방법으로부터 불가침과 군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행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평화 회담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기본합의서가 오늘날에도 남·북한 간에 유일한 외교 문서가 되고 있음에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이 역사적 문서가 앞으로도 남북 관계의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원하면서 평화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또한 동북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역동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 서북부, 몽골, 시베리아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고 중국 동남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에는 우수한 인력은 물론 자본, 기술, 경영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 그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잠재력을 발전과 번영이라는 현실로 바꾸는 데 촉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곧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이 오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즐거운 체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하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근민 제주도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소 정상회담의 의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S. Gorbachev)
전 소련 대통령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제1차 남북정상회담 1주년과 관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심화문제를 토의하고자 제주에 모이신 국제지도자들과 평화포럼 참석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세계 특별한 인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10년 전인 1991년 저는 바로 이 곳에서 당시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과 만나 한·소 양국의 국교수립 이후의 양국간 협력발전의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사실상 그를 통해서 양국간 협력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소 양국관계의 급속한 전환기였으며, 이후의 사태발전은 당시 취해진 조치가 옳은 것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양국간 경제관계가 발전하게됨에 따라 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무역 상대국들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협력과 문화 및 인도주의적 교류에서도 큰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은 심대한 국제적 반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환경조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제적 평화환경에도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초강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북한은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양국은 UN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초강국들의 군사적 대치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전이 남북 양국의 대화와 화해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한민족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재통일의 가능성과 아울러 냉전의 유산인 마지막 긴장지역 중의 한 곳에서 긴장완화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하나의 통일된 민주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한민족의 열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푸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에 대한 균형관계유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친 대통령의 남·북한 등거리정책은 양국의 접근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전 개최되었던 남·북한 정상간의 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드러나듯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은 과감하고도 용기 있는 큰 행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 및 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인도주의적 협력의 발전과 심화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당해국의 국가이익에 입각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양변관계나 다변관계의 기반하에, 또한 국가 간 공식관계나 비정부차원의 민간조직의 수준에서 공히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 주도는 실로 충분히 그와 같은 접촉과 만남, 협상과 논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1부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전망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

한반도는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가?

윌리엄 페리 (William J.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

지난 2개월 동안 많은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하이난 섬 사건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주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언론들은 일상적인 경제관련 뉴스들을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심각한 안보위기가 발생한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세대의 미국인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이제 평화와 안보가 정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의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부자연스러운 불안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분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는 그 상태가 다소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역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NATO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평화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정성’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절적 요소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떠한 단절적 요소들이 지역 내 전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단절적 요소들이 지역 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무기, 예컨대 WMD

와 같은 무기에 국가 자원을 쏟아붓게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절성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1) 남중국해에서 새롭게 강화된 미국의 중국 감시용 정찰 비행기들에 대해 중국이 미국 정찰비행기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형태로 대응하게 될 경우, 이는 이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매우 위험한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2) 중국은 대만의 공개적인 독립 움직임에 대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행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3) 중국은 미국의 NMD체제에 대응하여 중국 내 핵무기를 확대, 배치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인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 (4) 카시미르 사태에 대해 인도나 파키스탄이 군사적 무력충돌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핵무기의 사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5) 남북간의 화해 움직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경우,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한 위험스러운 군사 충돌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5개 요인들은 모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되어온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만약 언급한 대로 상황이 악화되어질 경우 관련된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5가지 안보문제 모두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모두 논의할 수는 없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에 있었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의 위기,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반도의 위기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는 갈등과 갈등의 위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그동안 한반도에서는 결코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위험스러운 군사적 휴전만

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담고 있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현재 한국 국민들은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역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러한 성공의 기회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동맹국들 간에 일치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부시 행정부 간의 관계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국 정부는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하며, 각자의 국내 정치적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의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긍정적인 단계에 도달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 2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사건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6월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논란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의 위기상황은 ‘영원히’ 내 기억에 남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는 남·북한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군사적 무력 행동을 준비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내가 국방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이 대규모 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영변에 있던 북한의 핵시설은 핵원료를 가공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약 5~6개의 핵폭탄을 즉시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한

국, 미국, 일본 3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었고, 만약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면 심각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일 3국이 취하게 될 제재조치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서울은 곧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사태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한국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긴급대책과 대응들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는 전쟁 긴급대책의 세부사항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틀 동안 몇 명의 장군들과 면담하고 관련 내용들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보병 부대가 파견될 것이며, 어떤 비행단이 출격할 것이며, 부대를 어떻게 수송할 것이며, 언제 한반도에 도착하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가상공격을 통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 연합군의 확고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너무나도’ 비싼 희생을 치루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나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적대적 행위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주한 미군을 최대한 보강하는 것이 이러한 희생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수만 명 증가시키는 한편, 서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인 민간인들을 한국으로부터 소개시킬 계획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회신을 받은 것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들을 대통령이 승인하기 바로 수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백악관으로 전달될 당시, 나는 각의실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보강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발

발하기 직전의 진정한 위기 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미 기본합의서라는 외교적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합의는 북한이 핵 반응시설과 가속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은 핵 확산의 위기를 방지하는 대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북·미 기본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당시 파괴적인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군사적 최후통첩을 북한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영변 핵 재처리 시설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단계의 보다 더 끔찍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셋째, 실제로 우리가 선택했듯이 군사적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강경책을 배경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개입정책(engagement)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도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 반응기와 재처리 시설들은 가동이 중단된 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동결은 한반도의 안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북한의 핵시설들이 동결되지 않았다면, 6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약 50여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몇 년이 남아 있는 하지만, 기본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상업용 핵원자로의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북한 핵 시설의 완전 해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본합의서가 파기된다면, 북한의 플루토늄 재생산은 수개

월 이내에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미 기본합의서를 재검토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려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시 행정부가 북·미 기본합의서의 골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2년 전 우리는 1994년도에 경험했던 위기와 유사한 또 다른 위기상황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일본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발사에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2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본토 일부부문에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각성이 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 중 하나를 발사하여 일본의 영토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과 일본은 당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은 미·일 양국의 강경한 반응을 유발시켰습니다. 미·일 양국의 의회는 북·미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단순한 미사일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북·미 기본합의서가 파기될 경우, 북한은 동결된 핵 시설들을 즉각 재가동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더욱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즉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은 수개월 내 플루토늄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의 탄두에 핵폭탄의 탑재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북·미 기본합의서를 파기하면서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확대시켰다면, 우리 스스로가 위기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의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나에게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데 당시에 나는 클린턴 대통령의 요청이 크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위기적 상황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이들은 북·미 기본합의서의 파기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해야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철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낙관주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이러한 강경노선을 채택해 실행에 옮겼다면 한·미 동맹관계는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주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이 실제로 작동되기도 전에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당시에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다면, 동맹국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국제적으로 소외되어 고립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전략이 한국이 추구하고 있던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채택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동맹 국가들이 모두 일치된 방향으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검토를 시작한 첫 주부터 한·미·일 3국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6차례의 3국간 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미·일 3국간의 일정한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근간을 두고 형성되었으며, 만약 포용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취할 행동의 내용들을 첨가하는 형태로 진행되

어졌습니다. 당시에 한·미·일 3국은 2가지의 전략적 대안들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한·미·일 3국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포괄적인 관계 개선을 단계별로 진행해 나간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자신들이 초래한 위협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중지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대안과 부정적 대안들은 모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오부치 수상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이 한·미·일 3국에 대해 주로 사용하던 각개 격파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합전선을 형성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대북전략에 근거한 첫 번째 북·미 회담은 1999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긍정적 대안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북한은 외부세계와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동안 북한체제를 유지시켜온 폐쇄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판단한 내용은 북한은 자신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다소 위협스러운 결정이나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나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3국과 3종류의 접촉을 각각 시작하면서 위협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북·미 접촉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유예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북한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진전이었습니다. 북·미 간의 양자간 직접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미 간 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발사, 실

전배치, 수출을 중지하도록 만드는 성공적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는 부시 행정부의 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부시 행정부는 마침내 지난 6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북·미 미사일 협상을 전제조건 없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평양과 도쿄에서 3종류의 북·일 회담을 각각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 북·일 양국 간의 접촉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변화된 모습을 띠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 남·북한은 북경에서 비밀 접촉을 연달아 가졌고 마침내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적인 연설로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긴박한 전쟁의 위협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의 선택은 정말 ‘근사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급변전과 관련하여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완전히 식기 전에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회의 확대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협력과 화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단순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게 될 ‘광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남북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반도 통일이 결코 이번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걸음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통일의 기초로 삼는 것조차 성

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조차도 국내의 정치세력들이 모두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화해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더 많은 남북관계 발전과 성과를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국내 정치세력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호주의 원칙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와 함께, 북한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동안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났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준비가 완료된 만큼, 남북대화도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중요한 관계 진전을 달성했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는 아직 확실히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처럼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향후 행동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미국 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실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미 ‘3자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oup) 체제를 지속하고 있고, 현재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미·일 3국이 각자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TCOG 체제가 진정으로 유효한 성과를 유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에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성사와 같이 매우 감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감정적 측면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합작투자사 설립이나 남북 간 도로, 철도망 연결과 같이 실용주의적 이해관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납북된 일본인들의 귀국 문제와 같이 감정적 측면도 강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한반도가 비핵지대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실용주의적 이유들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감시자로서 한반도가 비핵지대로 남아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지되기를 일차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상호신뢰구축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한·미·일 3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3국 간의 대북 정책 조율과 조정은 앞으로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국간의 협조와 협력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위상을 지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왔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호교환 방문,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동시 입장,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성공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상호간의 신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남북 접촉은 남·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확실한 대북투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들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북한은 외국인 투자가와 기업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규제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들어 북한 정부는 규제철폐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상해에 들렀을 때 상해 주식거래소를 방문한 것이 규제철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이해됩니다. 만약 이러한 결정이 맞는 내용이라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북한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전조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성사되고 실제로 진행된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외부세계에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여 취급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내가 설정한 우선 순위는 핵문제, 미사일 문제, 기타 대량파괴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순서입니다. 이런 순서로 순위를 매긴 것은 핵무기가 다른 안보적 위협들에 비해 우선할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우선 순위를 수용한다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더욱 가속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공고한 협조체제가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보유하게 된다면 지역 전체의 안보 현안들이 심각한 상태로 극적으로 변화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한·미·일 3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300km 이상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실험, 배치, 판매를 규제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에 북한이 가입하도록 미국 행정부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현재 MCTR의 북한 가입 문제는 상당히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로 판단되며 북·미 간의 미사일 합의는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미사

일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판매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미 간의 협상이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제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구축방안들이 적극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남북간의 상호신뢰구축방안들이 정착되어진다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에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는 지상군과 군사무기들의 대규모 감축도 즉각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기감축은 한반도에서도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당분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현재의 군사력을 감축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안보상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지역 내 군사력을 감축시키게 될 경우 지역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건데 지난 수 년 동안 한·미·일 3국에 의해 공동으로 주도된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이라는 공을 약 10야드 정도 앞으로 전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은 이처럼 앞으로 구르기 시작한 공이 골 라인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계속 굴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처럼 10야드라도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골 라인을 눈앞에 둔 마지막 10야드가 전진하기 가장 어려운 거리가 될 것이며, 가장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경우 한·미·일 3국은 북한이라는 공을 최종적인 마지막 10야드에서도 성공적으로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골 라인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골 라인에 까지 북한이라는 공을 굴리는 작업을 완성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협적

요인들 중의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은 이러한 성과를 완성한 우리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환경에서 일본의 역할과 6자협력

나카야마 타로 (NAKAYAMA Taro)

일본 중의원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정중한 소개에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나카야마 타로라고 합니다. 우선 제주 평화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관한 다자간 협력 방안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급변하는 지역 안보환경을 고찰하고 에너지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적 측면에 관하여서도 논의해 보려 합니다.

1.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는 동서양의 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갈등의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과 전세계적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지역적 분쟁이 일어날 위험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다른 무기들이 확산될 위험

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국제관계에는 많은 유동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볼 때 작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에 대화에 진전이 있어왔다는 점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긍정적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반도는 아직도 심각한 군사적 대결과 분열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 간의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이 지역에는 긴장과 수많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문화의 분포와 인종의 구성이 다양하고 정치, 경제제도, 경제발전의 단계 등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의 안보를 위한 제도적 기구나 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미국의 지역 내 주둔과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의 국가들 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형태로 여러 단계의 대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가 1991년 외무상으로 재직할 당시 처음으로 제안했던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당시 제안에서는 지역 내 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아세안 장관급회담에 정치와 안보문제에 관해 대화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창설할 것을 주창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1994년에 동남아시아 지역안보회의(ARF)가 창설되었으며 저는 ARF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 동북아시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노력들

다양성과 유동성을 내포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있어서 ‘대화의 습관’을 확립하고 이러한 대화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토의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1단계 수준에서는 양자간 정치·군사 회담, 방위력 교류, 상호 방문, 정례 회담과 해군 함정의 상호 방문과 합동 훈련 등

을 들 수 있습니다. 2단계 형태의 대화도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북아시아에는 지역안보를 논의할 다자간 포럼이 없습니다. 저는 장래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러한 포럼을 창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내의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자간 안보회의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북아시아 협력회의

이러한 형태의 대화를 성사시키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비정부 간 협력을 위한 포럼인 동북아시아 협력회의(NEACD)를 들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협력회의는 1993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원래 이 회의는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정부들 간에 지역 안보회의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훨씬 구성하기 쉬운 비정부 연구기관들 간의 회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의 회의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상호 보증제도(MRM), 군사정보의 교환과 전력을 위시한 경제협력과 같은 주제도 다루었습니다. 북한의 조기 대화참여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4. 6자회담

더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대화를 위한 틀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안보회의(ARF)가 정치·안보 분야의 대화의 장으

로서 발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에도 꾸준히 이바지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이 동북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이조 오부치 전 총리가 한국,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6자 간의 정부 간 포럼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이후 일본은 이러한 6자회담이 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발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한국, 북한,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6자회담 제의는 4자회담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며 일본은 4자회담이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지역 내의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지역의 크기에 걸맞는 회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자회담의 참가국이 아닌 일본의 당사국을 설득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5. 동남아시아 지역안보포럼

동남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안보 회담과 협력을 위한 유일한 다자간 정부 간 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23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7월부터 장관급회담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모든 국가들이 이 포럼에 참여합니다. 이 포럼은 동북아시아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회합하여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문제의 토의뿐만 아니라 안보상황에 관한 서로의 인식을 교환함으로써 참가국 간의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려는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국

방정책 문건의 제출을 포함하여 안보정책의 투명성에 관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포럼이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의 핵실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의 정세, 남중국 해역의 영토분쟁 등과 같은 민감한 정치, 안보 문제들에 관한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당사국 간의 솔직한 의견 교환은 신뢰구축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포럼에서 신뢰구축 조치로부터 예방 외교로 점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예방 외교에 관하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나라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험을 비추어 신속한 진척을 기대하는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각국의 주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참가국 간의 충분한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포럼 내의 예방 외교에 관한 두 부류의 의견들을 접목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동북아시아 포럼에서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6.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는 비록 전술한 정치·안보 분야의 대화와는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핵 비확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에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따라 두 당사국은 (1)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항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이미 존재하거나 개발 중인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파기하며 (2) 미국은 총 발전량 2000 메가와트 급의 경수로를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고 경수호가 완공될 때까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대체 에너지로서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는 두 번째의 합의사항인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고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5

년에 일본, 한국과 미국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역할은 핵무기를 핵무기가 아닌 경수로로서 대체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은 KEDO의 사업이 지속되는 한 동결되며 KEDO는 지난 5년간 실제로 직접적인 핵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KEDO는 지역의 안보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EDO는 일본, 한국, 미국이 북한과 아직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상호 신뢰도 아직 미약한 상태에서 경수로를 끝까지 완공시킴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KEDO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라고 여기고 있으며 경수로 사업을 위해 10억 달러(1,165억 엔)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KEDO의 의장에게도 재정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KEDO의 경수로 사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7. 에너지 안보

우리는 정치적 안보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여러 틀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인구, 식량, 에너지와 환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세계의 인구는 현재 60억 명을 넘어섰고 선진국의 인구는 12억 명 정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인구 팽창은 세계의 인구를 21세기 말까지 90억 명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이중 아시아의 인구는 53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잇따른 산업 발전은 안정된 에너지의 공급과 환경보호라는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아시아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석탄과 석유자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천연가스는 10%만을 차지하며 이는 유럽의 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아시아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북아시아에

는 한반도에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으며 작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의 진전이 생긴 사실과 북한의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포럼의 가입과 일본, 한국, 미국과의 외무장관회담 참석, 일본·북한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미국 국무장관 올브라이트의 북한 방문 등에서 그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하여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안보 분야의 대화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과 민간부문의 주도 아래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교류와 협력의 한 축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 저는 아시아에서의 인구의 팽창과 산업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환경 보호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만큼 천연가스의 사용률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추진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것은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아시아에 국제 천연가스 송유관을 건설하여 지역 내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와 러시아의 극동지방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거의 개발되지 않았습니니다. 가장 확실한 개발 목표는 천연가스이며, 1998년 러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카공화국 약 1조 3,000만 입방미터와 사할린 지방에 9,400만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과 다른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환경 친화적인 천연가스의 사용 증가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도 줄어들고 지역 내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8. 결 론

저는 지금까지 정치, 안보, 에너지 그리고 기타 경제분야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6개 나라들 간의 다자간 협력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러한 노력들은 막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며 저는 이 방면에서의 저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남북 화해와 한반도 냉전종식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제주 평화포럼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신라호텔은 제가 주소대사로 근무하던 1991년 4월 19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던 장소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경유하는 길도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개되었던 북방외교의 꽃이 피었던 바로 이곳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길을 논의하는 일은 의의가 깊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반세기여에 걸친 남·북한의 대치 상태에 해결의 서광을 가져오는 듯한 <꿈>을 주었고 노벨 위원회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꿈을 뒷받침해 주는 듯하였던 일이 불과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먼 과거의 일들같이 느껴집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특사회담, 국방장관회담과 군사 실무자회담, 경제 실무자회담이 열렸고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방문을 통해서는 3,6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1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남북교역도 2000년에는 4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6%의 증액을 보였습니다. 또한 4개의 경제

관계 협정에 대한 합의, 경의선 철도 복원 및 고속도로 통과를 위한 DMZ 관리 방안 등의 합의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DMZ 합의는 서명 발효하기로 되었던 제2차 국방장관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미완 상태에 있으며 북한측은 철도 연결과 고속도로 공사에 착공도 하지 않은 채 철수해 버렸다 하고 금년 3월에 예정했던 제5차 장관급회담마저도 북한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유산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정체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 초, 북한을 방문하였던 EU의장 일행을 통하여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윤곽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는 남쪽과의 관계도 북·미관계와 같이 당분간 정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연례 외교단과의 가든파티 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 스케줄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기고에서 남북 정상 간에는 산적된 난제들이 많음을 지적하고 만약 양 정상이 재회를 약속하고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한다면 그 자체를 큰 성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측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김 위원장의 방한에는 일정한 절차와 난제의 해결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한이 선행될 것이 예견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에 따른 선물로 그간 북쪽이 강력히 요구해 오던 50만kW의 전력공급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할 것이 예상됩니다.

전력공급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일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는 만약 전력이 사전 조율 없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준수할 인센티브를 잃게 된다는 것

이며 아울러 미측이 경수로 원전1호기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제공키로 되어 있는 50만 톤의 중유공급문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 국방위원장 자신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의 행방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미·북 간의 대화가 개시되더라도 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언급된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사찰의 조기 실시, 미사일 문제의 해결 등을 요구하며 검증과 상호주의 원칙 하에 금후의 관계를 규율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 김 국방위원장이 남한 방문을 결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미·북 관계가 발전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셋째, 한국측은 이번 답방시에는 지난번에 문서화하지 못했던 평화공존과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쪽의 기대에 어느 선까지 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이 문제는 동시에 북한측에 부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북측이 내놓은 답안이 남쪽 국민이 기대하는 선에 미달할 때에는 남쪽 정부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합의는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간 양측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국방 당국간의 핫라인 설치, 일정 규모 이상 부대의 이동·군사 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 등 1992년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상의 제 조치의 구체적 실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실망이 커지며 정부 여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문제 중 한 두 가지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출범과 더불어 햇볕 정책을 표방하고 종래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적용을 배격한 대북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그 이전의 정부와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북한에 동정적인 의견을 표명해서 관심을 끌었던 Selig Harrison은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야말로 전임자들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이 정책이 김 대통령 후임자들

에 의해서도 계승될 경우 10년 후에는 남·북한의 정치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햇볕 정책의 초기 단계에는 크게 반발했던 북한이 2년 후에는 남북정상 회담까지 수락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 3월 9일 김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남쪽의 평화공존 제의를 수락할 경우 농업분야를 위시한 도로, 항만, 전기 등 북한 인프라 건설에 정부 베이스의 대형 경제협력을 공여하겠다고 한 “베를린 선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남쪽으로부터의 대형 경제원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경제협력은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하여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만 냉전체제하에 있는 남쪽 주민들은 돈으로 산 평화에 대한 회의와 그들의 대북지원이 후일에 화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까지의 대북 경제원조가 ‘퍼주기식 원조’라는 인식이 한국 국민 사이에 팽배합니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이 내부 워크숍용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조차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71.4%가 좋다고 하면서도, ‘퍼주기식 대북원조’와 대북 저자세외교에 불만을 표시한 숫자가 49.5%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관변 전문가의 계산에 의하면 햇볕 정책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공여한 경협 총액은 3억 8,000만 달러라 합니다. 이것은 주로 식량과 비료 구입에 소요된 비용과 현대에 의한 금강산 관광료 1억 5,0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대형 프로젝트에 소요될 비용이 포함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원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 장차 어떻게 대북경협의 원활한 시행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사태가 이렇다면 정부 당국은 남쪽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금후의 남북관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

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쟁이 51년 전의 일이라고 하나, 그 동족상잔의 비극을 몸소 체험한 세대들이 살아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단 한번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독재적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는 레토릭을 소화할 비위를 갖지 못한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햇볕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 전개에 따른 수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와 검증을 앞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것은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련과의 관여(engagement) 정책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행동원칙입니다.

미국이 상호주의와 검증을 거론한다 하여 저도 덩달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작년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발표된 직후 국내신문에 기고한 4월 12일자 글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안전보장 문제와 대북 경제협력 사이에는 적절한 수준의 상호주의 원칙이 작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남북경협은 청사진을 그릴 때에는 동시에 안보상의 상응한 조치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보면, 남쪽이 대화를 요구할 때마다 북한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제주도에서 열렸던 임동원 특사와 김용순 북한 노동당비서 간의 특사회담에서 북한이 100만 톤의 식량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6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 남북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이 열렸던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경제적 구상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단 남쪽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금창리 사찰 합의, 4자회담 합의 등을 북한으로부터 도출할 때마다 보상이 아닌 인도적 목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는 하였으나 많은 식량 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식량 및 인도적 원조만 6억 4,600만 달러를 공여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10

만 톤의 식량 원조를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남쪽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호응을 얻기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대화의 마당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민족적 중대사인 남북문제를 초당적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의 실천과 준수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남북간에는 수많은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합의되기가 무섭게 휴지화되어 간 일이 허다합니다.

남쪽 국민들은 그간 너무나도 많은 북한의 기상천외의 행동양식과 불법, 불신행위를 보아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는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북한의 ‘Crown Prince’라는 인물이 일본에서 추방되는 광경을 TV를 통하여 보았을 때에는 다들 아연실색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된다는 인물이 위조여권을 갖고 외국여행을 하는 것이 ‘정상’인 북한 정권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 것입니다.

냉전구조가 엄존하는 이 땅에서 남·북한의 쌍방관계는 상호주의와 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일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감으로써 서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화정착과 평화공존에 대한 상호신뢰를 다진 연후에야 비로소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나 우리는 통일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Instead of hastening to achieve immediate reunification,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approach seems to be to work for the elimination of the ever-present threats of conflict first, and then to pursue reconciliation, cooperation,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ny attempt to reunify the divided country should come after that).

이런 견지에서 전번 정상회담에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일찍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에 기상 천외적 방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서고금에 걸쳐 적대관계에 있던 교전당사자들이 평화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밟았던 전통적인 신뢰구축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군사면에서는 이미 언급했던 CBM의 기본을 충실히 이행해 가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 가면서, 대화를 통한 화해와 상호교류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상호이해의 심화와 신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밟아 나가는 한편,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해 왔던 억지력을 견지해 나가며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은 파괴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생산, 배치의 배제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을 기함으로써 참다운 냉전체제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반도의 안보체제에 관하여 한 마디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정부를 떠난 후인 1997년 3월부터 1999년 봄까지, 한·미·일 3국의 민간 연구기관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한반도 통일 후의 동북아시아 안

보 체제」에 관한 공동연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 공동연구의 결과는 1999년 가을 U. S. - Korea - Japan Relations. Building Toward a 「Virtual Alliance」라는 책자(SIS Significant Issues Series)에 수록된 바 있습니다. 2년여에 걸친 3자간의 공동연구는 한·일 간에 10수 차례의 양자회의와 4회에 걸친 3자간의 공동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도출된 결론은 3국 공히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특출한 세력이 패권을 갖는 것은 각자의 국익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합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후에도 3국이 ‘실질적 동맹 관계(virtual alliance)’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미 방위조약의 유지와 미군의 계속주둔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후에 우리 민족이 취할 외교안보 정책의 기초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형성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이 단계에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 후의 한국의 분명한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미리 밝히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말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여기에도 ‘전략적 모호성(模糊性)’을 갖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통일의 막바지 협상 과정을 볼 때 미국의 단호한 지지와 지원 없이는 소련의 동의뿐만 아니라 영·프의 동의도 얻기 어려웠던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한 입장표명이 오히려 관계국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 후의 한국의 진로에 관해서는 동아시아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한국이 중국권으로 복귀할 것으로 점치는 연구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 한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통일한국에게는 가장 긴 국경을 같이하는 이웃나라가 될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중국은 무역과 투자면에서 미국(668.5억 달러), 일본

(522억 달러)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대상국(홍콩 포함시 왕복 433억 달러)이며 한국의 제2의 투자 대상국(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국방대학원의 세계지도에 ‘지리는 변하지 않는다(Everything changes but geography)’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오늘날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구성도(geopolitical configuration)에 있어서는 19세기와는 달리 미국이 전략적 player로 등장하여 긴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역할은 미군의 전방배치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한, 21세기 상당한 장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온 인류의 5분의 1의 인구를 가진 중국, 동서양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 그리고 경제대국인 일본과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국가적 생존을 확보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은 21세기의 상당한 기간까지는 계속 지금과 같이 한·미·일 간의 동맹적 관계를 튼튼히 유지하면서 인방(隣邦)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친선 협력관계를 강화해 가는 것을 외교, 안보의 중심에 두고 키를 잡아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동북아시아와 러시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관계 모색

바딤 메드베데프 (Vadim Medvedev)
고르바초프 경제센터소장

러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주제의 범위 안에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에서 러시아의 자결방안 둘째, 동북아시아의 상황과 러시아의 전략 그리고 셋째, 이 지역 경제협력 발전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1. 글로벌화시대 러시아의 자결 방안

과거 구소련의 영역이었던 광대한 유럽지역에서 지난 십 수 년간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는 소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는 더이상 서로 적대적인 양대 군사·정치적 블록의 하나를 이끄는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인구는 구소련에 비해 반으로 줄었으며 영토도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민 총생산도 3분의 1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직 상당한 군사적, 전략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는 더이상 다른 국가들 - 주로 인접한 국가들 - 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그리고 인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계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민주주의 발전, 인권과 자유의 토대 위에 굳게 자리잡고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정책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혁정책을 함께 시작했던 고르바초프의 동료들처럼 최근의 변화들의 의미와 성격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의하여 왔으며 조언하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주관적인 요소들이나 순전히 러시아만의 요인으로 생겨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현재 세계화의 근본적인 변화과정과 산업화 사회 이후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사회의 요구 그리고 세계화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분석합니다. 구 소련의 사회·경제 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은(구 소련의 몰락은) 1980년대 중반에 전환점을 맞이한 권위주의적인 정치제도에서 민주주의와 개방으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그리고 고립과 대결에서 개방과 협력으로의 문명의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에 들어서기 위한 길을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고르바초프 정부는 심화되는 정치적 투쟁 속에서 개혁정책을 예전부터 인식되어왔던 올바른 방향 즉 공공 생활의 이면들의 점진적인 개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한 이후 그는 서방의 조언자들의 처방에 따라서 급격하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부터의 위임을 받아 즉각적인 가격자유화와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시도했고 정부의 간섭과 지출을 몇 배나 줄였으며 국내의 시장도 사실상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도 통화정책의 규제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는 잘 확립된 시장경제체제에는 긍정적이거나 체제자체의 전환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상황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시대적인 경제발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의 경제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총생산과 실질 국민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극빈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어서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공업과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첨단기술분야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수요도 50% 이상 수입을 통해 충족되었습니다. 사회와 과학분야는 처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나마 광업을 비롯한 수출용 연료와 원료의 1차 가공분야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이것은 천연 자원과 연료에만 의존하는 전형적인 주변 국가(periphery state)들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과 시민의 자유 그리고 개방정책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적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집단 내의 갈등은 축적되어갔고 1998년의 채무불이행 이듬해에 정부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옐친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임압력을 받았으며 후에 대중의 신임과 인기를 얻게 될 젊고 보다 현대적인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최근 18개월 동안은 10년 이래 처음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예산이 흑자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이 최소화된 것도 같은 기간 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1년에도 긍정적인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가의 상승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 세금 감면 그리고 투자 촉진정책에 있습니다. 회복세가 수출용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공업에까지 미치고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특히 공학 분야의 회복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비록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의 임금체불은 없어졌고 연금생활자의 불편도 경감되었습니다. 푸틴 정부는 국내의 권력과 법, 질서를 통합하고 과두재벌(oligarchy) 집단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기구에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조계 개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교 정책도 러시아의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적극적이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모두 러시아 내의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지지와 이해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의 높고 안정적인 지지율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러한 일들은 러시아의 부활을 위한 긴 여정에서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들

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제의 회복은 너무도 미약하고 꾸준하지 못합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도 견실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경제위기 때 낡게 된 고정자본을 더욱 시급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간의 물가 상승이 있습니다. 외채는 러시아의 큰 부담입니다. 외채는 국가 수입의 총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우리들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것은 사회비용과 투자보장의 측면에서 역효과를 감수해야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체첸 사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젊은 대통령은 좌익과 우익세력, 전직 대통령의 추종세력,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소위 ‘애국자 집단’ 그리고 권력 구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강경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받거나 언론을 탄압하고 허위 정당이나 시민 운동을 꾸미도록 종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뿌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는 개혁정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대통령이 고수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효율적인 시장경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국가의 장래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자결주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 전환되어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거부할 수 없게 되어버린 국가적 전통이 허용하는 과정과 경향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재단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과거의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벗어나 견실한 성장으로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대내외적인 경제적·정치적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산업화 이후 경제의 기술적 현대화를 위한 필수 조건을 갖추게 되어 대략 20년 정도 안에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최선의 단계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도 러시아의 자결주의는 점점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양극체제 모델은 이제 과거의 일이며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히 심화되는 세계화를 바탕으로 힘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초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으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러시아의 학자들과 정치학자들, 저명 인사들은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극체제 모델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과정들이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발전적이라는 가정하에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세계 전체를 위협하며 - 경제, 인구 혹은 전력 공급의 관점에서 - 국민들의 국가적, 문화적 순수함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포괄적 민주화라는 목표를 세계화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각 나라들의 이익을 헤아리며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국내의 사건에 간섭하여 외부의 기준과 개념들을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난, 기아, 질병과 싸우며 민족적,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조율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제사회 혹은 지역적 기구들의 역할이 증대되며 그것들을 민주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고르바초프가 재임기간에 제안했던 새로운 정치적 사고에서 기인하며 이들은 또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서방 세계의 모델을 주창하는 사람들과 동유럽 슬라브 민족이나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통성을 보전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방세계, 특히 미국이나 문화, 사고방식, 역사적 전통이 비슷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유대가 있는 동아랍 국가들이나 과거 바르샤바 조약의 동맹국인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선호합니다. 한 가지 이견이 없는 부분은 바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아

직도 역사적 유대를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독립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재단의 학자들은 모든 지역의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위상과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러시아는 후기산업화와 세계화시대에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세계의 발전과정에 더욱 성공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구소련의 몰락의 결과로 러시아는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밀려나 유럽과 대서양으로의 여러 직접적 통행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한 국내의 자연 자원들은 영토의 북쪽 지역과 동쪽 지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인접 국가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전략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2. 동북아시아의 상황과 러시아의 전략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분으로서의 동북아시아는 많은 부분에서 독특합니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경제 발전 정도에서나 사회적·정치적 기반의 성격에서나 또는 역사적 전통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서로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중국은 인구로는 세계최대이며 영토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들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경제적인 잠재력에 있어서도 비록 사회주의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강대국입니다. 일본은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2위이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시대 동안 전례 없는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양대 초강대국의 하나였던 러시아는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극동지방을 강타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흥 공업국으로서 진정한 경제 기적을 일구어냈으며 짧은 기간 안에 후진국에서부터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달성했

습니다. 북한은 어려운 운명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 처하여 있으며,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고립되어 국민들을 어려움과 궁핍한 생활로 내몰고 있습니다. 몽고는 유목이 주요 경제활동과 생활양식인 나라입니다. 동북아시아는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후기 산업화 시기에 접어든 미국과 캐나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역동성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점점더 차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과거의 선진국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경제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의 신흥 산업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성장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산업화 발전과정의 엄연한 단계일 뿐이며, 고속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가능성을 가로막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성장의 추세에 반하여 북한의 정체된 경제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러시아의 극동지방은 러시아 자체의 문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곳은 광대하며 빈곤한 지역입니다(620만 평방킬로미터에 8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에는 더 넓은 시베리아가 있습니다. 구소련 시대에 극동지방은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던 지역입니다. 금과 다이아몬드 채굴을 포함한 광업, 전력 사업, 원목 적재와 가공, 어업, 식료품 사업 등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조선과 항공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 방위 산업시설도 지어졌습니다. 시베리아 종단 철도의 두 번째 노선도 완공되었고 해군 항만과 공항도 지어졌습니다. 극동지역의 인구는 비록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 과정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구소련의 무역규모는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의 러시아와의 무역규모는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

반 프리모스키 지역의 수출은 지역 전체의 생산규모의 1.2%를 차지했습니다.¹⁾ 2) 1990년대에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극동 지방에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과거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중앙정부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운송료의 인상은 극동지역 상품의 국내 시장과 독립국가 연합 내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예전에 극동지역은 자체 생산의 19%만을 소비하고 75%를 러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 공급했으며 6% 가량을 수출하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생산량의 75%를 자체 소비하고 10%만을 타 지역에 공급하며 15%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³⁾ 4) 이 때문에 이 지역 인구의 수입과 생활 수준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극동지방의 인구는 89만 7,000명이나 감소했으며 현재는 20년 전의 수준과 같아졌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특징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강대국들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의 상황은 세계의 전체적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 역시 이곳의 상황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와 특히 냉전의 기간은 이 지역에 나쁜 유산을 남겼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소련과 미국, 그리고 육군과 해군 병력의 가공할 조합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한 공군력, 간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의 주된 장이었습니다. 소련과 일본은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했고, 지역 내의 상황은 중국과는 계속된 불화와 타이완 문제,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위험한 문제는 아직도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 한반도의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20여 년

1)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과 발전”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M. 2001년, p. 40.

2) 이사예프 V. I.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개념”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최고간부회의 보고서.

3) 『극동지역 문제』, 1995, 제5권, p. 26.

4) 『극동지역 문제』, 1994, 제4권, pp. 12-21

간 동북아시아에서는 긴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되어서야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나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사고의 틀 안에서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특히 동북아시아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념적인 신조와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국가의 이익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고 러시아의 그것과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점진적 감소는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미쳤고 지역 내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989년의 회담에서 고르바초프와 덩샤오핑은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 서명하여 두 나라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련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최근에는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상호 불신과 편견을 버려야만 했고 국내외의 보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수교 작업은 두 나라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998년 가을에 정치국은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남한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한 무역 증진이 시작되었고 나중에 직접 무역도 개시하였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였으며 인도주의적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200명 이상의 소련 내 한인 동포들이 한국의 고향을 방문하고 친척들과 상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 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나라의 정상들 간에 역사적 회담이 열려 외교관계의 수립이 발표되고 관련 문서들이 서명이 9월 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해 11월에 저는 소련의 대통령 특사의 자격으로 과학자들과 경제인들로 구성된 인원들과 함께 남한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양국 간 회담과 남한의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두 나라 간의 경제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2월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 몇 달 후인 1991년 4월에, 고르바초프와 노태우 대통령의 회담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관계 개

선의 기반을 놓았습니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두 나라간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반적 상황과 지역 내의 상황 개선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수립과 남·북한의 UN 가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고 4대 강국의 남·북한의 상호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추어 졌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철수와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완화에 대한 전망이 대두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은 남·북한 간의 대화 성사를 위한 추진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긴장요소를 제거하는 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번 포럼이 기념하려고 하는 대상이기도 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재단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현대 전략노선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수립된 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 내의 모든 국가들과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원만한 이웃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긴밀한 정치적 협조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과학기술, 인도주의적 협력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대 강국이 정치적 안정과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국가 질서를 위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전의 영향과 편견을 극복하고, 모든 현안들을 정치적 압력을 배제한 협상을 통해 관련 국가들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해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조금씩 해결책을 위한 바탕을 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분단된 한반도를 연결시키고 남·북한 국민들을 재결합시키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과거의 선례들은 대결의 국면에 있을 때, 양쪽이 통일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

듯 남북간의 긴장관계는 계속 고조되어 왔으며 차이점은 점점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의 상황이 개선되자마자 남·북한의 서로를 수용하기 위한 건실한 노력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절대 개방적이고 명확하며 단호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남·북한 국민들이 분단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동조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시급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남·북한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분단과 고착되는 한국전쟁의 결과에 대한 러시아의 합당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지정학·경제학적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러시아는 적어도 다른 나라들 이상으로 동쪽의 이웃나라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안정의 한 요소로서 국제사회에서 두드러진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강한 통일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남북간의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의 노력을 통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긴 시간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완화시키려는 꼼꼼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들 러시아는 이러한 방향과 일치하는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민들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의 적극적인 평화 조성 and 통일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지도자와 수상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고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통해 러시아가 남·북한 두 나라를 대화로 이끌고 가깝게 이끌어 주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명확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정책을 지역 내 다른 강대국들과 남·북한 두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서 고수하고 있는 남북 균형의 원칙이 있습니

다. 우리는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삼자 경제협력을 통한 철도의 건설과 북한 산업의 현대화 등이 남한과 북한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배적인 현실과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급격한 변화가 가져오는 내부적, 외부적인 위협 등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이 지역 내의 단시간 내에 해결 될 수 없는 다른 분쟁들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또한 다른 분야의 당사국 간 관계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합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칙은 남쿠릴열도 문제의 해결에 적용됩니다. 다자간 정치 경제협력의 발전은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있어 점점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협력의 조건, 형태와 정도는 유럽 국가들의 그것과 다릅니다. 민주적 경제 협력 기구의 광범위한 개발은 러시아의 국익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공식·비공식적 관계와 포럼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간의 대화의 중심지로서 발전시키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

국가들 간 평화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혜적 경제협력의 증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통합의 과정들이 서유럽 국가들처럼 긴밀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 과학·기술 협력, 투자 활동, 재정협력,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벤처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국가 간 경제 협력은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화 과정에서의 지역 전체의 참여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북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증진의 필요성은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생산 요소들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긴박합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있고 축적된 생산 잠재력이 있거나 재정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편차가 더욱 심합니다. 동시에 몽고를 제외한 지역의 국가들은 모두 해상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극동지방과 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전체의 경제를 일으키고 현대화시키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구 소련의 시대에는 극동지방에서의 경제협력관계가 이념적·정치적 유대관계에 지배적 영향을 받아 주로 몽골, 베트남, 그리고 북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개혁과 개방 정책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협력 관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취해졌으며 극동지방에 대한 정책도 여기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지도층의 극동지역과의 경제 통합에 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등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급속한 변화를 가로막아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바로 세계화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일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과연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국들과 협력국가들에 러시아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특별한 지정학적·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자연으로 인해 러시아는 지정학적·경제적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동과 서의 가운데서 통합적 역할을 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철도와 송유관의 연결, 북해의 항로, 항공로, 광섬유를 포함한 통신망과 적절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구축 등은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로 들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핵심은 협력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경제적으로 효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교량적 러시아’는 남한에서부터 유럽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결과적으로 비용도 해상교통의 약 3분의 1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첫 단계로서 러시아의 철도로 인하여 컨테이너 수송량이 2만에서 2만 5,000개 정도가 늘어났으며, 2005년까지는 수송량이 40만 개에서 100만 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간 철도 사업 문제는 막 해결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철도의 복원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개의 시베리아 종단 철도 노선이 고려되고 있는데 중국을 통과하는 서쪽 지역의 바이칼 지방 노선과 러시아의 프리모스키 지역을 통과하는 동부 노선입니다. 두 노선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두 노선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동시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대륙간 고속도로 사업은 러시아와 남·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이며 이 지역의 교통·통신 분야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둘째,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극동지방과 시베리아의 자연자원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와 천연자원, 원목, 수산물, 청정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은 러시아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의 극동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극동지방은 전체 가스 생산량의 30%, 철광석 생산의 5.5%, 그리고 석탄 생산량의 5.2%만을 담당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투자자본과 노동력의 부족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주변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과 경영, 마케팅 기술과 기술자, 노동자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례로서 사할린 지역의 유정과 임업 개발에 외국 자본의 참여,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이르쿠츠크 가스 개발 사업, 야쿠치아 지방의 천연 자원 개발사업, 전력 수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는

2,208개의 외국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하였습니다.⁵⁾⁶⁾ 러시아와 주변국가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의 천연자원 개발의 범위는 몇 배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합과정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의 현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자원의 개발이 자연의 서식처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생태학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법 제도는 천연 자원 개발에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필수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공유 협정은 이미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매우 위협하게 여기는 강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노력과 법치주의의 강화, 그리고 사회의 안정 등으로 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경제적 자립 방안에 대해서 과도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후기 산업사회의 시대에(비록 기본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천연 자원만으로는 절대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상은 기술의 현대화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심각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과학기술의 잠재력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러시아는 로켓과 항공기 제작, 우주선, 항공기와 함정의 핵시설, 고속 원자로, 핵폐기물의 처리 등의 분야에서

5)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and 1990);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7) 등 참조.

6) Gregory Noble, and John Ravenhill,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Adjustment of Global Finance* (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T. J. Pempel, ed.,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상당한 기술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은 응용연구나 기술적 활용 모두에 있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나 세인트 페테스부르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러시아 과학원과 상위의 교육기관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제적 기초과학 연구소나 응용과학 연구소들이 러시아 과학원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지부에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과학원의 극동지역 지부에 관하여 몇 마디 할까 합니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는 아무르츠키야, 마가단스카야, 오블라츠크, 사할린, 캄차카 지방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에도 과학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개 이상의 주요 과학 연구소들이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혹은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지질학을 포함한 지질학, 지질 화학, 화산학, 지진학, 해양학, 해양 생태학과 해양 기술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의 큰 자산은 바로 러시아의 과학계의 기본적인 잠재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 간의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들이 기울여졌습니다. 1992년에는 러시아 과학원과 한국 과학기술재단 간에 과학 기술 협력과 학자들의 교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재료공학, 해양 지질 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30여 개의 협력연구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협동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그 중에는 “고출력 레이저의 자유전자에의 발사에 관한 연구 및 응용”(1999, Taidjon)과 “지역 내 대기오염 인자들의 이동”(1999, 서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999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러시아 과학원 사이에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후에 한국과학기술원과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와도 유사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의 기술적 현대화의 필요성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외국자본을 통한 기술 혁신이라는 두 견인차를 통해 현대화의

목표를 달성했던 일본, 중국, 한국의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리기 위해 러시아는 항구 도시인 나호카에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의 기업들 간의 교류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7) 8)} 우리는 스칼라피노 교수의 생각이 아주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연적 경제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즉 천연 자본, 노동력, 기술과 경영 기법을 통합한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일본 환해양대’는 그 좋은 예입니다. 러시아는 지역 내에서의 양자간, 다자간 경제협력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에게 있어 APEC의 가입은 무척 중요하며 국민들은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류와 포럼들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이 다보스의 세계 경제포럼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대화의 중심지로서 알려지는 것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7) Richard Betts, “Wealth, Power, and Instability: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1993/94, Winter); Aaron Friedberg, “Ripe for Rivalry: Prospects for Peace in a Multipolar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3 (1993/1994 Winter); Thomas J. Christensen, “China,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Spring); Robert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1999 Spring).

8) Takashi Inoguchi, “Peering into the Future by Looking Back: the Westphalian, Philadelphian and Anti-Utopian Paradigm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 Issue 2 (1999 Summer), pp. 173-191 참조.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동북아시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유재건 (국회의원)

먼저 네 발표자분들의 발표에 대해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고, 오늘 주어진 주제인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체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평화 정착의 문제들을 주변국가들과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2001년 6월 6일, 6개월여 동안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하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재 유럽을 순방하면서 EU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자는 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 미국 워싱턴에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후 어제 귀국해서 이번 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인 한국의 통일문제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소위 세계적 시각을 집중시키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일본, 중국, 소련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최소한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는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힘없는 지역이었습니다. 60억이 살

고 있는 세계에서 아시아에 사는 인구들이 반을 차지하지만 세계 지도국으로서 등장하지 못한 채 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한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덩샤오핑 체제 이후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소련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한 채 새롭게 서방국가들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엄청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문제에 제일 공헌이 크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박수를 보낸 페리 전 장관이 부시 정권에 권고한 내용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를 배경으로 남·북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 등을 남·북한의 문제임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문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의 공조를 병행하여 진행해 나갈 때만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위 win-win-win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페리 전 장관의 지적에 대해 본인은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발표내용 자체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나카야마 전 외무장관의 발언 중에서도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안보 협력체제가 동북아시아에서는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유럽에는 NATO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정식기구들이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정식 기구의 존재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공로명 장관께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들 혹은 고쳐야 할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내부에서 남남대화의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느리다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다소 정리된 듯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북 지원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한국 국내의 합의 형성이 부족하다는 점, 남남대화가 필요

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느 한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간에 남북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기로 조직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아직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조직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 협력을 위한 투자 보장문제나 이중 과세 방지 등과 같이 남북간에 약속된 문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비준 동의하는 방식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방식 및 사용 대상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 기금 집행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문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차츰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여론조사에서 제기된 부분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적인 의견을 충실히 따르고, 남북협력관계에 대한 국내적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신국제질서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질서개편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정책들이 서로 교차되어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상태가 있을 뿐 새로운 세계질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1990년 냉전이 공식 종료된 이후 국제질서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질서의 특징적 모습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이 지배적인 위치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WTO체제 아래 전세계의 경제질서가 단일시장 형태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개편이 결코 세계평화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전은 종료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되면서 국지전이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유럽이나 일본은 독자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종교적 문화적 도전으로 인해 문명 충돌적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갈등들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동북아시아가 부상되고 있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이 구축하려는 미국 중심의 세계 공동체 형성에 호응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념차원에서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 보편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장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또는 협력 속에서 한 축으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대국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일본이 다른 한 축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러시아가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하여, 동북아시아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냉전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주변 여러 국가들의 협력이 없이는 도저히 힘들다는 점을 그동안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반도가 작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 요소 때문에 주변 4강은 상호밀접한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강들은 한반도 문제가 향후 지역의 역학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위치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이 하나의 중심 지도국가였고 주변 국가들은 조공을 받치면서 중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현상을 수용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도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보호 아래 생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서구 국가들의 세력이 동양으로 확대되기 시작하

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세력을 확대시키면서 동양의 질서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새롭게 형성된 세력균형의 양상도 최근에 와서 다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도전받지 않는 강국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미국의 꿈인 ‘세계의 단일 민주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한 신질서(New World Order)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에 대해 개입하고 포용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이념을 전파하고자 하는 선교자적인 소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독자노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194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건설했습니다만, 이후 진행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엄청나게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2000년에 1조에 달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이 9조였는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6번째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자존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세계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중화질서 재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시장경제질서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보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고 국가라는 집단의 내부 질서를 더 중시하는 중국 전통사상을 새로운 세계질서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운집해 있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추종해 가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벗어나 남북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극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이러한 모습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성과를 거두기

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은 NATO나 예전의 CEATO, NEATO 등과 같은 기구 구성을 통해 안보적 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전세계의 인류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주변 4강 속에서, 과거에 연미친중(聯美親中)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문제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I. 제1분과회의

남북화해시대의 동북아 안보협력

세계 속에서 논의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소고

이부영 (국회의원)

네 분의 발표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운 바가 많습니다. 특히 페리 전 장관께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제안한 세 가지의 권고 사항들은 저희들에게 매우 긴요한 중요한 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페리 전 장관이 세워 놓은 소위 페리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카야마 전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일본의 안보에 대단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국 정치인들이 각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안의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안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고 부시 행정부가 탈퇴를 하겠다고 언급했던 기후변화협약, 소위 교토의정서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언급해 주신 것은 감명 깊은 지적이었습니다.

공로명 전 장관께서는 현재 남북관계가 초래하고 있는 한국 사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적 모습들을 지적해 주셨고 남남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존재 양식과 관련하여 한·미

· 일 동맹체제가 계속 긴요하다는 것을 통일된 이후의 국가존재양식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내부 또는 국제적으로도 논의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메드베데프 박사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논문의 내용 중에서 지난 세기 동안 만들어진 질서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있어 미국의 존재, 미군의 주둔 문제 등과 같은 내용들을 현실로서 인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견해를 밝혀 주셨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과학기술상의 능력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발전과 평화 협력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단히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신이 한반도의 평화적인 화해와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긍정적 기여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들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쌓아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두손을 맞잡고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통해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확고한 기반을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민족의 주체적 자주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진전을 위해 주변국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페리 프로세서는 북·미관계 개선 및 한

반도 평화진전을 위한 원칙과 기조로서 채택되고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와 제네바 합의로 대표되는 클린턴 행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를 인정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신뢰구축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포괄적인 단계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효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핵의 투명성과 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 협상의 주요 의제로 진행되더라도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문제는 남·북한 당국의 주도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북한 간 협상이 이산가족 문제나 경제교류 등의 문제에만 국한될 경우 한국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면서도 자주적인 주체로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D 정책은 한반도의 지형적 요인이나 군사적 대치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한반도의 경우에는 안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실효성이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MD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시 정부의 노력은 자칫 한·미관계와 한반도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북·미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 하에서 향후 진행될 북·미 대화가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어온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지 않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가 지나치게 검증문제에 집착하게 될 경우 북·미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진전은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해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서울 답방과 함께 몇 가지 선물을 준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이산가족들의 남북방문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서 연로한 이산가족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빠른 시일 안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들도 보여야 합니다. 당장 군비축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남북 양쪽의 장거리 포부대를 후방으로 철수해서 재배치하는 문제부터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전선 부근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제거 작업,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경의선과 경원선, 동해북부선 등의 철도를 복원하고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협상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면 북한도 한국을 외세의 식민지로 규정해서 혁명의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한국을 공존의 대상으로 선언하는 작업을 김정일 위원장이 주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역시 남북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야당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이 정부 여당과의 일정한 공감대 속에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대북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야당은 현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한다면 그 성과를 전향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천명해 왔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협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 보다 대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보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인식이 야당 내부에서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

일본의 견해

테라다 테루스케 (TERADA Terusuke)
주한 일본 대사

1. 남북정상회담 1주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열리고 있는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1년 전 세계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의 정상들이 서로 만났고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큰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러한 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근거하여 남북간의 대화가 지속되고, 한반도의 긴장 또한 크게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접촉과 대화가 중단되어 있듯이 남북간의 대화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최근에는 대화 재개를 예상케 하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6월 6일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마쳤으며 곧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곧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미국 행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결속과 협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모두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2.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세계에서 냉전의 잔재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동북아시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안정과 번영은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세계의 주요 강대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북한이 인도적 문제를 포함하여 미사일 문제, 핵 시설 문제 등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한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3국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국간의 협력은 2001년 5월 말에 개최되었던 3차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모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달 고렌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것과 같이 유럽연합(EU)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쪽에는 EU가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과 미국, 일본이 위치하면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서로 긴밀한 접촉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와 공감하는 바가 큰 만큼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접촉도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998년 일본의 오부치 전 수상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참가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6자회담’은 주요 강대국들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구축방안들을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3.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일본의 역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인 만큼,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요한 긍정적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역할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북·일 국교수립 및 관계 정상화의 문제는 20세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유산으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과거 식민통치를 진행했던 지역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상 문제와 같이 북·일 국교 협상 과정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 현재 외교 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관계라

고 말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둘째,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일본의 안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수송체의 개발 및 확산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전 국제사회에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 사건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관심과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은 북한을 고립시키기보다는 북한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은 그동안 7여 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2000년 8월과 10월에 이어 2001년 4월에 다시 개최된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현재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담은 북한과 일본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의 회담이 조기에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과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과 북한의 금호 지구에는 인력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그 활동 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북한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통해 50만 톤의 쌀을 2000년 10월에 북한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4. 결 론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안정을 향한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의 개방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고무적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친밀한 우방국들 중의 하나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평화 및 안보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

EU의 견해

프랑크 헤스케 (Frank H. Hesske)

주한 EU 대표

아시아는 EU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다. 아시아는 2000년도 EU의 무역거래 대상 지역 중 3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지역이었다. 한국은 EU의 12번째로 큰 무역거래 대상 국가였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갈등이나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는 유럽인들에게도 심각한 반향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EU의 관심과 개입, 관여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발칸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유럽 내에서는 EU가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많은 유럽인들이 이에 공감했었다. 그리고 동남부 지역의 유럽 국가 대부분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의 형성에 대해서도 동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에 있어 다양한 안보적 요구들이 모두 충족될 수 없다면 세계화가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EU도 남북 화해의 전반적인 과정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평화 및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강

력히 지지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1995년 이후 진행된 EU와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자세한 배경들과 그 배경적 내용, 그리고 KEDO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1999년 7월 이후 EU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 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유럽의 근대역사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적 내용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자 한다.

유럽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헬싱키 협정이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국경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되어야만 했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을 흡수통일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으며 몇 가지 분야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적 측면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쪽 진영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쪽 진영의 체제가 붕괴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문제가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통일되기 전 동·서독 간에는 기존의 국경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이 기본합의서는 실질적 통일이 진행될 때까지도 유효성을 가진 채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 화해를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 treung)는 서독정부가 동독의 공산주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 핵심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서독 간의 상호교류와 접촉을 확대시킨 것은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으로서 동·서독이 느끼게 된 안보적 위기감이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들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행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이 인식하고 북한이 보다 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치질서는 북한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의존

해 오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강력한 혈맹적 유대관계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에 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얻게되는 두 번째 교훈은 만약 남·북한 간에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있는 신뢰구축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다. 1991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본합의서를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들 때문에 그동안 그 실효성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6·15남북공동선언도 남북기본합의서가 무력화된 과정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의 의지 표명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에는 남·북한 화해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남북화해의 초보적 단계마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교훈적 내용은 헬싱키 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연합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통일 또는 통합 과정에서 서로 차별적인 국가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만약 통일이거나 통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모임이나 결합은 쉽게 성사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 과정의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다소 자유롭게 기존의 제도나 운영체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상호의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방향으로 이익과 이윤이 이동하고 통일과 통합의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들이 통일 또는 통합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만이 통일 또는 통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

다. 만약 참여자들이 모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산은 결코 진행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남북간 화해과정은 일시적인 지체 또는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그리고 잘못될 경우 그동안 이룩해 놓은 남북화해의 과정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유럽에서 평화과정착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으며 통일 또는 통합을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남·북한이 단일 민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 과정에서 범민족적 존재를 형성하고 부각시키는 작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을 살펴보면 통일 또는 통합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신속히 제도화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그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해지며 자칫 당사자 전체의 안보 상황마저 위협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관행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분야에 있어 제도화된 협력은 통일 또는 통합을 향한 매우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경우에는 대량파괴 무기의 비확산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하고 이를 제도화시켜 나가는 작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자간 대화체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양자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서울과 평양 간의 상호 신뢰성을 고양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U의 외교안보정책들은 EU 회원 국가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개발, 인도주의적 원조 등의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EU의 유럽위원회가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1995

년부터 북한에 대한 EU의 식량원조와 인도주의적 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2월에는 EU의 전문가 팀이 북한을 방문하여, EU의 원조가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답사 실시를 북한과 합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 현지의 현장 방문은 북한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후에 실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대표자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원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될 예정인데 가장 먼저 진행될 프로그램은 북한의 정부 관료들에 대해 시장경제원칙 및 국제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서 올해 안에 착수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진행될 프로그램은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적 관심 속에서 북한이 이러한 분야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 분야와 내용들은 더욱 확대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EU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한 간의 화해 과정을 지지해 오고 있다. 동시에 EU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여 국제사회에 적극 나서도록 계속 권고해 오고 있다. EU는 남·북한, 그리고 다른 국제 행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들을 적극 지지하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현대 세계 상호의존의 심화현상

러시아의 견해

테이무라츠 라미쉬빌리 (Teymuraz O. Ramishvili)

주한 러시아 대사

러시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해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러시아의 방대한 국토와 3,000만 명의 러시아 국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과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들과 서로 접해 있는 러시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 중의 하나로서 스스로의 위상을 다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코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긍정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지역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들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 세계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과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도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집단적 행동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당해 지역 국가들 간의 보다 강력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오직 상호이해의 균형 속에서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보는 한걸음씩 단계별로 진행되어져야만 하며 간단하지만 신뢰구축에 유용한 문제에서부터 복잡한 문제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소규모 지역 수준의 안보와 번영을 향한 노력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역적 수준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희망과 매우 흡족할 만한 긍정적 변화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우려와 걱정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안보적인 상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내의 대립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1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들 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

시아의 기본적 입장들을 언급한 부분들입니다.

첫째,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적 협력과정은 외부의 개입없이 남·북한 국민들과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주적으로 동의한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둘째, 남·북한 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이면서도 외교적인 수단들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셋째, 러시아는 러시아와 주변 다른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통일된 한반도의 건설과 그 과정들을 환영한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가 국제법이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넷째,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수준만큼 전세계적 수준에 있어 긴장 완화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사일의 비확산과 관련하여 세계적 수준에서 러시아가 선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간의 연결 프로젝트, 한반도의 가스관 연결 등 에너지 분야의 공동 근대화 프로젝트, 기타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해당 국가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당사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보다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 안보 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수준에서의 안보와 협력 문제들을 논의

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해 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의 창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처럼 현재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에 대한 미국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미국의 견해

에반스 리비어 (Evans Revere)
주한 미국 대리대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기념일을 생각해 보면, 지난해에 있었던 역사적인 만남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의 전망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오한 방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비전과 결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해 강력히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과의 대화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비전과 결심은 미국 정부와 행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은 오직 미국·북한의 연계가 평행하게 진행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고 뚜렷이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는 조화 속에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과 함께 합니다.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부시 행정부의 정책 조정의 주요한 산물이었습니다. 이 조정은 북한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과 북한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에 주는 도전, 이러한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망,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신중하고도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평양과의 새로운 대화에서는 우리는 제네바 합의에 대한 진전된 이행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압박, 미사일 수출의 금지, 그리고 좀 덜 위협스러운

재래식 군사 태세 등의 심각한 토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나아가 다른 정치적인 단계들도 시행하는 데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의 평화, 건설적인 북·미관계, 지역 안정 등을 모색하는 포괄적인 맥락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즉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행정부가 다져나갈 길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접근할 때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포용하고 화해하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강력히 그리고 명백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는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그 밖의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행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요소였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궁극적으로 한국민들 스스로가 풀어야 할 문제이며 북·미 간의 접촉은 남·북한의 화해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이 가진 생각입니다.

둘째 원칙은 우리는 제네바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하며 우리의 (핵) 비확산 목표를 달성할 방도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후에는 북한과 함께 합의의 이행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래식 무기의 전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방도를 모색하면서 또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중지시키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협상을 진행시키는 데의 어려움, 특히 재래식 무기에 대한 복잡성에 대해 착각을 하거나 환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

습니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우리가 북한과 결론을 모색하는 그 어떤 합의에도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참석해 본 사람은 누구나 평양과의 관계가 아직 복합적인 단계이며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합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입니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미국의 정책도 한국과 우리의 동맹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연유로, EU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대화와 의견교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조화 없이는 우리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간의 지원 아래 이루어져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미국 정책의 결과물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특징지어 온 긴밀한 협조적인 대화의 결과물입니다. 이번 해에 열린 그룹 미팅에서의 두 3자적 조화(한·미, 미·일)를 포함하여 우리들의 양자간 대화는 미국에게 한국의 우려와 우선 순위, 그리고 일본의 우려와 우선 순위를 전해 주었습니다. 양측에서 들려주는 솔직한 충고는 우리 미국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이번 주에 우리의 새로운 특사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를 만나 앞으로 양자간의 대화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만남은 아주 실무적인 것이었고 대화 과정의 시작으로 유용했었습니다. 그 만남은 미국과 북한과의 앞에서 기술한 많은 의제들을 다루기 위한 완전한 회담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새로이 대화에 나서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진지하고도 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개입의 정도와 틀을

들이밀 때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채널이 문제 해결과 근본적인 평화 이슈, 안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화해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접근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한국 내의 동맹 세력과 그들이 남북관계의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늘 우리는 공개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책 조정과 새로운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책 조정의 완결이 한국과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회피하게 하는 핑계를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 한국과의 대화가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주고 단기적으로는 긴장을 완화시켜주며 중국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한은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행위자이며, 미국은 평양과의 직접 대화를 포함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국민의 친구로서 그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상 우리에게 가져다준 지혜와 결심 그리고 비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에서 작동하는 것과 유사한 지혜와 결심, 비전을 보여주고 관련된 이슈를 솔직히 다루며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강렬히 희망합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중견국들의 포용정책 지속 호주의 견해

조리카 맥카시 (Zorica McCarthy)
주한 호주 대리대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론 중에 제기된(당사국도 비당사국도 아닌) 중견국들의 역할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호주의 예를 들까 합니다. 저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응용할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북한과의 관계에는 두 가지 전기가 있었습니다. 1979년에 있었던 북한의 갑작스런 캔버라 대사관 폐쇄와 평양관저 철수 요청이 첫 번째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1999년에 시작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관계가 개선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돌연 양국 간 대화 재개와 우호관계 재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선의적 태도가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우리가 지원하기 바랬던 포용정책을 우방이 지원해 주길 요청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고, 그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화와 포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음미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별 쟁점없이 효과적으로 비핵화산 문제를 제기해 놓고 그 안에는 손대기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국교정상화와 무역대표부 교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에 따라 호주 외무부는 평양을 방문했고, 다음 주에는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호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실 다음주에 호주에서 중대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호미동맹50주년기념행사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백남성의 방문입니다. 뜻밖에 두 행사가 동시에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만 두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일본, 한국, 중국과 선린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산 문제에 우선적으로 매달리기 바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의 동맹유지와 이 지역에서 역할 모두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이 북한의 시각에서도 상호이해를 위해서는 유익하게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돌발적 사태를 만들어 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호국과 동맹국이 전해 왔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북한과의 과거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 행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며 최영진 실장이 말씀하신 국제공동체에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고부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중요성과 지위를 인정한다면 신정부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잠시 멈추어 신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견국들은 포용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관계 개선만이 이익이 된다는 교훈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발짝 물러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할 때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주의적 행동에 의한 단절

보다는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는 포용정책을 지속해 왔고 건설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주요 당사자국들의 입장 또한 후원해 왔고 다음주에 있을 백 외무상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포용정책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한국의 견해

최영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우리는 글로벌화한 세기에 살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라는 용어로 환언하자면 이는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코소보, 시에라리온, 보스니아,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복의 대상이었던 이들 지역은 더이상 아무도 이들 국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기 동안 그들은 정복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에 대한 노획물’로서 한 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제사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비판적인 문제들을 연구할 때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시각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북한이 외부 세계와 상호의존을 키워가도록 도울 것이며 어떻게 개입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답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고립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문제를 안게 될 뿐입니다. 비록 해결책은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문제는 양쪽 당사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고립된 채로 살아온 까닭에 외부 세계와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외부의 개입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며 이는 이른바 북한이 직면한 내부의 딜레마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고립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데 딜레마의 근원이 있습니다. 북한이 국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립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투자와 무역을 수용하고, 고립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서로 엮어진 수수께끼와도 같아서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고립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미국이나 북한을 위한 해답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세계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약이 질병보다 더 나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만간 북한에 의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난해에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가능하도록 포용에 대해 반응을 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회담에 개최된 것에 대해 모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의 마지막 흔적을 해결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최초 단계가 잘 되었던 이래로 우리는 경험이 있고 경험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었으며 이론으로부터 현실을 만들어낸 듯했습니다.

남북회담 이후 새로운 현실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여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도전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여세를 몰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호 교류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세를 몰아가는 것의 문제는 남북관계가 현재 정체되어 있으며 북한의 딜레마로 인해 화해가 필수 불가결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북한이 일관된 자세로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다소 주저하는 듯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두 번째 회담에 대한 새로운 합의입니다.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김정일의 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중요한 사건이며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난 50년간 고립되어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부터 대량살상무기, 장거리 미사일 위협, 인권 문제,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확산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떤 이슈가 매우 어렵고 미묘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슈들이 중요하고 결국 모든 것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상호의존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 간에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를 위한 행동의 태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이런 시각을 유지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은 상호 교류입니다. 북한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좀더 기다려 볼 것을 설파했고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더 많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딜레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며 지연된 상호교류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남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 문제를 그 영향이 아닌 근원에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량살상무기, 인권,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의 이슈들은 모두 결과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호주의(tit for tat strict reciprocity)를 엄격하게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포용이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게 유일한 선택이라고 확신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포용을 통해서 언젠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상호의존을 키워나갈 것이고 이는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I. 외교지도자 원탁회의

외교지도자들이 본 남북정상회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전제로

도날드 그렉 (Donald Gregg)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일 김정일에게 10년이나 20년 뒤에 그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느냐고 물어 볼 경우 김정일의 대답이 그리 명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루마니아 차우체스크의 죽음은 북한의 지도층이 다루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92년 중국 대사가 처음으로 서울에 부임하였을 때 그는 김일성이 차우체스크의 죽음으로 인해 중국을 방문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중국지도자들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일의 딜레마는 변화를 위한 개방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문제로 불러들이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가장 고전적인 격언은 ‘호랑이의 등에 탄 사람은 만일 그가 호랑이 등에서 내릴 경우 잡아먹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김정일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 모형이 있으며 그것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의 경우입니다. 비록 이것이 다소 놀라운 일이지는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억지인 것은 아닙니다. 핵시대에 있어 가장 위험했던 두 가지 사건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94년 북한의 핵 위기입니다. 카스트로는 수년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첫 번째 위협이었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그리고 이제 김정일은 지난 50년간 미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위협의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카스트로의 경우 그는 여전히 권좌에 있으며 쿠바에서는 존경과 심지어 충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이애미의 쿠바계 미국인들 사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카스트로를 한편으로는 그가 실패한 중요인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쿠바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피그만 침공 작전을 통해 그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교황을 환대하고 피그만 침공작전 참전 용사를 쿠바로 초청하며 미국의 프로야구팀이 쿠바로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웃집 삼촌처럼 친절한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인이 그런 것처럼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평행선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자리에 앉아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이 쿠바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우선 순위를 논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 미국이 지니는 걱정 중의 하나는 매우 어려운 수준에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 역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의 인간화의 징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EU를 환대하였을 때에는 그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보다 덜 괴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 모양도 조금 더 나아보였고 더 편해 보였으며 그의 아들이 일본에 체류한 것도 정상의 징후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1994년 위기에서 몰아쳐대는 역할을 했던 IAEA로부터 북한을 조심스레 풀어주는 것 외에도 상호주의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고 탐색되지 않은 새로운 측면이 있으며 만일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된다면 우리는 새로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시간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만 저는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햇볕정책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야당이 최근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논평을 발표한 것에서 보듯이 한국의 정당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과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첫째로, 나는 정치에 관해 전문가가 아니며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가 아직 2년이나 남았으며 정치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공이 대중의 지지도와 인기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 나는 같은 문제를 분석했던 과거의 일화를 인용하겠습니다. 1994년 핵 위기가 극단에 이르렀을 동안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man on the street”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피크닉 중인 한 형제를 만나 핵 위기와 북한에 관한 생각에 관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그들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우리도 핵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기에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왜 위협을 느끼지 않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폭탄과 공격의 위협 속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단지 이전의 위협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대중들의 무심한 반응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올해 초, 우리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북한 실정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 실정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질문에 대한 짧은 한마디를 하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지만 우리가 경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이 경제와 취업난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수 시간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 정당들은 햇볕정책을 지지 혹은 비판하는 그들의 논리가 있으며 이렇게 정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그들의 주머니 사정과 관계하는 일과 그것들이 그들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선거나 대북정책에 있어서조차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문제가 미·일·중·러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필립 바우링 (Philip Bowring)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 홍콩지국장

한국 문제가 미·중관계에 있어 어떻게 작용되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을 가깝게 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북한의 정상화를 설득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과장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식은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 매우 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이익을 가지고 있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만약 북한이 앞으로의 군사적 지원이나 미래 의제를 위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면 그것은 중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중국은 북한과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그들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조정과정에 있으며 협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중국이외의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한편 동북아와 한반도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의 전체적 전략상황에 적절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문제는 동남아시아 안보문제, 즉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와 관련된 대만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만의 전략적 상황과 주권에 대한 시각과 관련된 일본의 위치는 거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그것의 부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책이 실행되고 중지되면서 수년 동안 노력을 외교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은 안보문제에 관한 한 더 많은 자위적 태도를, 타국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남북 일본인 등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적어도 경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이 당황스러워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떠오르고 있을 때 일본이 전략무기 없이 계속 존재하려 할 때, 전략적 위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났기에 이제 시작된 긴장완화(détente)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북한체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후원자가 없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 사이에서 대리전을 치를 만한 자주권도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의 생존게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막기 위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포용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은 일로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계속되어야 하는 방법이지만 아직 아무 것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북한의 통일과 병행될 북한의 정상 국가화 시나리오는 마치 댐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아마 한국이 통일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한·중관계의 친밀성뿐만 아니라, 30년 후 통일한국의 경제력이 일본과 엇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경제 경쟁력의 관점의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두 개의 작은 국가로 존재할 때 큰 국가 보다 다루기 쉽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서 한국의 통일을 바랄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일 것입니다. 강력한 한국은, 중국과의 오랜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정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확실한 이익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분열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계전략상 미사일문제는 한국보다는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에서 이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시 행정부는 너무 많은 국가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한국과 같은 소수의 큰 이슈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한반도에 관한 한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논쟁을 종결지을 것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포용정책은 곧 보장정책

윌리엄 태런트 (William Tarant)
로이터통신 서울지국장

만약 남한이 강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가뭄을 맞게 된다면 북한에게는 더욱 심각한 재난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심각한 산림개간을 경험하여 왔으며 아직까지도 집단농장체제의 집단적 경영실패로 초래된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북한 중앙방송(KCNA: the Korea Central News Agency)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창문이자 가뭄에 대한 최근의 정보를 받는 원천입니다. KNCA는 공식적인 뉴스 방송이며 그 화려하고도 강력한 수사는 서울에서 이를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흥미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KNCA는 이번 가뭄이 조선왕조의 사료로부터 추정해 볼 때 1727년 이래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왕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지만 북한이 이러한 선례를 따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권 조직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는 대부분이 정치범인 25만 명의 죄수가 투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KNCA는 또한 3월에서 6월 사이, 즉 식물이 자라나는 봄철에 평균 강우량이 연간 평균의 11% 정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남한은

이 시간의 강우량이 30% 정도이고 결국 사태는 북한이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와 원조 기구와 자선 단체들이 조사하게 될 결과들 중의 하나는 인구이동예의 영향입니다. 1990년 중반의 재난 이후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소수의 난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남한의 자선 기구들은 약 30만 명의 북한 난민들이 북중국과 만주의 산과 평원을 건너서 줄지어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질문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조에 대한 추정이며 이는 북한의 정치적, 지정학적 위기의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원조의 부족에 관해서 북한은 지난해 약 1.4~1.5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발표하였고 이 부족은 올해에 들어서서 더욱 심각해졌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의 절반 정도는 외국의 원조로 해결되었고 이는 주로 국민들에게 식량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에게 할당하여 식량지급 비율을 줄임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러한 최근의 좌절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식량의 부족은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실제로 북한의 실제적 붕괴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 세계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인 북한의 긴장과 분열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파멸적인 붕괴의 가능성은 언제나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정책의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보장정책의 형태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긴장을 개선하고 지역의 안정을 증대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끄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남한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국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국경을 넘는 상황을 방지하는 보장정책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

모리 치하루 (MORI Chiharu)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최근의 고이즈미 내각 출범과 더불어 그의 대북정책에 관한 질문을 갑자기 받게 되는 일이 많아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보도가 나왔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외무부장관의 경험도 없으며 외교에 관한 발언을 했던 적은 없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소신표명연설, 즉 국회에서 행했던 연설 등에 드러난 사항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동북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제창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데라다 주한 일본 대사께서 자리하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일본외무성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나카 신외무장관과 외무성관료 간의 대립이 격심한 상태이며 매스컴도 그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서울특파원으로서 일본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도쿄 본사에 있는 동료들과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관심은 즉 지금 외무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은 이 대립관계

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이슈에까지는 관심이 닿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하는 과정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일본에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가 반드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의 원천은 군사력에 있다 호언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군사력의 배치 상황을 두고 보아도 군사한계선에서 가까운 지점에 통상 전력을 다수 배치시켜 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정권의 아시아 전문가들, 즉 아시아의 교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방위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일본이 어떻게 공헌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가지 중요 핵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대북정책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1)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커다란 목표 (2)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한다는 안전보장 정책상의 이해 (3) 납치사건, 즉 북한 공작원이 일본인을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입니다.

둘째, 일본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확인할 수 있는 공헌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미동맹의 효율성을 높이며 일·한 간 안전보장 분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보장 분야의 안정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 1994년에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한·미와 함께 핵심멤버로서 KEDO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EDO의 테두리를 떠나서 일본, 한국,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일본이 북한에 지불할 자금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국교정상화에 이를 경우 식민지 시대의 청산으로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북한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가령 북한의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한국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추어, 희망하는 시기에 가능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북수교 교섭은 온갖 복잡한 문제를 포함한 교섭이며 독일과 영국이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것처럼 간단하게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일본은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주일미군에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안보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주로 일·미안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법률 등을 정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일, 하려는 일은 동북아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미동맹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본국내의 법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유사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일본도 공헌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본과 미국은 일·미안보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일본의 관련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이 공격당했을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무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본정부의 공식견해는 헌법상의 제약으로 일본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으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와 관련, 일본이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일본이 지금까지 해온 일, 하려는 일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권 발족 이래 일본과 한국 간에는 안전보장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가령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한국해군에 의한 공동 구조훈련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한국이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관계로 두 번째 훈련이 연기되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두 얼굴

존 라킨 (John Larkin)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 서울지국장

평양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그곳이 꾸며진 공간인 것을 압니다. 도시의 바깥을 보기 위해 북한 안내원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편집증이 있는 북한주민들이 사는, 매우 조용하고 무시무시한 도시가 평양입니다. 놀라운 점은 로봇과 자동차가 있어야 할 곳에 그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기꺼이 저에게 간섭하는지 그리고 극소수에게 말을 해보려 할 때 그들이 매우 따뜻하고 자발적이라는 사실로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차에 탔을 때, 마른 듯한 한 북한 노인은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때, 다른 여성은 저에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북한의 표본이라고 보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도시는 매우 깨끗하며 사람들은 자못 건강해 보이지만 이는 평양이 엘리트들의 도시여서 그들이 더욱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기에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는 또 하나의 징후는 내가 본 뒷마당의 채소들이었으며 이는 생계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교외의 한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굉장히 호기심 어린 채로 나를 둘러싸고 말을 걸어보려고 하던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도시에서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외곽으로 가는 버스에 탔을 때 나는 오래된 벤츠를 고치는 병사들의 사진을 찍

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를 저지하며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고 매우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북한체제의 편집증과 비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 볼 때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감시체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말을 하기 위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언뜻 보아서는 매우 환대하며 나에게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화가 깊숙이 진행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설을 방문하려는 저의 요구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정보 산업기술이 발전되기를 열망하였고 조선 컴퓨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북한은 이를 거품 자본주의가 그들의 낙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북한을 왕래하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과 함께 한국과의 소프트웨어 기술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싸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지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험대상이 될 만한 시장도 갖추지 못하고 전화·통신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북한 전체의 그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니셔티브와 개방에 관한 금기를 떨치지 않는 한 발전되지도 풍요롭지도 못할 것이며 그때까지 그러한 열망은 그저 몽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남·북한의 경제여건 및 전망

제이 솔로몬 (Jay Solomon)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서울지국장

궁금한 점은 남한의 경제와 1997년의 경제위기 회복의 능력이 북한의 재건에 지원을 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한 비판에 답하여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에 비교해 볼 때 남한의 국민들은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한국과 같이 일국의 경제가 붕괴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외부 강대국들은 자산이 파헤쳐지고 팔려지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입찰자에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경제위기의 한 요인은 일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외국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는 실제적인 공포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인종갈등시의 미국에서 발생했던 당시의 전국에 걸친 반일감정이 그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남한으로 유입된 해외투자의 양과 지난 30~40년간 폐쇄경제를 유지해 왔던 남한이 변화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1998년으로부터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은 실제로 파산된 반면에 현대그룹의 일부는 정부의 수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햇별정책에 대한 현대의 지원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라는 의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이 지연되는 개혁속도로 인해 국내외의 투자자들로부터 비판받는 주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GM과 대우,

그리고 현대전자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외국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외면할 것인지와 아마도 경제자체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은 지난 3~4주 전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 자동차 공장을 살펴보면 불과 몇 주전까지만 해도 노조 지도자는 미국의 진출에 극렬히 반대하였지만 이제는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니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미국이 실제로 얼마 만 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왜냐하면 전자 그리드는 교체되고 있고 산업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BB, Siemens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이미 북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다시 한번 미국이 거부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국제기구들이 경제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조직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치명적이고 흥미로운 다른 요인은 변화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상황이 낙관적이었던 반면 부시 행정부 이후 상황이 누그러졌으며 이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찾아 봐야 할 한 흐름은 부시 행정부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여질 때 반미감정이 더욱 심각해질 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이것은 아주 미묘한 이슈입니다. NMD 문제는 보잉사의 군사무기 조달에 대한 비판과도 유사하게 미국이 평화 이니셔티브에 앞서 자국의 방어적 이익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두려움과 무관하게도 한국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년은 한국의 경제개혁이 진전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이며 또한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안정시키고 북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이 중국식의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려 한다는 최근의 추측에 의하면 서구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김정일의 상하이 방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5월, Fila사 주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고 북한이 그러한 개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난달 EU의 사절단이 평양에서 돌아왔을 때, Javier Solana의 발언 중 하나는 알바니아가 북한과 같이 고립되고 후진적이지만 그러나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변화는 어느 누가 예측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북한이 세계의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 폐쇄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지적으로 많은 유럽 대사관들이 그곳에 문을 열고 있으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워싱턴에 있는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사절단이 북한의 경제개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개혁이 부드럽게 진행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 있으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곳에는 더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각

도날드 킅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 서울지국장)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는 한국 국내의 평화에 대한 논의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특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의 지위가 고양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국내적인 비판이 쏟아졌을 때, 당신이 편집자에게 어떻게 지지도가 100%가 아니고 60~70%조차 안 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했다면 당신은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통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증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사람들은 평화정착과정에 대한 전망이 작년 6월보다 밝지 못하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현실주의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은 여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들 중 하나는 한국에는 남·북한 간의 분단을 넘어선 모든 한국인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엄청난 지역적 분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분열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이 이러한 지역주의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첨예하게 표출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

든 종류의 투표나 여론조사의 현상에 존재하며 정치적 노선에 따라 자주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결국 누구를 믿고 이러한 의견의 차이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흥미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독자와 편집자들에게 전달하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이 이 주제를 복잡하고 밝혀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려할 만한 한 측면은 행정부의 대응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기에 그는 그 자신의 지위에 의한 것뿐 아니라 언론으로부터의 비판에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우리는 완벽한 개방성과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누렸던 파도와 같은 지지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은 점점더 비판에 민감해져 갔습니다. 지난 2~3년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또한 심각해지는 균열 또는 언론매체와의 충돌을 볼 수 있었고 이 와중에 정부는 3대 일간지인 중앙, 조선, 동아일보에 의해 매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들은 번갈아 가며 정부가 세제와 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노력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의 극심한 충돌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자들이 이러한 모든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충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특파원들의 매우 큰 도전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책에 대한 반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진행됨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내적인 평화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차기 대통령 선거는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III.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해외 언론인이 본 남북정상회담

국제언론인 원탁회의 결론

심재훈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전 서울지국장)

최근의 사태들은 북한이 경제위기와 체제 불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렵פות이 보이는 식량위기가 올해에 중국 국경 쪽으로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물결을 몰고 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을 연구함에 있어 북한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 드라이브에 대한 국내적 지지의 약화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검증과 상호주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평양의 정책 입안가들을 경색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 정부에 대한 압력에 따라, 북한 앞에 산적한 많은 어려움이 북한을 예전의 벼랑 끝 외교전술로 나아가 악명높은 ‘강탈외교’로 북한을 몰수도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화해의 과정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평화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고 방향설정을 하고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한반도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는 980여 회의 외침을 당하며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고 한 세기 전에는 나라를 잃는 우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2차대전 후에 남북이 갈리고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먼저 평화에 대한 보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6·25전쟁으로부터 50년간 그 아픔을 되새기는 대대적인 행사를 10일 앞두고 평화정착을 위한 남과 북의 만남은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요 어찌면 정상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은 되었습니다. 서둘지 말고 정상회담의 정례화, 경제교류의 확대, 문화, 사회, 군사회담 등의 교류와 신뢰 쌓기의 노력으로 2차대전에서 전쟁을 치렀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경제공동체와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실리추구를 교훈으로 하여 한반도에 경제공동체 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켜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튼튼한 민족국가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나 혼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숭한 전쟁과 상호간의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차라리 잊고 싶은 오욕의 역사라는 편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뉘었던 역사 일지라도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역사를 잘 설계해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 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한 세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고민으로 가득한 장이 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쯤 새로운 세기의 문을 열고 첫발을 내딛은 순간입니다. 그동안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찬 역사로 메꾸어 나가기 위해 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가 과거의 사실인 6·25에 대한 잘못을 끄집어내어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하여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손에게 한 세기 동안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각각의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 즉 남북간의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것을 모두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은 같되 방법론적인 차이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6·25에 대한 사실 규명과 사과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평화정착을 선언하고 훗날의 역사가에게 그 평가를 맡길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어느 것이 실리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의 평화, 남과 북의 평화, 동서 간의 평화, 여야 간의 평화, 의약분쟁에 대한 의약 간의 평화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부문에 대한 이익과 자신에 대한 지나친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양보와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보와 협력만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큰 흐름 앞에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이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길러야겠습니다.

또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해서 전 아시아의 평화체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비슷한 혼란과 전쟁의 역사를 종식시킨 유럽을 모델로 삼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벨기에나 스위스의 선택과 집중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남·북한의 비전을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가 간 민족 간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을 목표로 구성되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의 구축과정을 통해서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은 일본의 재무장과 나날이 증가하는 중국의 힘 속에서도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잘못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질곡을 해결하고,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사회·문화적인 한민족공동체의 부원을 앞당기게 할 것이고,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같은 민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는 북한에 대한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한반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제공하고 긴장완화를 통하여 막대한 군사비를 줄여서 GNP대비 군사비를 일본이나 중국 수준으로 절감하여,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미래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선진문화 창달 및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존경받는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북경제공동체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세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공동체를 일본, 중국과 함께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비전은 남북정상회담의 유지·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점진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과 북에 긴장이 고조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남과 북 양 정권의 문제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며, 동북아의 안정과 아시아공동체 구축의 주역으로서 30여 년이 지나 유럽 연합처럼 아시아 연합이 구성되었을 때 아시아 연합의 선도국으로서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김민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지난해 분단 55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진전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안보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사의 진운이며 민족사의 소명이었으며, 남과 북의 두 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과 평화와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의 번영·발전을 향한 일관된 통일철학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또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협력의 힘찬 기운을 넘치게 하였는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다. 민족사의 먼 장래에서 볼 때도 하나의 필연이며 시대적 소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특히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주변국가 모두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결과일 뿐 아니라 북한측의 이해와 믿음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이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정파도 그 어느 나라도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정의와 진리의 가치로서 확신되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였겠지만 지난해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여 평양을 다녀오면서 남과 북의 동포들이 평화와

사랑의 덕을 쌓으면 반드시 불신의 장벽을 씻고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지금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후속 회담으로 이어졌고 남북대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두어왔다. 남북간의 접촉빈도가 증대하고 접촉영역 또한 다양화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1년을 통해 남북관계는 과거의 대립·갈등 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대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역사의 큰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남북간에 트인 화해·협력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 각국이 과학정보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 속에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의 세계를 향해 협력하고 있는 이때 도도한 세계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일시 중단하거나 역행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역사의 흐름은 전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족의 주체가 되는 통일 역시 민족의 진운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속하는 일이다.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달려 민족발전의 우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역사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의 큰 희망을 안고 통일을 이룩해야만 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도 당장의 통일보다는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대통령께

서도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이며 통일을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립하고, 교류·협력 민족동질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 햇볕정책, 화해·협력 정책으로서 북한과의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의 변화가 목표로서 한반도의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인 목표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의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따른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북한측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가장 핵심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문제가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과 결단으로 나타난 남북공동선언을 우리가 착실히 실천하는 길이야말로 민족화해의 실현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는 여·야 정파는 물론 동과 서, 남과 북, 국내와 해외의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내외국민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초당적·초정파적, 범국민적·범민족적 조직체이며 의장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국내·외 각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말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과제

백낙환 (인제대학교 이사장)

작년 바로 1년 전의 역사적인 감격적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여 큰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로 삼아야 하며, 통일을 향한 출발점으로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 정부에 대해 반드시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들 중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그 당시와 상당히 달라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결코 본질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들이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할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비방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북한의 행동들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정부가 이러한 상

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는 공동선언에 서명한 이후 미전향 장기수까지 북한에 보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방문이나, 경의선 복구 시도, 대북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스포츠·문화 분야에서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현재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남·북한이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했어야 했는가 하는 점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여 년 동안 이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동질화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북한도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 상황이 형성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만 지나치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북한측은 남북화해와 평화에 냉소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남북 공동선언을 함께 한 만큼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다소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의 기초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구실과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이고 결국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국가보

안법의 개정,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교류도 제3국을 통한 우회적 방법보다는 남북간에 직접적인 교류와 접촉 형태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도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은 왜 외교적 문제, 남·북한 문제를 트집잡아 쟁점화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국내적인 정치적 대립과 외교문제는 서로 분리해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정치적 대결에 외교문제를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교문제, 특히 민족적 여망이 담긴 통일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초당적으로 손잡고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정몽준 (국회의원)

오늘 아침 통일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이홍구 장관님이 신문에 기고하신 칼럼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제는 통일과 정쟁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그 핵심이 크게 일치하고 있어서 이홍구 님의 칼럼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한국은 국내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로 광범위한 공감대가 대다수의 국민 사이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정치적 성향이 다른 여러 지도자와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일관성있게 정책기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바탕이 확실히 잠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적 합의로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한국 정치가 지닌 구조적 한계성과 후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국민적 합의나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데 훨씬 높은 능력을 보여온 만큼 통일의 문제도 이러한 한국 국내 정치의 또 다른 희생물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 때문도 아니며, 국민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행동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며 국민적 분열의 징후가 날로 짙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정치의 정

쟁으로부터 통일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매우 분명하고도 자심감 있게 대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되 확고한 국가안보와 방어태세를 철저히 준비한 뒤 이를 배경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오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자신감과 확고한 대북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든든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경험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북문제와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고 솔직히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접근에 있어 분명한 우선 순위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국가적인 현안과 의제들 사이에서 좋은 균형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야만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갈 것이고 그 결과 국민적 합의의 유도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작업들은 바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관계의 소강 상태가 가능한 한 조속히 해소되기를 기원하며 더욱 많은 관계 진전이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목표의 달성 방안

이종석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에서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당면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남·북한이 현재의 갈등 상태, 전쟁이 중단된 그러나 사실상 전쟁에 준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현재 상태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긴 했지만, 아마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이러한 평화문제를 가지고 남·북한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계산하자면 차기, 차차기 대통령도 통일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북한만큼 한국도 전쟁의 공포와 긴장의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남북관계가 위태롭게 진행될 경우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전쟁의 공포 자체를 확대 재생산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상황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일정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6·15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매워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보완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내가 이룩한 성과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업적들을 비판하고 폄하하며, 의미를 평가 절하한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참으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측면에는 정부의 책임도 큼니다. 국민적 합의기반 유도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패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도 역시 반성해야만 합니다. 남북관계의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일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를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로 유도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즈음은 권력자가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분열된 세력들이 각각 자기 시각에 따라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 남북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세워지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국내적으로 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론분열만을 초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의 정치적인 균열 구조가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이 정말로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당적 협력이라는 말의 공허한 메아리조차 남아 있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어져서는 정말 안 됩니다.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국민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며, 정치권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정치세력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비록 특정한 세력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에게는 손해는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모두가 동조하고 동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범국민적 합의 형성을 강조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결코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각각의 국내 정치세력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들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북한 국회회담을 개최함으로써 개별적인 수준과 해당 영역에 있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정치사회 세력들도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훌륭한 궁극적인 선의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필요한 선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입장을 갖고 있던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만큼은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우리 민족의 궁극적 선을 위해 사회구성원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북관계에서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간 별로 한 일이 없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지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건대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끝날 행사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정체되고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이나 북이 서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태로 남북관계가 과거 상태로 퇴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북한의 상선이 말썽을 일으키긴 했지만, 과거처럼 남북간의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되지도 않았습

니다. 더욱이 지금도 금강산에서는 남·북한 주민 수백 명이 함께 모여 토론을 벌이고 있고 수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비록 많은 굴곡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서 쌓여온 많은 일들은 축적되어 온 결과이지 결코 지체되거나 과거로 퇴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일시적인 지체는 있을 수 있어도 후퇴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성격상 지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지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체를 뚫고 가는 힘은 바로 범국민적인 합의기반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범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다음 정권을 누가 차지하던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는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수개월 동안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점은 남·북한 당국자들 간의 신뢰가 불안정하고 취약했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국자들 간의 신뢰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북한과 평화공존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공존이란 것은 나와 다른 북한, 북한과 다른 존재로서의 한국을 각자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들은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체제 변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평화공존을 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할 수는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주체는 북한의 지도층이고 북한 주민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평화공존을 원하는 내용은 상호 모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선택해야 할 내용이 평화라면,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지나치게 상대방 체제에 대한 특정한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상대방이 평화정착에 동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졌을 때 북한에 대해 보다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방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더 당당한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민족자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남북간의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더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코 민족자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들을 당당하게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 모든 정치세력들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그동안 해온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꼼꼼히 되돌아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및 과제

최학래 (한겨레신문사 사장)

특별수행원으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현직에 계신 위치가 매우 다양하고, 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감흥이나 청중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각자 다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적어도 평화에 관련된 내용들은 통일된 주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주적 해결의 원칙 하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 국제적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좌절이 있고 다소의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반성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주적의 개념이나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 남·북한 당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내부의 여야를 비롯하여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이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의 조그마한 평화의 씨앗이 큰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생각을 덧붙이면, 남북문제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으로 언급되고 있고, 한반도 통일이 다분히 정서적으로 평가되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북문제는 남쪽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정부, 그리고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와 정부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을 돌이켜 생각하면 이 두 정부와 국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들 간에 생존을 향한 치열한 투쟁과 각축을 벌여온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무력입니다. 무력은 곧 전쟁이고 우리는 실제로 1950년에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문제가 전쟁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끈질긴 어떤 다른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루한 대립과 대결의 시간을 보낸 이후, 2000년 6월에 6·15공동선언이라는 결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에서는 7·4남북공동선언이 남·북한의 권력자들에 의해 진행된 전술적인 위장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채 논란이 발생되고 있고, 국내에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언이 우리 역사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두 국가 간, 두 체제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우리가 고안해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현재에는 이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선언들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더이상의 전쟁이 없고 더 이상의 이별이 없는 상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문기자라는 특수한 입장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문제를 마지막으로 평가한다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이라는 점입니다.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성공사례로 과대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중요성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정치적인 시각을 통해서만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고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에만 집착한다면 현재의 야당이 향후 집권을 했을 때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대안들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상황들을 평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IV.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원탁회의

남북정상회담의 회고와 평가

1차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우근민지사님, 김우식총장님,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1년 전의 남북정상회담을 돌아보면서, 저는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우근민지사님과 김우식연세대학교총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동안의 상호 불신과 대립을 종식시키려는 강한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남·북한의 정상들은 두 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냉전의 마지막 유산인 한반도에서의 화해 증진과 평화적 공존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국민들의 가슴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으로 국제사회는 전례없는 사건을 환영하였습니다.

한국은 1945년까지 13세기 이상 동안 단일 국가였으며 한국 국민은 언제나 단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었을 때부터 통일은 한국 국민들에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여준 인내와 일관성의 결과였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과 협력하려는 북한의 적극적 사제, 한국과 미국의 튼튼한 안보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격려와 지원이 정상회담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8년 2월 취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포용정책을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즉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을 흡수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1998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잠수함 침투, 1999년의 서해상 해군의 교전 등과 같은 북한의 여러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을 공고히 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 베이징에서 <베를린 선언>이라고 알려진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화해협력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냉전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의 구체적 구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고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촉진시켜 남북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얻도록 애쓰는 동안, 선언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의 경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 까지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상회담의 성과를 진심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유엔 새천년 정상회담과 총회, 그리고 서울 아셈정상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서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특별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냉전시대의 한반도의 분단을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유일한 길은 은둔적인 북한으로 하여금 고립에서 탈피하여 개방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외교관계를 넓히고 다자간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수 차례에 걸쳐 우리의 우방국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러한 방향으로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으며 북한은 13개 서방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에 힘입어 북한은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이던 식량 부족 문제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이면 어떤 나라와도 외교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여 개방과 변화에 대한 강한 암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 대화의 재개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의 토론에서 이미 다루어졌지만 저는 국제 무대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7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안보 포럼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가입 이후 북한은 남북 외무장관회담을 열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작년 유엔총회에서는 남·북한의 공동 노력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통일>이라고 명명된 공동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다른 국제금융기구에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작년 8월 평양에서 테러에 관해 심도있게 논의한 이후 10월에는 “국제테러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는 북한이 독일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보여주지 않았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독일을 인상 깊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독일 외교관의 북한 내 자유로운 통행 보장, 비정부기구의 활동 허가, 외국 언론의 북한 방문을 허용,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 인권과 핵 비확산에 관한 지속적 논의 등과 같은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연합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서 북한은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 중단을 연장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 문제에 관해 유럽연합과 대화를 갖고 경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합의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

고 있습니다. 대표단의 교환 방문을 장려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구하면서 북한은 국제 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과 정책을 조율하고 둘째, 국제사회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국의 평화에 있어서 핵심이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부시 행정부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10년쯤 전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 보좌관, 그리고 국회의 고위 관리들과 만나 북한에 관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에 대하여 굳은 지지를 확인 받았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번 포럼에 대하여 성의있게 반응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삼자간 정책 조율의 틀 안에서 일본과 친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세 나라는 한·미·일 3자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통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의 평화노력과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긍정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유럽연합 대표단의 방북은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우리 정부의 노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외무장관회담을 통한 남북 대화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포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으며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였을 뿐이며 저는 우리가 목표를 곧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6·15공동선언에서 발표한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적절한 시기에 실현하겠다”고 한 약속들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이 조기에 성사되어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냉전의 흔적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기회에 맞서 한국은 굳은 마음가짐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지속적 평화정착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I .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II .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 기업의 시각에서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신세계질서의 도래와 한반도의 미래

로버트 스칼라피노 (Robert A. Scalapino)

UC Berkely대학 교수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세계의 모든 민족국가들은 서로 충돌하는 성격을 가진 다음 3가지의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하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이며,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nationalism), 나머지 하나는 공동체주의(communalism)이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정치 전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게서 국제주의적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세계적인 조직체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개별적 지역들은 각자의 차별적인 다자간 조직체들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유럽이 단연 앞서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외에는 ‘ASEAN+3’,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자회담’, 중국·러시아와 3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상하이 5’ 모임 등의 다자간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3자 그룹체, 4자 그룹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체들이 확산되어 있고 해당 조직체의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지역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만큼 강력한 권력과 권위를 가진 다자간 조직체는 아직 등

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UN의 행동이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UN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집단적 구성체들은 ‘행동체’가 아니라 ‘대화체’의 형태에 그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가 위기를 차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또는 결의가 위기를 차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충분한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반면 NATO나 한·미 군사안보조약, 미·일 군사안보조약 등과 같은 전통적 형태의 동맹체제들은 집행력이나 실행에 있어 분명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여타 국제기구들은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과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작업도 거의 21세기의 후반부가 되어야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제기구들 중 일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 역시 미래에 대한 예상일 뿐 필연적 결과로서의 내용이라고 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 다자간 기구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자간 기구들이 결코 양자간 관계들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국제사회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는 양자간 관계의 중요성이 약화되기보다는 더욱 중요해지고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세계적 세력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과거의 유럽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국과 중국간의 양자간 관계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거의 모든 현안들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지역 내 조화나 긴장, 간단히 말해 평화나 갈등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

· 일관계, 중·일관계, 미·러관계, 일·러관계, 중·러관계, 그리고 아시아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주요 4강들 간의 관계와 같이 다른 양자간 관계들도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중요한 양자간 관계는 단순히 주요 4강들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미 관계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국제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국제주의에 있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들 중의 하나가 ‘경제적 세계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국가의 국경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세계화는 기존의 경제적 관행들과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을 이미 구시대적 것으로 만들어 폐기시킨 상태이며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간에 모든 국가들의 경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고립주의나 고강도의 보호주의는 이제 더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게 되었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으로 전락해 버린 상태이다. 경쟁한다는 것은 이제 더이상 국가 내부의 개념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국만의 기술 혁신이나 생득적인 노동생산성에만 의존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심각한 고통이 따르지만 거대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국가의 국가경제들은 차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국제주의는 동시에 많은 국가들의 민족주의적 요구들과도 경쟁해야만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개념과 경향이 결코 최근에 발생한 정치적 현상만은 아니다. 근대 민족국가가 출현한 이후부터 민족주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부활은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통제 기능을 수행하던 이념이 그 능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결

집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주의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편적 국가로 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주의적 개념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일관계에 있어 주종적 개념의 양국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동반자의 양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어떠한 내용들과 연계되어 있든 간에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의 정치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국가들이 민족주의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비록 민족주의의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국제적인 일방주의에 대해 신뢰를 보내면서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국익’ 중심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전체 국민들을 염두에 둔다면 소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만 미국내 일부에서는 신고립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속도있는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의 혁명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한편 동시에 세계적인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중적 성격의 업무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국제적 사건에 개입하는 정도가 종종 지나치게 되면서 미국이 지쳐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민족주의의 부활이 부상하는 국제주의의 도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민족 국가의 주권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집단행동으로서 ‘특정 국가의 국내 정책에 대해 미국 등이 개입’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주의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만문제, 소말리아 문제, 세르비아에 대한 NATO 개입과 관련한 민족주의 논란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 문제는 21세기의 가장 큰 현안들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과연 인도주의라는 이유를 근거로 한 개입은 허용되어야만 하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과연 어떤 법칙과 어떤 제한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현재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집행할 국제기구의 존재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량학살이 자행되거나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관찰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무엇이 국내적 사건이며 무엇이 합법적인 지역적 사건인지 아니면 국제적 사건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수마트라 지역의 농부들이 매년 농사를 짓기 위해 대규모의 목초지를 태우고 산림을 벌목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오염이 발생한다면 이 사건은 국내 사건이라고 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지역적인 사건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 만약 대규모의 난민 유입과 같이 인간 삶의 문제가 관여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개별적인 민족 국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서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제3의 세력으로서 공동체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심각한 긴장이 팽배해 있는 이 시기에는 무수한 개인들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의미 있는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교적 힘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본주의나 사교 숭배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 강력한 힘을 가진 강화된 윤리의식은 전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공동체와 강력히 연결된 종교적 정체성이 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주의가 민족국가에 대해 위로부터의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면, 공동체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

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발전과 안보를 적절히 결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찾는 것과 같이, 현대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국제적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아마도 새롭게 독립한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욱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태일 것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고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만큼 확실한 지도력을 갖춘 강력하고도 신뢰할 만한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답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회의적이다.

아시아 지역의 근대적 지도국가로서 존재하던 일본은 최근 십 수년 동안 경제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경제회복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하다. 또한 일본은 조급하게 구성된 연립정권들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허약한 지도력의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새로운 인물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한 국내적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과연 많은 이들이 희망하고 있듯이 강력한 지도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한국 역시 3김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타이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다소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국 역시 모두가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도력의 문제가 취약한 편이다. 오직 싱가포르만이 안정성과 성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연 싱가포르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중국의 예가 증명해 주고 있듯이, 아시아 지역의 권위주의 체제 역시 유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성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탈린식 또는 마오쩌둥주의식의 강력한 권위주의

정치행태는 점진적으로 ‘권위주의적 다원주의(Authoritarian-pluralism)’ 형태의 정치체제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즉 정치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지만 경제는 사회주의식 시장경제체제의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생계가 불안한 농민에서부터 실업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도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패, 동서지역간 생활격차, 지도부의 교체 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념은 중국 국민들에게 더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 현안들은 반드시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져야만 한다. 집단지도체제가 일인지배체제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분산화가 진행되면서 제도화된 연방제도의 실현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고 그 범위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베트남은 미얀마의 경우처럼 비공산주의형 권위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유사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단지 북한만이 전통적인 공산주의형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 막 현대 세계와 접촉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변화는 시작 단계이지만 변화에 대한 압박은 매우 강력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재 상태를 염두에 둔다면 지역 내 거의 모든 국가들의 외교정책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내적 환경으로부터 매우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하겠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으로 인해 자신들이 추진하는 국내정책이나 외교정책 모두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욱 복잡하고도 어려운 정책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그 누구도 확신에 찬 상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가능성의 문제를 전제로 하고 또 계속되는 재실험을 진행한 이후에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의 범위들만이 고려되어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러한 현상들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문제에 대한 미래 예측을 실험하기 전에 현재 남·북한이 각자 갖고 있는 핵심적인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고 남북관계에 있어 최근 수 년 동안 발생되었던 현안들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비록 과거 권위주의 시절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근대화에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회로 손꼽히고 있다.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민주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한국에게 미국식 민주주의가 이식되어 졌다. 그 결과 그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의 정치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주화의 실험은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대체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신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을 ‘부국강병’시키겠다는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는 자신이 잘 알고 있던 일본식 경제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한국에 적용하였고 그 결과 1960년대 초반기부터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했고 재벌 기업들의 외화벌이와 수출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농업분야는 시장보호 속에서 상당 부분 근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보호주의와 수출주도 전략의 적절한 결합이 시도되어졌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전략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일본의 경제발전 전략으로부터 차용되어온 것으로서 당시 한국에게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도 유용한 적용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모두가 놀랄 정도로 성공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이 번영하게 되자 이제는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의 출현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차별적인 내용들을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정

치적 목소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우방인 미국으로부터도 민주화를 강요하는 압력이 한국 정부에게 가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이 동맹국이었던 남부 베트남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자 박정희 정권이 그동안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는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확고한 한·미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과 함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가 가까워 오면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지속시켜 왔던 권위주의적 정치질서는 근대 세계의 보편적 질서 추세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도 박정희 정권 이후의 전두환·노태우 정권들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크게 역행하기보다는 대체로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따라서 당시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고도의 경제성장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삼아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역량이 평화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

한국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최초로 진행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진영들이 크게 관심을 보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한국 사회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민주적 원칙들을 중시할 것이라고 매번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요소들에 더 익숙해져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더욱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파벌적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의가 다른 모든 정치적 현안들에 비해 우선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있어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요소들이 더욱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시기에 함께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도 여타 국가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궁극적으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체제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러한 정치불신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동안 지속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덕분이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성장이 수 년 동안 진행되어온 이후 한국은 현재 경제적 침체 국면에 직면해 있고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재발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이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김대중 정부는 IMF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2000년 GDP 성장률이 8.8%에 달하면서 한국 경제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1980년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가 취약한 상태에서 수출신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자 2001년의 GDP 예상 성장률도 크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2001년도 GDP 성장률은 전년도 성장률의 절반 정도인 약 4%에 근접한 형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 비판자들이 이러한 경제침체의 원인으로서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국내의 다양한 문제제기와 비판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남북관계 개선 등 지나치게 외교정책에 집착한 채 국내 경제문제를 소홀히 한 탓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민과 근로자 등 강력한 이해단체나 이익집단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요구와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출을 포함하여 무역규모의 급격한 위축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남북관계의 침체는 2001년 4월 26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게 참패를 안겨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2001년 중반인 현재까지 김대중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적 패턴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상황들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론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임기 내내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대북정책으로 소개한 ‘햇볕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다음 3가지의 핵심사안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 통일정책 배제 셋째, 화해·협력 등 남북 교류의 다양한 형태들의 적극 추진 등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3원칙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매우 심각한 만큼 특정한 변화가 시급히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판단과 결정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하여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한국은 단기간 내 물질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대였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의 진정한 속내가 북한체제의 전복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접촉을 재개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결국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합의,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간의 광범위한 교류가 시작된 것들이 예전과 달리 남북간에 오랜 협상 시간을 끌지 않고서도 가능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북한이 필요하기만 하다면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남북 대화나 접촉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하면서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역사를 간단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체제가 불투명한 국가인 북한의 핵심적 내용들을 구별해 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46년 초 소련이 젊은 김일성을 권좌에 앉힐 때 소련은 북한의 제도와 이념들을 소련의 것들로 채워나갈 경우 북한은 소련의 확실한 위성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스탈린주의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로 탄생되게 된다. 그리고 1948년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소련의 대북 영향력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젊은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대규모 고등교육의 실시, 적극적인 경제고문단 파견, 전략적 군사 자문 등의 형태로 소련은 북한에게 있어 핵심적인 주요한 외부의 영향력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이 담당해 왔던 역할들과 대비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공개된 러시아의 비밀문건들에 의하면 한국전쟁 과정에서 소련은 매우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과 김일성 정권을 구해 준 중국이 혈맹으로서 북한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56년과 1957년 사이 조선노동당 내부에서는 국내정치 파벌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친소파와 연안파들이 숙청되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장악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때부터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더욱이 북한은 1960년대에는 중·소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가자 김일성은 중·소 간의 갈등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독립적이고도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추구해 나갔다.

한동안 북한의 정치구조는 김일성 주석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더욱이 김일성을 신봉하는 이들이 사회의 대다수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러한 일인 지배의 정치구조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리고 북한의 거대한 군사조직 또한 김일성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지만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즉각적인 권력 세습

을 추진하는 기간이었던 초기 4년간은 이러한 기존의 제도적 구조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기도 했다.

북한은 출범 초기부터 지도자와 주위의 많은 인물들에 의해 혁명적 사회로 규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특징은 전통주의적 요소들로 채워져 있다 하겠다. 가능한 한 고립을 극대화하며 과거 절대주의 왕조적 내용 및 경향에 근거하여 지도자를 신성시하며, 김정일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역할을 수 년 동안 현장 실습함으로써 권력세습을 진행해 온 점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근대화의 일부 내용들을 수용한 것도 사실이다. 대중들에 대한 사상주입과 강도 높은 사상 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 동원의 시행, 그리고 ‘선군 정치’와 같이 군사부문의 선진화를 강조한 것과 같은 내용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군사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들이 높이 평가되었고, 군수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반 중공업까지 발전시키는 기술의 전후방 효과를 이용한 기술확산을 의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분명 전통적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었다. 단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중에서 필요한 요소들만을 편의적으로 선별하여 근대적 형태로 왜곡해서 적용시켰을 뿐이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의 생일은 현재 ‘태양일’로 기념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전쟁 과정에서 기간산업의 대부분이 파괴된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관료들이 각자 측정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통적으로 19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1인당 GDP가 한국의 1인당 GDP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제 상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은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 등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와 공산주의 진영의 해체는 매우 싼 값의 특혜 받은 가격으로 에너지와 기초 생필품들을 수입하던 북한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더욱이 정기적으로 재발되는 홍수와 가뭄 등 수 년 간 계속된 기상 재해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최악의 상황으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소련식 경제전략의 본질적 취약성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구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크게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하여 확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확보한 자료들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성장 추이를 분석하는 외부 관찰자들의 연구 내용은 통일 되지 못하고 매우 다양하며 어느 것이 정확한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한국은행은 1990년부터 1998년 사이의 북한 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1999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서 1999년에는 전년대비 6.8% 성장, 2000년에는 전년대비 6.2%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들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들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의 공통점은 북한 내부의 식량부족과 기근, 연료부족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북한은 농작물 흉작으로 인해 향후 1년간 18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아야 한다고 추정했다. 과거 한국은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북한에 지급했었다. 2001년 4월 북한은 한국에게 비료를 지원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서 모 내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만 톤의 비료를 신속히 제공해 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2001년 1/4분기 동안 진행된 남북간 교역은 총 7,66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1년 전과 비슷한 교역 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이 중 가공무역은 2,430만 달러에 이르렀고 일반의약품·식량·의류 등의 대북 원조를 포함

한 비상업용 교역이 4,320만 달러 어치에 달했다. 꽤 중견기업에 속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의 값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북한에서 위탁가공 교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사업은 현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 평양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사업, 그리고 개성산업공단 건설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고 매달 현대가 금강산관광 이용료로 북한에 지불하는 1,200만 달러의 지나친 부담 때문에 금강산 관광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대가 추진 중인 대북 사업들은 불과 1~2년 전과 달리 한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비록 이러한 양상이 현대를 통해 공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현재 대북 경제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 대부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북 경제교류에 있어서 사업과 인류애적 활동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해결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4개 합의서를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협 관련 4개 합의서에서는 북한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이윤의 본국 송환을 인정하고 이중과세 방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만약 남·북한이 모두 4개의 합의안을 비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될 경우 이들 합의들은 북한에게 한국의 대북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01년 4월 초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 3개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과 주변의 측근 인사들이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김정일은 중국을 두 차례 방문했는데 특히 2001년 1월의 두 번째 방문에서는 김정일이 중국 상해의 증권거래소와 첨단기술센터 등을 방문했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명확히 입증해 주는 부분이다. 2001년 5월 초 EU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EU 대표단 간에 나는 대화의 내용 또한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변화 움직임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구소련과 다른 동구유럽 국가들의 정치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구시대적 용어를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시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지만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몇 개의 IT 합작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변화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진행 사례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부응하여 남북간 문화교류사업들도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9월 호주에서 개최된 시드니올림픽 게임에서는 남·북한 국가 대표들이 한반도 깃발을 앞세우고 개회식에 함께 입장하는가 하면 음악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들의 교류사업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남한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자들이 북한의 상대역인 직총 대표들과 금강산에서 비정부 민간단체(NGO)의 대표 자격으로 3차례나 만나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상호 교환방문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3차례나 진행되었고 상호 서신교환도 한 차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전략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이 처한 난국적인 상황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북·미 간 관계 개선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한 관계 발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당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한반도 국민들의 자주적이고도 공통된 노력을 통해 해결되어져

야 한다는 점에 남북 정상들이 동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간의 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서로 주장해 온 통일방안 간의 차별성을 크게 해소하였다. 그리고 남북 정상들은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북이산가족들의 상호 교환방문 및 경제협력과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개최 문제에도 합의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안보 영역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는데 바로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간 제주도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는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금강산에서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이산가족의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하고 이를 세 차례나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의 제3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북·미 공동선언을 2000년 10월 12일에 발표했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공식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북·미 간에 북한 미사일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합의가 곧 진행되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결에 대한 보상문제가 북·미 간에 합의되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진전은 보지 못했다. 북한에게 있어 미사일 판매는 외화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북한은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차관의 도입을 포함하여 경제적 보상 이외의 보상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테러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고 IMF와 기타 국제기구 및 조

직들과의 접촉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받으며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우선 진행한다는 북한의 열망은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달에 심각한 상황 악화가 발생하였다. 2001년 3월 초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는 대북 접근에 있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을 포함하여 김대중 정부와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었다. 그리고 한·미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하루 전 파월 미 국무장관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대북 정책들이 한·미 간의 협조 아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기대가 실현될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잠시후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찬사를 보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는 의혹에 찬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부시 행정부 하의 대북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미국의 대북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긍정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인 성과 측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했고 한·미 양국 간의 협조 측면을 부각시켰다. 반면,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북한의 방송 매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거듭 주장했다. 또 북한 중앙방송은 “우리는 전쟁이나 대화 모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마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간의 정치 전략적 관계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북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시 정부에 대한 간접적 압력 수단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책적으로 이용하

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진행해 온 대북 포용정책을 다시 선택하도록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정부 내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부시 행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라는 신호를 한국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취임하자 남북간에 예정되어 있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북한측의 요구로 연기되었으며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파견하기로 한 합의도 무산되어 버렸으며 또 다른 남북 적십자회담도 취소되었고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 도로 복구를 위한 비무장지대 공사에 대한 남·북한 군사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김정일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서울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교류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거나 발전되어 가는 반면 남북의 정치 전략적 관계, 또는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들은 북·미관계의 향후 진전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곧 완료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200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부시 후보가 강조한 ‘검증’과 ‘상호주의’의 내용들을 일정 부분 진행시키겠지만 대체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분간은 미국이 북한을 소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이 아시아 개발은행 모임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조차 미국이 저지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범을 중지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주기로 북한과 합의한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이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다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미 기본합의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수로 건설 공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불

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최근에 북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경수로 건설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면 경수로 건설 지연의 원인이 미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경수로를 작동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기 송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북한 지역에 언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한편 북한을 방문한 EU 대표단에게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유예가 최소한 2003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2003년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간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비록 한국 내 반미 감정이 일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간의 동맹체제는 확고하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현재 한국에게 있어 미국은 신뢰할 만한 상대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수 차례 진행된 소위 군사부문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은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 축소와 재배치 정책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현재의 해외주둔 미군과 관련하여 큰 변화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지역의 안보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이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들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주의적 측면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며 적어도 한국과 기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국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 이러한 국제적 요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 간의 쌍무적인 양자간 관계는 남·북한에게 개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미·중 간

관계의 긴장이 매우 고조된다면 ‘4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와 관련된 기존의 협력체제들도 영향을 받게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중·미관계가 부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의 ‘완충지대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부정적인 대미 정책을 추진하도록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 고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중 수교를 진행했던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과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북·중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중 양국이 자신들의 관계를 과거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 진행해 왔고 상당한 성공적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위기 과정, 그리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수립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의 지원을 받았고 그 형태나 규모도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그동안 반복되어 강조되어온 순치관계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국가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을 시기를 놓친 때늦은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개혁은 아주 터무니없는 기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은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다소 불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이 한·중관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4강들 중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와 유용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자신이 그동안 담당했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역사적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위

상을 가능한 한 강화하면서 지속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의 양국관계 또한 한반도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기타 정치적 관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과거 역사의 교훈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에 놓여 있다. 일본의 국정교과서 수정 파문과 관련하여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이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몰역사적인 발언이나 신사참배와 같은 친 군국주의적 성향의 행동들은 중국의 분노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8년 처음으로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군대가 대만해협에서까지 군사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이등회 대만 총통의 일본 방문을 허용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당시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중국은 부상하는 강대국인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비록 해결해야 할 다양한 국내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지역 내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일 간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일 간의 향후 관계는 미묘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은 한반도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협의체나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대일 강경노선을 지속하는 데 유리한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북·일 수교협상은 수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때로는 성사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 있는 진전된 결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구체적 성과물들은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에서 보면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태평양 전쟁기간 동안 자행된 착취와 만행에 대한 보상문제, 일본측에서 보면 북한에 의

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들의 신변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증 통과 문제는 남·북한 모두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수 우익적인 행동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 시각들은 남·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안들 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회복된 한·일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비록 KEDO의 지원에 일본이 주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한·미·일 3국의 대화채널에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은 미국·중국과 달리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불가피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일관계는 일본에게 있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미·일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체제가 튼튼하게 유지되고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간다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있어 일본의 향후 위상은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 형성에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일본은 자신의 이익을 일정 부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있어 잠재적 중요성을 가진 네 번째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재 추진 중인 전략은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서 러시아 연방을 재건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푸틴 대통령은 유로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NATO가 동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러시아는 서구 유럽과의 관계 회복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및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TMD와 NMD

와 같은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다. 비록 러시아가 국내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현안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대외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형성되어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순전히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견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 ‘단독주의’, ‘주변의 주권국가들의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 행위들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들을 방문했고, 또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성 발언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동맹이 갖고 있는 심각한 단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념적 연대가 취약해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갈 경우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또한 약화되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스 및 석유와 같은 주요 생산품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각 지역으로 통하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벌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상이 중국과 러시아 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구는 많아야 800만 명 정도 된다. 반면 중국의 남쪽 지역에는 약 13억 정도의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는 인구상의 상당한 불비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만큼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를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다. 2001년 4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북한 군사무기의 근대화와 군대 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군사협정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되었다. 북한의 에너지 난을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시설 건설에 대한 지원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북한 연결과 관련한 새로운 수송체계 건설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졌다. 동시에 러시아 지도부는 북·러 간 군사협정으로 인해 한·러관계가 결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한·러 양국 간의 수교로 인해 야기되기 시작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깊은 불신이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러시아 공식 방문을 통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러관계가 상당히 긍정적 형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개혁 추진과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촉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과연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 하겠다.

한편 러·일 양국관계는 남쿠릴 열도에 대한 영토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영토 관할권에 대한 양국 간 합의와 함께 4개 섬 중에서 2개 섬만을 되돌려 주겠다는 흐루시초프의 초기 선언에 근거하여 2개 섬만을 일본에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새 수상인 주니치로 고이즈미는 일본이 4개의 섬 모두를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만약 러·일 양국이 공식적인 평화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러·일 양국관계는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경제·문화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정치·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도 급진전되기가 어려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동해와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 중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혜의 경제지대(NET)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풍부한 자원, 노동, 기술, 자본의 잠재적인 결합 가능성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수 년 동안 한반도 주변 4강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당할 정도의 협력을 그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즉 주변 4강들 중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공통된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주변 4강들은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호응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측면들을 수용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개혁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개입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국제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기를 모두가 희망했다. 그리고 북한을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들 4강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서방국가들은 물론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상당수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새롭게 수립한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다.

만약 핵심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지속되고 향후 미국의 정책들이 현재 상태로 조심스럽게 지속될 수만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들 간의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주변 4강과의 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들은 결코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자신의 제한된 외교적 자원으로 인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 협상력은 자신의 군사적 위협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적 협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진행될 북한의 외교협상에서도 철수 전략이나 요지부동의 전략 등이 여전히 북한에 의해 가장 주요하게 사용될 외교적 전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체제붕괴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취약한 국가구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위협스럽게 비틀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개혁도 너무나 의미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그 시기도 너무나 늦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시기에 북한 엘리트들 간의 내부적 갈등이 발생되고 반복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이러한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불확실하며 과연 북한 내부의 이러한 갈등이 북한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전쟁을 재발할 가능성도 검토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석에 있어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살이 아니라, 스스로 생존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쟁의 궁극적 결과가 어떠한 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결국 매우 불확실한 형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스스로 조금씩 진화해 가는 과정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설득력을 가지는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이 시나리오가 한반도의 다른 주요한 핵심적 행위자인 한국과 미국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

이 높은 경우가 하겠다.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마지막 현안이 남아있다. 그것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신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채택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거나 전쟁과 같은 갈등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화의 방법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이건 간에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적 운명이며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이 독립된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외교적 방안들은 대체로 3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을 통해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국인들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최대한 고립된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의 주요 강대국들의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 어느 정도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정책은 더이상 의미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며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태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종종 사용되어온 정책으로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동등하면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함께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편중되지 않는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두에게 균형 잡힌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들이 경쟁관계의 다른 강대국이 한반도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체제와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데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그동안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 정책은 한국의 방위력을 확고히 해줄 수 있는 안보적 집행력을 가진 국가이면서도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에 대해서는 비적대적인 국가로부터 한국이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추구해 오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두 번째 방안과 세 번째 방안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미 간의 안보동맹관계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4강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들이 바로 두 번째 방안과 세 번째 방안을 결합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결합에 동의하고 다른 주변 강대국들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결합 방안은 향후에도 일정한 형태로 발전되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한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 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통일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발언은 이와 상이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국의 강력한 위상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을 더욱 강력히 제기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압록강에 미군이 출현하자 한국전에 즉각 참전했던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기·조건들과 관련하여 통일 당시의 상태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안전과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해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 있어 형성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즉 주요 강대국들 간의 양자간 관계와 다자간 관계 또한 주요

한 기능들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건대 오늘날 국제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 및 주요 강대국들 간 관계의 유동성은 남북관계 및 남·북한과 주요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외교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두 개의 측면들 간에는 강력한 상호연관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겠다. 남·북한 중 적어도 한쪽은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적응체계를 가지고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포용정책을 수용하기를 희망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협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을 북한에 적용시킬 수가 있으며 북한이 국내에 산적한 현안이나 대외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채택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합의한 모든 합의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적절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인내하고 점진적 변화를 수용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한반도 통일의 세 가지 시나리오

이노구치 타카시 (INOGUCHI Takashi)
일본, 도쿄대학

1.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한반도에는 일종의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했다. 소련은 한반도의 북쪽 반을 점령한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남쪽 반을 점령했다. 곧이어 미국과 소련은 남북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개별적인 공화국들을 각각 별도로 수립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시민전쟁이면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적 전쟁인 한국전쟁은 3년여 동안 한반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¹⁾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은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이 이끄는 반공산주의적 친미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한반도 남쪽에서 일으킨 내전이라는 점에서 시민전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반체제의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들 남쪽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무력침공의 구실로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무력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국가 간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

1)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Westview Press, 1984);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97).

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무력 침략하기 전에 미국은 자신의 반공 방어선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대체적으로 분명한 형태의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냈었다는 점이 관심을 끈다. 반면 그동안 비밀문서의 공개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와 같이 스탈린 치하의 소련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을 무력 침공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되고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 만에 극히 불리한 전세에 놓이게 되었고 한반도의 가장 남동부 일부로 내몰리는 형국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국제연합군이 보강되었고 북한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 지역에서 실시한 기습상륙작전이 대대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북한군은 북한의 최고 북단지역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고 한국전쟁의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게 된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을 주창하고 있었고 국제연합군은 현재 중국의 동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주요 군사지역에 대해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던 중국의 전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 대한 핵 폭탄 투하를 요구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에 군사 개입하게 만들었고, 결국 국제연합군은 상당한 남쪽 지역으로까지 밀려나게 된다. 그리고 양쪽 간의 전선은 한동안 정체되게 된다. 그리고 3여 년이 지난 이후 마침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현재의 휴전선을 기준으로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거의 반세기의 시간이 흘렀다. 세계적인 냉전이 끝난 지도 1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미래는 한반도 문제를 전망을 관찰자들의 시각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진행된 현재 한국의 통일정책 내용은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초래된 한국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작되었다.²⁾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던 민주적 신임이 집권을

가능케 했으며 미국과 IMF의 적극적 지지도 한몫을 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한편으로는 ‘비문명적’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종류의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기존의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 접근하던 방식들과는 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진전을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 비록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전통적 정책노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한국 국내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즉각적이고도 급격하게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 활발한 상호 교류가 급진적인 관계 개선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대략 2015년 경이 되어서야 한반도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³⁾ 나는 다음과 같은 시각들을 중심으로 2015년경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를 3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가중심주의적 인식태도에 기반한 웨스트팔리아(Westphalis)형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인식태도에 기반한 필라델피아(Philadelphia)형 시나리오이다. 세 번째는 후기 식민주의적 인식태도에 기반한 반유토피아적(anti-Utopian) 시나리오이다.⁴⁾

-
- 2) Leon Sigal, Richard Ullman and Jack Snyder, eds., *Disarming Strang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 3) Hideshi Takesada, *Namboku taiwa no ikue [Prospects for the South-North Korean Dialogue]* (Tokyo: Kokyoseisaku chosakai, 2000).
- 4) Kent Calder, “A New Phase of Northeast Asia.” *Foreign Affairs* (2001 Winter).

2. 웨스트팔리아형 시나리오

웨스트팔리아형 시나리오는 국가 중심적인 내용이며, 전쟁과 외교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⁵⁾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즉각적인 붕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심각한 기아와 식량난, 에너지난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주장들이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이들 주장과 달리 북한 정권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생존해 있다.⁶⁾ 더욱이 북한은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경제 제재와 준군사적인 봉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4년에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도출해 내기도 했다. 또 북한은 그동안 세계 주요 강대국들과 국제조직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식량과 에너지들을 지원받으면서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최악의 상황들을 잘 모면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과 여타 지역의 국가 다수들과 외교적 관계를 새롭게 체결하면서 국제적인 고립도 일정 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관리들에 의하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 말 무렵에 북한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과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은 푹푹하고 강하며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도 적절히 극복해 나가면서 체제를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들이

5) Takashi Inoguchi, "Peering into the Future by Looking Back: the Westphalian, Philadelphian and Anti-Utopian Paradigm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 Issue 2 (1999 Summer), pp. 173-191; Bruce Russett,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New York: Norton, 2001).

6) Northeast Asia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0).

극적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북한은 독자적이고도 독립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안보정책이란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과 현재 국가체제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북한 주민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⁷⁾

한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민주적 신뢰성과 경제적 상황들을 염두에 둘 때 향후 통일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해체되거나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초래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적인 협상 유발책과 유인체제를 적절히 갖춘 상태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갖고 있는 장기 계획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판단된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둘째,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었다. 셋째, 남북을 잇는 철도 및 도로의 복구작업과 연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이러한 과정들이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곧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한반도 통일이 이미 그 과정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장애물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왔다. 북한이 그동안 존재해 왔던 북방 한계선을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새롭게 변경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게 되자 한국의 해군 함정들이 즉각 출동하여 북한 함정들을 침몰시키고 한국 해역에서 쫓아낸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Kent Calder, "A New Phase of Northeast Asia," *Foreign Affairs* (2001 Winter).

한국도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안보정책도 북한의 안보정책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인 안보 정책의 일면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로 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있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탄도 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 조약: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의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에 맞추어 ABM 조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관계가 다소 어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ABM 조약의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들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플루토늄 제공과 유라시아 대륙 열차와의 연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설치 등을 통한 천연자원 확보 등과 같은 한·러 양국 간의 현안들에 대해 흥미로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⁸⁾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연되고 있던 일부 현안들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형태로 해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300km의 미사일 개발을 요구했고, 결국 자신의 주장을 협상에 관철시켰다.

웨스트팔리아형 시나리오는 남북간의 소규모의 경제적 교류와 비정부 간 접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이를 통해 양자간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8) Henry Rowen, ed., *Behind East Asian Growth: The Political and Social Foundations of Prosperity* (London: Routledge, 1998).

진행되는 외교적 행위들이 웨스트팔리아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치적 관계들이 전개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3. 필라델피아형 시나리오

여기서 언급하는 필라델피아형 시나리오는 다음 3가지 요소들 간의 혼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연방주의, 경제적 상호의존 또는 통합, 그리고 민주적 평화가 그것이다.⁹⁾ 필라델피아형 시나리오는 상이한 두 개 체제의 점진적 통합과 관련된 3개의 메커니즘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인 연방주의의 개념은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개념이다. 그러나 연방화의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연방제안을 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상당한 주목을 끌기도 했다. 물론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 통일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그 당시 한반도 전체를 전제로 한 안보 환경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미래의 향방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한 미군의 존재와 역할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한 작전 형태의 임무에만 국한되어 진행된다면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북한이 언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또는 통합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¹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도에 들어와서야 정치체제

9) Manus Midlarsky, *The Evolution of Inequality: War, State Survival and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10) Victo Cha, "Japans Grand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Optimistic Realism,"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 No. 2 (2000 November), pp. 249-274.

는 공산주의 통치형태를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화한다는 중국식 근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의 이러한 관심 표명이 2001년 초에 있었던 중국의 상해와 북경 방문 당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개발프로그램은(UNDP) 두만강 입구의 공동경제개발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행위자들을 함께 연결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환경, 특히 북·미관계,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북·일관계가 원만한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 허용이 특히 한국과 인접한 동북 방향의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마저 주사업자인 현대에게 큰 재정적자를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이다.

휴전선을 통과하는 경의선 철도의 재건과 도로 건설 사업은 그 동안 다소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군부는 이 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물론이고 한국의 철도망이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까지 철도로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¹¹⁾ 그러나 철도 연결 사업이 얼마 만큼 진행될 수 있으며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과연 진행될 수 있고 또 심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철도가 연결되고,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의 철도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자신의 폐쇄적인 정책노선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현격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일부의 사람들은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의 경제가 자본주의적 논리와 관행들을 북한에 투영시키게 될 경우 비록 북한의 정치체제는 공산주

11) Moon Chung-in,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summit: assessments and prospects," *East Asia Review*, Vol. 12, No. 4 (2000). p. 4.

의적 내용을 유지하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경제만큼은 자본주의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법칙들과 논리들이 북한의 남포, 개성, 신의주 등의 산업단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들도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상호작용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적 관계로 대표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레소토(Lesotho)와 보츠와나(Botswana)와 같은 국가들과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이다. 전자의 경우는 비록 중국의 ‘1국가 정책’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게 직접투자를 진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인들은 중국 본토에 자신의 기업 공장들과 가게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 반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의 가난한 국가의 근로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있는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도록 허용되는 형태인데 주변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변 국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염두에 둔다면 남포와 신의주의 경우에는 한국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개성은 서울과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처럼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수 년 이상의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소 성공적인 경제 통합의 경우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1978년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과 근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이후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적 통합이 실제로 진행된 것은 그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 정권은 북한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 정부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체제 전복적인 반체제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한,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대규모 기간산업들을 건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소요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고 또 낮은 임금의 인력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형태의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도 있다. 물론 진정한 상호간의 신뢰가 일단 구축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경제 통합을 선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힘들다면 필라델피아형 시나리오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민주적 평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북한이 공산주의 이념과 철학적 사고에 집착하고 있는 한 남북간의 민주적 평화를 실현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한반도에 대해서도 민주적 평화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예컨대 2,000달러 이상으로 국가가 부유하게 될 경우, 다른 조건들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움직여 나갈 것이라는 오래된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면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말하자면 최근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실이 중국으로 하여금 민주적 전환기를 향해 이동하도록 만들었다며, 2000년 이후 15년 내지 25년 사이에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민주화를 진행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 중국의 대다수 농민들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진행된 문화혁명 기간 이후 준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국영 농장들도 지난 20여 년 동안 아주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히 사유화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싱가포르만큼 발전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지

12) Kim Sung-han, "The ROK-DPRK-US triangular relationship: its structure and prospects," paper on line, p. 1.

만 중국이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공산주의 지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중국식 근대화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점이 필라델피아형 시나리오가 보다 유효한 내용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예상케 하고 있다. 결국 북한도 이러한 경험에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민주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민주적 정권이 일단 민주주의적 요소들에 의해 포위되게 되면 비민주적 정권은 그동안 지속해 온 비민주적 요소들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민주화 전환기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한의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인 진화과정 등을 염두에 둘 때 민주적 평화 자체를 민주적 북한과 민주적 한국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반 유토피아적 시나리오

이 논문에서 반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3가지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실패한 국가, 둘째는 파산한 경제, 셋째는 국제적 취약성 등이 그 내용이다. 1990년대 중반에 전개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이 시나리오에 근접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거의 파산 상태에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대규모의 기아가 발생되고 있었다. 외화는 절대 부족했고 북한의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에너지

13) Russell Ong, "North Korea's enduring importance to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the Post-Cold War er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8, No. 1 (2000), p. 59.

의 절대부족 문제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모든 권력은 1994년에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이후 권력세습에 성공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국가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아주 비밀스럽고도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 북한도 독재자를 몰아내고 독재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북한 내 잠재적인 불만세력들이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채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편 미국이 경제봉쇄와 압박외교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강요해 나갈 수도 있을 만큼 북한은 국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합의하게 된다. 즉 북한은 자신의 핵 시설 및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핵발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중유와 경수로 원자로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기타 생필품들도 제공되어 졌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지원은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 발생한 2개의 사건이 이러한 양상을 급변시켰다. 1998년 8월 북한은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그 해 가을 한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IMF에 유동성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북한이 여전히 활동력을 갖고 있으며,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게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 유동성 위기는 국제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제사회는 IMF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핵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순응적인 북한의 태도를 유도해 내기 위해 소위 페리 프로세스라는 좀더 큰 당근을 북한에게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게 되

면서 2000년도에는 북·미 간 양국 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의 알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 사이에 플로리다주 투표 개표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에 미국 정상으로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최고의 역사적 사건을 만들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실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새롭게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와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야심을 의심하고 있으며 북한의 언행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페리 프로세스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매우 낮은 단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 있어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만큼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과 포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며 오히려 1994년 북·미 양국 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서마저 그 내용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동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 하의 미국 정부는 북한을 상대할 때에는 당근과 채찍처럼 봉쇄정책과 포용정책을 적절히 섞어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북한도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동맹국들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긍정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듯하다.

5. 결 론

그동안 한반도 통일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행위들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웨스트팔리아형, 필라델피아형,

반유토피아적 시나리오 등으로 크게 3종류로 구분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지 시나리오의 특징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웨스트팔리아형 시나리오가 다른 두 가지의 경우에 비해 보다 실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⁴⁾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들을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결코 한 가지 형태에만 시선을 고정하거나 집착해서 설명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진정한 통일, 보다 효율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3가지의 견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종합적인 시각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파월 미 국무장관은 외교관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남북간의 대화가 분명히 긍정적인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mbassy of the USA, “Backgrounder,” 01-01a, p. 8.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한반도 평화안보와 중국의 역할

장 원링 (Yunling Zhang)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장

1. 서론

2000년 6월 15일에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남북간의 대립과 적대를 종결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공헌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서광을 비춰주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의 굴레에서 한반도가 탈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고 생각될 정도였다.¹⁾

남북정상회담이 초래한 긍정적 결과는 한반도 주변의 4강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들을 신속히 재조정했던 것과 같이 북한과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적 관계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신속히 개선되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신뢰할 만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과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변화에 대해 항상 지대한 관심을 쏟아오고 있다. 중국은 남북간의

1)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January 31, 2001, p. 6.

관계 개선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절대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와 긍정적이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축에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 가장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기반은 아직도 확실히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반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가장 걱정스러운 요인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만약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방향을 잡아갈 경우엔 한반도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도 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도 우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로 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동안보의 구조는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해관계와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공동의 노력을 함께 진행해 나갈 때만이 제대로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만 할 때이다.

2.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한반도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냉전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냉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냉전이 국제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대립은 즉각 종료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는 냉전적인 적대와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남·북한은 그동안 반세기 이상의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양 체제 간의 차별성이 지나치게 크게 벌어져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인내와 노력,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최종적인 통일을 향한 점진적인 접근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신뢰할 만한 진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같은 길을 가고 서로 동의한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통일을 향한 첫걸음은 통일의 당사자들끼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환과 교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민족화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현재 각자가 갖고 있는 기존 체제들 간의 차별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체제의 존재적 가치들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뢰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구축될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진행해 온 노력들과 역사적 경험들을 살펴보면 국제적 상황에 의한 제약적 요인들은 차치하더라도 남북간의 깊은 불신이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남북대화가 별다른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남북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수준의 남북대화는 결국에 가서는 중단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예컨대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북한은 한·미 간의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목적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해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6월의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주요 원칙들은 미래의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될 방향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첫째,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 둘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 셋째,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넷째,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상기 합의 사항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고 개선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내부적 통합은 긴밀한 경제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에게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다. 북한에게 한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잠재적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표면적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이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시켜 줄 협력자가 되어야만 한다.

민족화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할 때, 남·북한은 국경을 초월하여 협력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해야 하며, 또 이러한 조직체 구성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제도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인지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공통된 제도의 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정치적 맥락, 그리고 국제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한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들은 남북간의 문제와 국제적 문제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남북화해, 이산가족 문제, 남북경제협력의 문제들은 남북간의 문제에 해당되며, 대량과괴무기,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 주한미군의 미래 위상 등의 문제는 국제적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²⁾

한반도의 평화는 국제적인 동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특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진정한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의 결과였듯이, 한반도의 평화문제 역시 냉전의 유산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국제적 냉전이 만들어낸 한국전쟁의 유산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했던 4개국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비록 남·북한의 정상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족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평화협정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짓는 핵심적 사안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³⁾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간에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상당한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부시 행정부가 과연 어떤 종류의 대북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⁴⁾ 이는 탈냉전

2) 이는 부시 행정부의 새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 장관이 2001년 1월 17일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3) Russell Ong, *op. cit.*, p. 56.

4) Gao Ileng, “The Korean Peninsula is moving toward historical detent,” *Yellow book*

시기에도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자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과 같이 세계 전략적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들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거나 북한을 봉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국은 인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진정한 평화과정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최근 EU를 비롯하여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들을 수립했거나 수립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공동안보구조의 건설과 취약 요인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과정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국내외의 주변환경들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취약요인들이 다소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이 처한 현재의 국내적 난국은 주요한 취약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다소 복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간단하고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신을 시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기대했던 만큼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북한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단지 ‘신사고’라고 불리워지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 정책’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는 몇 가지의 징후들이 보일 뿐이다.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방문은 바로 이러한 신사고의 출발점으로 판

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변화를 준비중’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외부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될 뿐이다.⁵⁾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향후 변화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수 년 동안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의 고립과 서방세계에 대한 적대감들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세계에게 있어 북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대상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과 의도에 깔려 있어 북한에 대한 의구심들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⁶⁾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생존과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쉽게 해소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위협’은 보통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만큼 ‘북한에 대한 위협’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북한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국제사회가 만들어 주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개별적 이해가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하고 모두 보호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안전과 같은 북한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보장될 때만이 북한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고 ‘억제력을 가진’ 다른 무기의 개발 프로그램들도 중단하게 될 것이며 지역의 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또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현재 취약 요인들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만간 미국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이 변화되어야만

5) Han Sung-joo, “Korea’s place in China-U. S. ti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29, 2000, p. 29.

6) Park Doo-bok, “Prospects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inter-Korean Summit and thereafter,” *paper on-line*, p. 4.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이는 주한 미군의 구조와 그 역할 문제들을 고민하고 새롭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미국·일본 3국의 정책 조정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간의 화해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도 진행되어져야만 한다. 만약,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정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진행시키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한반도의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한, 중국, 소련의 북방 삼각관계로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을 향한 미국의 TMD 개발 계획은 해당 국가들 간의 새로운 불신과 새로운 차원의 군사경쟁을 유발시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내용들은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와 공동안보체제를 실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 (1) 한반도 안보의 본질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합의
- (2) 한반도 문제에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의 참석 및 이익과 책임의 공유
- (3) 세계 강대국들 간의 진정한 협력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하지 않은 많은 노력들을 진행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3.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중국의 역할

한반도에 바로 붙어 있는 이웃으로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깊숙하게 개입해 있었으며 때로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

기도 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최근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에 절실히 원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으로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평화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구축은 누구보다도 중국에게 더욱 절실한 내용인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전쟁 때처럼 자신의 안보를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한반도 지역의 혼돈이나 특정 국가의 붕괴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안정적이고도 점진적인 형태로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내심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을 더 선호하며, 분단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⁷⁾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이 제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징들

일반적으로 말해서 탈냉전 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서로 균형잡힌 양국 간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남북간의 직접 대화·화해·협력을 지지한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반면 북한이 서구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들을 지지한다.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에 북한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을 지원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협정을 완료하기 위해 중국은 ‘4자회담’에 참석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⁸⁾

7) Han Sung-joo, *op. cit.*, p. 29.

8) Liang Yiyun, “Korean summit meeting and neighboring big powers’ relations,”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비적대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이익들을 확보해 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역시 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관계를 강화해 올 수 있었다. 이러한 남북 양국에 대한 중국의 행동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들을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매우 특이한 유용한 위상을 중국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독특한 위상 덕분에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주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과거 한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시킨 뜨거운 현안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은 미·중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동반자이다. 중국의 대북 지지는 북한의 정치적 생존과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과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과 북한이 맺고 있던 전통적 관계가 갑자기 단절된 것은 북한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준 것이 사실이다.

반면 중국이 개혁과 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성공한 것은 북한에게 또 다른 형태의 충격으로 다가갔고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친구로서 생각해 왔던 중국으로부터 배신당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고 이는 1990년대 북·중관계가 한동안 소원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특수한 이념·지리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은 결코 오랜 친구였던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 중국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 개발 프로그램은 일본이 추진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당화시켜 주고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위험한 반응을 유발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의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 주도의 NMD, 또는 TMD 추진 계획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은 그당시에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강경 조치들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나 강경 조치들은 한반도에서 의도하지 않는 갈등이나 충돌, 심지어 재앙과 같은 일들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재앙적인 붕괴는 지역 내 국가들에게 매우 높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생존과 안정은 한반도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규모의 지원을 통해 북한을 도왔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을 도왔던 것은 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의 무질서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가능성들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한동안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과 의심의 단초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1992년 한·중 국교수립으로 인해 소원해

9) Yellow book on international politics—report on global politics and securit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documentation publishing house, 2001), p. 92에서 재인용.

진 북·중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신호로 이해'¹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 지도자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지도자들 간에 정상회담의 개최를 합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왔다.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투자시장이다. 반면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중 간의 정치적 관계는 1998년에 양국 간의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설정된 이후 주목할 만한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중국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한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의 지역적 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지지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지속되는 것은 중국의 이해에도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발전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과 같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부정적 사건에 중국이 휘말려 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¹¹⁾ 비록 중국은 주한 미군의 존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에 미군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T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T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며 때로는 새로운 갈등을 심화시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Part Doo-bak, *op. cit.*, p. 1.

11) Russell Ong, *op. cit.*, p. 60.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더 이상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중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역외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도권까지 확보해 나가게 될 것이다.

첫째,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북한이 지역 협력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는 ‘북한의 위협’을 프로그램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TMD 프로그램이 자신의 목표감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 중인 TMD 계획은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역 내 미국의 위상은 약화되어질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파견 문제도 재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이다.

넷째, 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적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역 간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¹²⁾

2)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중국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12) Park Doo-bak, *op. cit.*, p. 5.

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인접해 있는 이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북간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노력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¹³⁾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은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며 영향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중 간의 양자간 관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한·중 양국 간의 관계를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셋째,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소원해져 있던 양국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또한 이러한 내용들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한에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 내 강대국으로서 이웃 국가들에게 안보를 확신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그리고 또한 중국 역시 지역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소 불확실한 지역 상황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만큼 강대국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⁵⁾

13) 햇볕정책에 대한 한국내 반응에 대해서는, Chung-in Moon,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in Chung-in Moon and David Steinberg (ed.), *Kim Dae-jung Government and Sunshine Polic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9), pp. 36-40 참조.

14) 통일원 홈페이지의 내용 참조. <http://www.unikorea.go.kr>.

15) 6·15공동선언의 내용은 <http://www.kois.go.kr/government/presidnet/2000/sn/focus/analysis.html> 참조. 보다 자세한 설명은 Chung-in Moon, “The Sunshine Policy and the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에 있어 중국이 수행하게 될 긍정적인 구체적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반영되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간에 존재하던 과거의 적대적 관계들을 용해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남·북한 간의 관계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관계로 발전될 수만 있다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반대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zero-sum 게임과 같은 양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non-zero-sum 게임과 같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¹⁶⁾

둘째, 중국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이 성공하게 될 경우, 이는 북한에게도 더욱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북한이 채택할 수 있는 좋은 발전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북한이 자신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001년 1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은 바로 중국이 추진 중인 개혁과 개방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북한의 진심과 북한 자신도 앞으로 개방과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열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셋째, 중국은 남·북한의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 입장을 지지한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 간의 관계와 정책들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국이 지원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될 것

Korean Summit: Assessments and Prospects,” *East Asian Review*, Vol. 12, No. 4 (Winter 2000), pp. 22-29 참조.

16) 북한은 2001년 4월 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록 이 회의에서 법률·제도적 개혁을 대규모로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경제개방에 필요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가 없이는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급속한 변화나 진전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다.

넷째, 급부상하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시장이자 경제적 동반자가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중국간의 긴밀한 경제관계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남·북한과 더욱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남북간의 특수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만큼 비중있게 진행되어질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의 협력과 통합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여타 지역에 비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갖고 있는 포괄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은 분단된 남·북한보다는 통일된 한반도를 분명히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도 결코 중국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통일된 한반도를 추구하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지역의 구조와 질서는 오늘 현재의 내용과는 분명하게 다른 형태로서 구성되어질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있는 형태로 새롭게 형성되어질 것이다. 또한 취급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또 보다 안전해질 것이 확실하다.

3) 지역 내 불안정 요소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 있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안정한 요소들도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특히 대북정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관계 정상화에 계속 실패하게 될 경우, 양국 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강대국들을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입장의 내용에 따라 서로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문제이다. 만약 중국에 대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정책들 때문에 미·중 양국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한반도 문제도 악화된 미·중관계의 틀 속에 자연스럽게 끌려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만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만의 국내적인 정치적 요소들 때문이거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들 때문에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 역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관계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은 바로 중국 자신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지역 내 관계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과 개방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와 더욱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공동체와 지역 수준의 다양한 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이들 공동체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 업무와 지역 수준의 현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사회질서의 확보, 국내 정치적 변화, 대만 문제와 같은 민족 통일의 문제 등 중국도 역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사회와 외교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 우호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들 간의 국제적 대립을 피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은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매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과 행동들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들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리고 체제를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기에 놓인 국가로서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은 물론이고 세계적 수준에서도 중국의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환경적 요소들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 평화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1. 서론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낙관적 전망들을 강력히 억누르고 있는 냉전의 마지막 잔재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향해 발전과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한국과 북한은 의심과 상호불신, 그리고 긴장감 도는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충돌마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9년 6월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 함정들 간의 무력충돌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위기를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악화시키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이후 한국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것이 너무나도 낯선 것이 되어 버렸으며 전쟁과 불안의 두려움만이 한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타파할 사건이 2000년 6월에 발생했다.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적으로 말해서 남·북한은 현재에도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 있다. 단지 휴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쟁 중에 한국의 지도자가 적 영토의 심장부를 방문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군부는 1급 경계 태세를 발동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본 문서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성과물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햇볕정책이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은 결코 이룩될 수 없었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결정지어 온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목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 비록 현재까지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과들이 가시적인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이러한 배경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1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관계 전반을 점검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2001년 1월 이후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본질과 그 배경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국내적 요소,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적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최근에 정체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의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향후 발전 양상을 전망하고 현재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은 진정 기대하지 못했던 큰 성과였다.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북한에게 공식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는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국내적으로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초래했으며 심지어 적대적인 반응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¹⁾ 남·북한의 정부 간 대화는 성사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었고 비정부기구들 간의 접촉들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차관급 대화가 두 차례 열렸을 뿐이며 이 또한 성공적 결과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진행된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에 있어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남북간에 진행된 끝없는 체제경쟁과 적대적 행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해 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남북관계의 혁명적 변화라는 이러한 평가는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계에서 상호 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관계로 변화시킨 가장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여 년의 세월동안 단절된 채 중단되어 있던 남북 정부 간의 공식대화 채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사건이라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4차례나 연속하여 개최되었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이와 병행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던 정치선전이 중단되었고 이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남북화해의 상징으로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남북 이산가족들의

1) 『문화일보』, 2000년 8월 25일자 참조.

고향방문과 가족재회가 세 차례나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3,600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남북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상봉했으며 1만 36명의 이산가족들이 처음으로 이뤄진 서신교환을 통해 남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남·북한은 남북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교류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기도 했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11월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 등 4개의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수단들에 대해서도 합의하는가 하면, 2000년 9월에는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 도로 복원사업에도 합의하였다.²⁾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의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³⁾ 6·15남북공동선언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항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으며, (2) 항은 한국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간의 상호 공통성을 인정했으며, (3) 항은 이산가족 재회 및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4) 항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언급했고, (5) 항은 남북 당사자 간의 공식대화 개최와 이러한 합의의 실행 문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합의는 하되 실행은 옮기지 않는다’는 과거 남북관계의 관행적 태도에서 남·북한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나 1992년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들은 모두 남·북한이 합의는 했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조

2)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참조.

3) Chung-in Moon,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6)의 제6장 참조.

치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는 못했다. 반면 6·15남북공동선언의 경우에는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7~8개월 동안에는 관련된 후속조치들이 점진적으로나마 실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에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남북 정상들은 거의 12시간 동안이나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정상들간의 대화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적 유대를 쌓을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구체적 성과물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국민들이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하고 평온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초래된 평화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내부의 통치엘리트들의 구성원들과 행동패턴들이 국제사회에 노출됨으로써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결정과정들에 대한 외부 관찰자들의 관찰이 보다 명백해지게 되었고 관련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도 냉소적인 묘사로 일관되어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공개되면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결과 상당히 다른 평가들이 진행되게 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카리스마적이고 위풍당당하며 빈틈없는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명록 차수, 현철해 대장, 백재경 대장 등 북한 군부의 주요 인물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평양 체류기간은 짧았지만 한국의 대표단들이 과거에는 얻지 못했던 북

한 군부 지도자들의 성향과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큰 성과였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북한은 서방의 10여 개 국가들과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 국가 내부의 구조적 변화와 체제개방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갖고 있다는 신호들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상해 방문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1개월 여 앞둔 2000년 5월에 추진했던 중국 방문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0년 5월 당시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식 사회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에 비해 여전히 더 우월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2001년 1월의 상해 방문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더 잘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으며 2000년 5월의 입장과 매우 상반된 평가를 언급했던 것이다.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1월부터 ‘신사고’ 운동을 주창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과학적 사고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과 실용성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최근 북한의 변화된 행동들이 과거 북한이 일반적으로 보여온 전술적 행동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다.⁴⁾

마찬가지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성공은 높은 수치로 나타난 대중적 지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4)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가전략』, 제2권 1호 (1996), pp. 77-78 참조.

대한 한국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도가 90% 이상을 상회했었다.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난 8월 25일에 실시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7%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2000년 9월 2000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결정되자 국내의 지지여론은 현격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국민적 지지의 약화는 남북관계의 정체 현상과 병행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3. 한반도 문제의 과제와 남북관계의 갑작스런 정체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들과 달리,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단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멀고도 조심스러운 여정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팔목할만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어려운 협상의제와 새롭게 풀어야 할 난제들이 남·북한 협상의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확보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남북관계는 분명히 의미있는 것이었지만 남북은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인식, 군사 구조, 군대 배치, 군사작전의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기존의 정책과 내용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군사비 측면 등에서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관련된 징후들이 남·북한에서 발견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상호 비방 등 정치선전이 중단되었는가 하면 제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기도 했고 경의선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 작업이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기존의 전략과 전술 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

5) 문정인,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국가전략』, 제5권 2호(1999), pp. 139-170 참조.

으며 여전히 서로를 주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공격형의 부대 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안보적 긴장을 고조시키도록 만들었다. 물론 한국도 기존의 안보적 위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여전히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FX사업, SAM-X, AWACS기, 그리고 Aegis함 도입 계획들은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⁶⁾ 이처럼 남·북한이 상대방과 자신의 군사정책에 대해 서로 모순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은 모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강조했고 또 미래에는 그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전쟁에서 평화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면서 자신의 안보위상을 결코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록 남·북한이 경제·사회·문화의 영역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수단들을 의제로 채택해 협의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러한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오고 있다. 비록 2차 장관급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생산했고 남북군사회담을 활성화시키는 데 합의했지만 북한은 이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남·북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남북 군비통제 및 제한, 축소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될 경우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군비통제 및 축소 문제는 남북 군대의 제도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군부의 반발도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의 180만 명에 이르는 남북의 정규 군대와 관련 무기체계

6)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부터 NMD와 TMD를 MD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도 TMD대신 M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들을 재정비하고 축소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⁷⁾

휴전협정을 남북간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더욱 복잡하고도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과 관련한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단지 북한, 미국, 중국만이 휴전협정의 합법적 주체일 뿐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UN군 사령부를 대표하여 서명에 참여했을 뿐이다.⁸⁾ 따라서 휴전협정의 해체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 해결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복잡한 법률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을 UN에서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는 남북간의 양자적 협상에 의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만큼 포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남·북한과 중국 및 미국이 참여하여 대화하고 중재하는 ‘4자회담’을 구성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장쩌민 주석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휴전협정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미 양국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의도 때문에 이러한 제의 또한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한편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그리고 군비 통제 및 축소와 관련한 일련의 작업들이 사전에 일정 수준까지 진행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와 안전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문제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난제이다.

7)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5월 25일 서울에서 있었던 외신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된다.

8) 『대한매일』, 2001년 5월 3일자.

9) 통일부, 『통일백서, 2001』 (서울: 통일부, 2001) 참조.

미국은 1994년부터 한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북한 핵시설의 경우에는 가동 중지 및 시설 동결과 사찰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사일의 경우에는 북·미 간에 미사일 개발·시험·수출의 잠정적 중단에 합의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북한 핵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건설해주기로 약속한 2기의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이 약속과 달리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들이 아직 가시적 성과들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의 개발·시험발사·수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현금으로 관련 손해를 보상해 주며, 북한 인공위성의 발사를 미국이 지원해주기로 한 문제가 북·미 미사일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관건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의 보상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부시 행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에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MD 개발계획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¹⁰⁾ 특히 MD 계획은 북한과 중국을 현재의 적 또는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과제와는 별도로 2001년 1월부터 남북관계가 갑자기 소강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북한은 2001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3월 13일 아침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내부사정으로 인해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한국측에 통지했을 뿐이다. 또 2001년 3월 한국의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동안 합의했던, 제46회 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 팀을 파견하기로 한 합의 내용도 북한이 일

10) 『조선일보』, 2001년 5월 15일자.

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그리고 2001년 4월 3일에서 4월 5일까지 개최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남북 적십자회담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결국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보여오던 남북간의 협력 및 교류 사업들이 일순간에 소강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은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의 70%, 경의선 도로 건설사업의 50%를 종료했지만, 북한은 2000년 12월 이후 관련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진행을 위한 별다른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6월 서울 답방도 그 실현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초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남북간에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¹⁾

4.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나타났던 열광적인 모습들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소강 국면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처럼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인들이 상호 연계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다양한 대북 약속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는 한국의 국내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최근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넷째는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행동과 태도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 약속의 불이행

11) 『한국일보』, 2000년 10월 17일자; 『동아일보』, 2000년 12월 6일자 참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연세키친 포괄적 상호주의의 원칙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지도자들이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적절히 이해한 결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제적 지원들이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양쪽 주장에 끼여 있는 샌드위치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다.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김대중 정부가 상호주의적 원칙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북한에 제공해 주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이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지원들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한국은 2가지의 유인책을 북한에게 제시했다. 첫 번째 유인책은 금강산 관광 허용에 대한 대가 개념의 경제적 지원으로서 현대가 금강산 입장료의 명목으로 매달 1,2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의 유인책은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기간시설 건설 및 관련 산업 발전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소위 베를린 선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1년 1월 이후 이러한 두 가지의 유인책 모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부분적으로 포기한 것은 남북관계를 정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판단된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1999년 이후 현대는 금강산 입장료의 명목으로 매달 북한에게 1,200만 달러를 꼬박꼬박 송금해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이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2월에는 현대가 북한에게 단지 200만 달러만을 송금했고 3월에는 이마저도 송금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전혀 송금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대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은 월 송금액을 1,2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낮춰주었다. 그러나 현대의 유동성 위기와 금강산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현대는 이처럼 절반으로

삭감된 송금액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현대로부터 받아오던 금강산 입장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자 북한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9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14억 7,00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수출이 5억 100만 달러, 수입이 9억 6,400만 달러에 이르렀다. 1999년 1년 동안 현대가 북한에 송금한 금강산 입장료의 규모가 총 1억 4,400만 달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1999년도 북한 총 수출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된다. 결국 북한이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금강산 입장료 송금 중단은 북한에게 있어 심각한 재정적 손실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대는 다면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매달 일정액의 금강산 입장료를 송금하는 방식에서 금강산에 실제로 입산하고 관광하는 관광객의 수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송금하는 형태로 이용료 지불방식을 변경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금강산 육로 관광을 새로 개발하는 동시에 북한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금강산 주변 지역의 관광 특구 지역을 신설하는 형태로 새로운 이권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유람선에 카지노 사업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유인책을 제공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¹²⁾ 북한 역시 한국 정부가 현대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한국 정부가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한 기업운동을 진행해 온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한국 내 여론의 동향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리석게도 공적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현대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와 같은 결과를

12) 『중앙일보』, 2000년 10월 4일자, “노벨상 이후” 칼럼 내용 확인.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현대 문제가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형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결코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려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정부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2000년 말까지 약 1억 달러에 상당하는 60만 톤의 곡물 제공과 6,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20만 톤의 비료 제공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¹³⁾ 초기의 공언과 달리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기간산업 건설과 발전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비록 북한은 한국에게 개성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가시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유동성 위기와 정부 예산의 전용이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개성 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도에 북한의 기간산업 건설 지원을 포함하여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에 이용할 14억 8,000만 달러의 정부 지출을 한국 국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예산 전액을 승인할 것 같지는 않다.¹⁴⁾ 그외에도 한국은 북한이 요구한 전력 공급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13) 상호주의의 혼란스러운 개념과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의 문제에 대해서는, Robert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1 (Winter 1986), pp. 1-27; 문정인, "패권적 안정이론과 상호주의," 『한국국제정치논총』, 제27권 제2호 (1988), pp. 3-30 참조.

14) 미국 하원의 Henry J. Hyde 의원, Henry Sokolsi 의원, 그리고 James Lilly 대사, 미국 상원의 Jesse Helms 의원 등이 최근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핵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Robert Einhorn이 경수로 원자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전력산업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정보의 제공과 북한의 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배전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북한이 허용하고 그리고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50만kw를 제공하겠다고 다시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력문제와 관련한 남북간의 협력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체 현상은 ‘신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간에 조화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국내정치, 재정적인 한계, 신중한 국가 경영 등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연시키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북한은 남북간의 공식적인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 온 북한의 ‘실용주의적 온건 노선’ 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북한 내 온건파들의 위상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대신 강경파들이 득세하여 북한의 대외정책을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국내적 합의의 성공과 실패

2000년 후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한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침체되기 시작했고 국내 여론의 관심도 경제문제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에 대한 초기의 국민적 합의와 대중적 지지가 지속되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경제침체와 무관하게 북한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열의가 식어가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가 깨어지고 대중적 지지가 분산되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에게 받드

시 필요한 물자동원의 성공요인들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정상회담으로 인해 초래된 행복감이 깨어지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적 반대가 점증하기 시작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모험을 극단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론을 제시하면서 냉소주의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비판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유도해 내는데 실패했다. 둘째, 6·15남북공동선언의 첫 번째 항목인 한반도 통일의 행위자 문제와 두 번째 항목인 통일방안의 내용들은 그 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은 합의 문구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요구들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에게 기만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강조도 없이 한반도 통일만을 강조한 것은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셋째, 비전향 장기수들의 무조건적 북한 송환에 대한 합의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남북 어민들과 한국전 참전 한국군 전쟁포로들의 귀환문제와 연계하여 처리되어져야만 했다는 지적이다. 넷째, 또 다른 비판적 내용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새로운 내용을 담고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언급된 내용들은 1972년의 7·4남북공동선언이나,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미 다루어졌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도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한 내용들을 또 합의만 했다는 비판이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한국의 이념적 혼돈을 심화시켰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므로 지나치게 앞질러 나갔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비판이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들 중 일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할 내용도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

론이 급감한 것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 소식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비방 전략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김대중 개인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해 북한에게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지원을 쏟아 부었다고 주장한다.¹⁵⁾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은 실제 정책이 잘못 집행된 것 때문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악의적 시기심의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전통적인 엘리트들, 영남 지역의 DJ 거부세력들, 달콤한 기득권의 등지에 안주하는 전통관료들은 호남 출신의 머리 좋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배가 아픈데 노벨평화상까지 타는 것을 평상심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귀를 막고 10월 13일이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란다.”¹⁶⁾

불행히도 김영희 대기자의 관찰은 정확한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탄 이후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지역별로 크게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호남 지역의 국민들은 햇볕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영남 지역의 국민들은 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후속조치들을 평가 절하하면서 맹목적인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의 포용

15)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 아래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 군은 중기 계획을 통해 FX 사업 추진, SAM-X 도입, AWACS 기 도입, AGIES 함 도입 등을 추진 중인데, 이들은 모두 MD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 『연합신문』, 2001년 4월 26일자; 『로동신문』, 2001년 4월 16일자.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언론매체들도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성과를 심하게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형성된 승리를 자축하는 들뜬 분위기가 잠시 동안 국내 반대세력들을 잠재울 수는 있었지만 곧 새롭게 등장한 국내적 갈등은 남북관계의 전망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국내적인 분열을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의 야권 정치세력들을 오히려 결집시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기초마저 약화시킴으로써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햇볕정책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02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올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3) 한·미 간 대북정책 부조화의 발생

김대중 정부의 초기에 햇볕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와 매우 긍정적인 정책적 조화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한반도의 잠재적 핵 위기를 해소시키는 동안, 페리 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촉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출현을 계기로 북한과의 협상이나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한·미 간의 중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격차를 더욱 넓혀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간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인식, 협상, 조절상의 격차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일련의 행동 및 변화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중대한 시각 차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 행정부와 긴밀하게 함께 작업하고 있는 인사들은 북한의 변화는 단순히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행동에 불과하며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입정책과 포용정책들은 김정일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보수주의적 시각들이 부시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보수주의적 시각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며, 서울·워싱턴·평양 간의 관계도 심각하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미 간의 시각차를 줄여나가는 문제는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한국과 미국은 페리 보고서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대북 인식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의 강경노선도 한국 관료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평양 방문 등을 통해 상당히 온건한 형태로 변화되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서로 공유하고 그 폭을 확대시켜 나갈 경우, 양국 간의 시각 차이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당장 붕괴할 것 같은 상태가 아닐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체제를 개방하고 시장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들이 최근 북한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입장 조율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정된 인식 태도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스스로를 위협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북한이 보다 진지한 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을 기준으로 판단

함으로서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 행동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협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호간의 차별적인 입장은 한·미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와 검증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도 상호주의와 검증의 중요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절한 검증이 없이는 신뢰가 구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협상과정에서 서로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북한과의 협상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상호주의와 검증 문제에 집착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에게는 상호주의와 검증이 협상의 대상에 불과할 뿐, 결코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타협적 위상이나 중재자적 위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주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 있어 수단과 목표의 내용을 신중히 구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협상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의 문화와 상대방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함께 인식되어야 할 문제이다. 상호주의는 때로는 명확한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간에 혼동되는 애매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 경제 교류처럼 등가성의 원칙이나 적시성의 원칙에 근거하거나 즉각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가 항상 명확하게 계산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측정은 그 평가의 형태나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애매해질 수도 있고 혼동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재화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서로 차별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영역들이 함께 관련되어 있거나 상호 교류의 역동적인 분야의 문제들을 거론할 때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의 개념을 상황적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크게 줄여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듯이 검증의 문제는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검증이 처벌이나 부정적 유인책을 통해 강화되기보다는 보상과 긍정적 유인책을 통해 강화될 때만이 북한의 순응적인 태도를 유도해 내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딜레마가 부시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 간의 부조화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대북 접근에 있어 한국과 미국 간에 일정한 업무 분담과 관련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었다. 한국이 한반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 통제 및 축소와 관련한 남북간의 안보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3자 협력 및 협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문제들을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포함된 ‘4자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복되어 있던 암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악화되게 된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 문제와 군비통제 문제를 연계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남북간의 상호 신뢰구축과정과 군비통제 협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 특히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군비통제를 연계시키지 않으려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남

·북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구성된 ‘4자회담’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4자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한·미 간의 새로운 부조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의 기본적 내용과 관련하여,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2기의 경수로 원자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비록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준수할 것이라며 한국에게 반복해서 확신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입장 변화는 북·미 간의 또 다른 긴장과 위기의 악화를 초래하거나 정체된 양국관계를 지속시키면서 한국을 곤란에 빠지게 하거나 북·미 기본합의서의 존재적 위상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들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미사일방어체제(MD)와 관련한 현안은 또 다른 한·미 간 정책 부조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MD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는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MD 정책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 정부는 MD 정책의 추진에 공식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유발시킬 의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MD 문제는 한·미 간의 정책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대북정책 조율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 간에

존재하는 입장 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 차가 더욱 확대될수록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실 북한 지도부는 2001년 5월 평양을 방문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통해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북한은 관망 자세를 보일 것이며 남북관계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이처럼 북한의 대외정책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결정과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의 대화 채널과 협의 채널들을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감으로서 정책적 견해차를 함께 줄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본다면 이러한 한·미·일 3국간의 협조도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협조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작업은 매우 험난한 과정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4) 북한의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행동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어 가는 것 모두가 오직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탓만은 아니다.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북한의 결정도 동등한 찬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한국만큼 북한도 남북간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북한이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북한의 진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북한의 적극적 행동과 신속한 반응들은 사실 예상 밖의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당시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던 교류와 협력의 속도 및 범위가 오히려 너무 빠르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할 정도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4차례의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그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은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돌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불확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북한의 예상할 수 없는 돌출 행동들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남북 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또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단일 팀을 파견하기로 한국과 합의해 놓고도 북한은 그 약속을 무례하게 파기시켜 버렸다. 더욱이 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남북 군비 통제와 상호신뢰 구축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논의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의 대북 불신과 안보 불안감을 확대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와 달리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를 연계시켜 진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 중인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첫 번째 항목의 내용과 크게 상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개선의 볼모로 삼고 있는 한 남북간의 건설적이고도 지속적인 긍정적 관계는 결코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이러한 돌출적이고도 불명확한 행동들이 지속될 경우,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결집시키는데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햇볕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4. 결론: 정책적 함의와 대안

남북정상회담은 그동안 추진 속도를 잃고 정지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급격히 발전시키는 결과는 초래했다. 그리고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용감하게도 화해, 교류, 협력의 새로운 세계로 함께 뛰어 들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봉쇄해야 할 만큼 기괴한 깡패 국가가 아니었다. 대화와 협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일반적이고도 실용주의적 판단을 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이 좋은 결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남북관계는 과거만큼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18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비무장지대를 따라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의 군사구조와 배치 양상만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이 당장 전면전을 치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후방 지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게릴라 침투 등 제한전쟁의 발생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하든 간에 한반도에서 제한전쟁이 한번 발생되기만 하면, 이로 인해 입게되는 인적·물적 손상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되고 있다. 특히 남북 모두에게 초래될 경제적 손실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한국과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 있는 북한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일상적인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은 모든 번영과 부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은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을 파괴할 것이다. 따라서 심지어 전쟁의 대가로서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남북관계의 정체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평화와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냉전구조 해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만 큼은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냉전적 사고와 관행은 관성을 가진 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현재 정체된 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된다면 한국·미국·일본의 3국이 형성하게 될 남쪽의 남방 삼각관계와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형성하는 북쪽의 북방 삼각관계 간의 대립을 새롭게 야기시키게 될 것이고 이견을 확대시키게 됨으로써 신 냉전구조를 새롭게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도 MD체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 그럴 듯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 한반도 문제가 포함된 신 냉전체제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부활하게 될 경우 이 지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적인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1994년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하며 실전 배치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잠재력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도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북한이 핵무기를 먼 거리까지 투사할 수 있는 수송체의 개발능력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위협의 강도는 더욱 크다 하겠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입증해 주고 있듯이,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러한 위협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세계평화는 결코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갈등도 결코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 수준의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수준의 평화와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몇 가지의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햇볕정책, 즉 대북포용 정책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경제지원과 안보 및 평화확보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강화라는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를 유발시키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대립과 봉쇄 정책에 비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정책과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을 달래거나 제멋대로 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채택된 정책적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1994년의 핵위기 당시의 갈등과 협조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혁신적 결과물인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는 북한에 대한 포용이라는 개념을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진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200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를 특사로 하여 워싱턴에 파견한 것, 2000년 11월 북한을 방문하는 최고위직 미국 인사였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는 과

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2003년까지 유보하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발언 등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이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국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들이다. 이러한 김정일 위원장의 제스처를 너무 가볍게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계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현재 북한은 대대적인 변화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변화 바로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포용정책과 포괄적 상호주의에 근거한 적절한 대북 지원이 북한을 조금만 앞으로 밀어준다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대대적인 체제전환을 촉진시키게 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적대적 행위들도 종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그리고 경제 지원 등 북한에게 긍정적인 유인책들이 제시될 경우 북한은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한 미국의 요구들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내적 분열현상을 극복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념노선과 상관없이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사실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가 거절할 수 없는 민족적 운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내 정치세력들은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남·북한 문제를 남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한다. 국내적인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의도하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해 내지 못할 것이다. 국내 정치세력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또한 가시적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그리고 필요한 국내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보다 겸허한 형태로 재정립해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으며 대북 정책 수립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남·북한 문제가 선거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남·북한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 되어버릴 경우 자칫 남북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로서 구체화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인 찬사와 지지를 보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들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세력균형 결정론으로 대표되는 냉전적 논리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4강들 중에서 특히 미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 유지, 강화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간 동맹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뿐 아니라 휴전협정을 남·북한 평화협정으로 대체시키는 작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국이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 시장경제의 논리와 민주주의 원칙들을 북한으로까지 확대시키고 북한을 안보공동체의 건설적 회원국으로 변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공통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북정책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정책조율을 시도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협상태도, 정책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리감들을 줄여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차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차관이 최근 서울을 방문하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교적 협상태도에 있어 근본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계속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허풍을 떨고 지나치게 무모한 고집을 피우며 뻔대거나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체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등의 구시대적인 외교 협상 태도들은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또한 북한은 현재 직면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자신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존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을 중지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스스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양자간 협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하여 북한을 억누르는 대북 강경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방, 개혁, 평화를 위한 보다 확실하고도 혁신적인 수단들을 채택해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또한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을 북한이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생존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만 한다. 이제는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 온 술수의 정치를 중단하고,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 지평선을 열어가야만 할 때라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만 한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21세기 동북아시아 탈냉전의 중요한 관건들

고성준 (제주대학교)

스칼라피노 박사님은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관련 준비를 마친 후 스칼라피노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한은 물론이고,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좋은 정책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스칼라피노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의 내용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큼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 간 남북관계는 급격한 관계 개선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3~4개월 동안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새롭게 들어선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자칫 강경 일변도의 내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남북관계의 관계 개선도 중단해 놓고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북·미관계의 내용과 상관없이 남북간에는 양측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관계와 연계된 남북관계 개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한이 어떠한 대외정책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스칼라피노 교수님의 고견을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저도 남북관계가 화해와 교류의 관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북·미관계를 문제삼아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유예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고, 한국 내부의 갈등적 요소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햇볕정책이 준비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초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남북 신뢰구축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상회담만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는 시도는 현재와 같은 소강국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햇볕정책의 추진에 대한 스칼라피노 교수의 정책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국과 미국 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서, 양국 모두 한반도의 통일, 번영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중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스칼라피노 교수의 지적처럼 향후 미·중관계가 21세기 동북아시아 탈냉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입장에서는 미·중관계가 순조로워야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미·중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남북관계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통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스칼라피노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포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1세기 세계 주도국의 위상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이 이러한 정책 패턴에서 서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만약 양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장 소장님은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이념적 측면과 혈맹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라피노 교수의 지적처럼,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틀 속에서 중국의 대북한 정책, 대한반도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중관계, 또는 대한반도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2년 가을이 되면 중국에서도 권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쩌민의 제3세대가 아닌,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가 중국의 권력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제4세대가 갖고 있는 성장배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1940년대 이후 출생자로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을 받았고 대학생할은 문혁기간을 거쳤고 마오쩌둥 노선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며 개혁과 개방 노선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대체로 중국 내에서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처럼 중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과연 안보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조차 미국과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년 가을 중국에서 제4세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은 자칫 세계화 시대와는 부합되지 않게 보수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장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고민하기 위해 모인 이번 포럼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자국 이익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의 자세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과정과 국제협력 강화

권영민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문정인 교수는 북한의 변화만큼 한국과 미국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우선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반드시 상호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새로운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한국과 미국의 정책변화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노구치 교수의 논문이 세계적 도전의 문제를 강조한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노구치 교수가 너무 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노구치 교수는 중국이 변하고 민주화되어야만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주어 북한도 민주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 그동안 중국의 문화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중국의 존재와 위상에 대한 이노구치 교수의 생각을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원링 교수의 논문 중에서 동아시아라는 공동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상의 하나의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증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들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주도국가인 미국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다면 좀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칼라피노 교수의 발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남·북한과 주변 4강의 향후 변화방향, 즉 폐쇄적인 측면과 현상유지적 측면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북한이 보다 강도 높은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현상타파적인 측면이 초래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언급을 부탁드립니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스템

김동성 (중앙대학교)

나는 이 포럼에서 지난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격하시키려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스템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가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겨우 일년 후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알리는 평양에서의 소식이 없는 현재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과정 상에서 불확실성의 비용을 지적해 주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모이게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세계 조류의 복잡함과 강대국 관계의 유동성을 가장 큰 비용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 위협론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적하시면서 부시 행정부의 강경노선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협상태도와 한국 국내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 논하셨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단시간 내에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밝은 미래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4대 강국과 공유되는 몇몇의 이익이 있습니다. 아무도 북한이 붕괴되기를, 핵무장하기를, 그리고 북한과의 무력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대국 간의 협력 전망을 어둡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인내와 단계적 접근을 요구한 스칼라피노 교수의 의견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변화 여부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인내와 점진주의는 만약 북한이 근본적

으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소용없는 금언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화해입니다. 부시외교의 인식과 철학, 태도는 클린턴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검증과 보복의 원칙은 강조되고 때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전통적 군사력에 관한 무기제한이 협상의 부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 교수의 훌륭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북한 붕괴의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식량이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북한은 결국 스칼라피노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는 궁극적인 체제붕괴 위험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의 법칙은 현실에 있어서는 한 부분일 뿐이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I. 제2분과회의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진위 (연세대학교 부총장)

6·15회담과 6·15남북공동성명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수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간의 신뢰구축, 평화공존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에는 많은 인내와 합의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며 아마 어느 정도의 희생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남북, 그리고 주변 강대국 간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나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 구축과 번영

팀 그로서 (Tim Groser)

뉴질랜드 아시아2000재단 이사장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뉴질랜드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문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시각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평화포럼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도 뉴질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비극적인 한국전쟁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한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머리 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은 결코 원하지 않는 냉전의 마지막 흔적으로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와 안보의 개념에서 보면, 한반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들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화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한반도 통일문제가 남·북한의 당사자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뉴질랜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너

지개발기구(KEDO)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경제안보와 정치안보 간의 연계: 단순하지만 중요한 인식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번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평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세계 강대국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보편적인 중요한 생각이나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가들이 튼튼한 경제적 유대관계에 함께 묶여 있다면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계은행, IMF, GATT 체제들을 함께 운영하던 Bretton Woods 체제의 출범 시기인 1940년대 후반을 회고해 보면 당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제적 현안이 아니라 정치적 현안이었고, 정치적 논쟁거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군사력만큼 경제적으로도 세계를 주도할 만한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자간 협의보다 독자적인 행동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쉬웠고 효과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지도층 내에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선각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비차별적인 개방된 세계적인 무역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모두의 번영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 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유럽국가들 중 6개국이 모여 시작한 EC의 출발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친 프랑스·러시아 간의 전쟁

을 경험한 이후에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은 뉴질랜드까지 가담하면서 재앙과 같은 유럽전쟁으로 확대되었고 나머지 경우들은 모두 세계전쟁으로 까지 확산됨으로써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과 비극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정치전략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직접적으로 정면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경제분야의 외교는 결코 정치분야의 외교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역사적 교훈은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2. 세계적인 경제 조직의 일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정말 큰 진보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무역체제인 GATT가 WTO 체제로 대체되었고 세계무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규범과 규칙들이 1980년대 이후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WTO 체제 가입이 임박한 것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출범 이후 가장 혁혁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러시아도 WTO 체제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의 WTO 체제 가입을 계기로 진정한 의미의 세계무역체제가 출범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우리는 바로 그 목전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 그대로의 진정한 의미의 세계 수준의 세계무역체제가 출범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무역 갈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6년 동안 무역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GATT 체제가 운영되던 40여 년 동안 제기된 분쟁사건의 1/3 이상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경

제적 유대가 매우 약한 국가들 간에는 결코 경제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깊고,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한 무역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체제의 본래 목적은 서로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무역분쟁과 투자 분쟁들을 상당히 객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법체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WTO의 분쟁해결과정은 해당 국가들 간의 정치적 긴장을 현격하게 완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WTO 체제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종종 회원국 간의 정치적 관계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경제적 분쟁과 같은 문제들을 사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사들을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인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문제는 중국과 대만이 이미 서로간에 복잡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약 4만 개 이상의 대만 기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로 인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만약 중국과 대만 양국이 모두 WTO 체제 가입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만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 정상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촉진되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양안간의 정치적 긴장도 분명히 약화되어질 것이며 그 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나아가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도 강화되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3. 지역적 수준의 경제적 합의와 그 가능성

세계무역체제의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작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는 있

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경제공동체의 출현 여부는 지역 내 경제적 합의들이 도출되고 이 합의들이 해당 지역 내 국가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의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된 것과 같이 지역 내의 새로운 합의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합의들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칠레 간의 협상은 많은 사례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지역 내에서 제시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경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 내 무역협정들은 대체로 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외부의 국가들에 비해 협정에 참가한 지역 내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소 차별적인 특혜를 서로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적 수준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협정들은 비차별적인 내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 내 무역협정들의 존재가 WTO의 규칙들을 기준으로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면 이는 잠재적인 갈등적 요소들의 존재를 간과한 판단으로서 다소 순진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유럽 보호’라는 개념에서 EC가 공동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선호했던 ‘공동체 선호(Community Preference)’라는 무역시스템이 EC 내부에서 상징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EC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던 외부의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한 EC 회원국들에 비해 자동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GATT의 케네디 라운드, 도쿄 라운드, 19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조차 EU는 공동농업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수단들을 GATT 체제와 연결시키려 했고 다자간 협의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법칙들과도 연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배타적인 이익들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UR 협상 과정에서 EU의 이러한 태도들은

GATT의 협상을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국제적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형성하고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의 전략적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적 번영은 바로 평화 유지와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을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정상적’인 기업 조건들을 언급할 때 평화와 재산권의 보호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다자간 무역체제는 결코 말로만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시애틀에서 열린 뉴라운드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올해 말 도하(Doha)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뉴라운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두 번씩이나 정치적으로 실패하게 될 경우, 다자주의는 큰 충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자주의는 건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이론 뿐 아니라 실제 실물경제에서도 항상 확인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기업 행위가 더욱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오늘날 이 명제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는 세계 무역과 관련된 기업행위가 급속히 세계화되어 가면서 거의 3배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나쁜 현상이 아니며, 분명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부가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공산품이 싱가포르에서 미국 시장에 수출되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한국과 대만, 또는 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부속품들이 서로 결합되어 제작된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진행되는 기업 활동의 세계적 본질은 폐쇄된 무역 블록 내에서 고도로 분절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비차별적이고 상대적으로 개방된 무역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하

에서 있을 장관급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 세계 기업활동의 장기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다소 보수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기본적인 현실을 언급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수준의 경제적 합의는 세계 모든 곳에서 다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WTO와 APEC의 형태와 같이 개방된 세계무역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행위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다소 복잡하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의식한 상태에서 구상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지역수준의 경제적 합의들이 더욱 많아질 수록, WTO와 APEC의 구조에서 유래된 ‘보다 온건한 정치적’ 선택들이 지역수준의 경제적 합의에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경제적 합의들이 이뤄질수록 참가국들의 향후 결정을 방해하기보다는 더욱 온건한 정치적 선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수준의 경제적 합의들도 WTO와 APEC에 근접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 합의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들 중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차별적 내용이나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강합니다. 임시적으로 차별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들의 철학적 배경이나 기술적 디자인의 궁극적인 내용과 목표들이 장기적으로는 WTO와 APEC과 같은 형태의 조직체들을 추구하도록 구상되어 있다면 임시적인 차별적 요소들도 한정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견해로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적 수준의 경제적 합의들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조건들은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러한 합의들은 소위 ‘민감한 부분’들도 합의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자간 협상에서 배제되

어 있던 섬유, 농업, 서비스 분야들을 무역거래의 법칙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내세울 만한 업적이며 이 상태에서 다시 후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다자간 협상의 가장 큰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분야의 문제들은 무역자유화라는 틀에서 벗어난 변형된 형태로 논의되기보다는 지역 내 협의와 같은 틀 내에서 취급되어야 하며, 시장 개방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몇 가지의 보호조항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을 보조수단으로 강구함으로써 그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내 합의는 합의가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들을 충실히 준수할 의사가 있으며, 지역 내 무역 파트너로서 지역적 합의의 건전한 행위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가진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호를 개방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APEC이 몇 개의 지역적 수준의 소규모 무역 블록으로 영원히 쪼개진 채 통합되지 못하는 불행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역수준의 경제적 합의들은 적어도 ‘개방된 지역주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오늘 제가 언급한 내용들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국가들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무역과 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며, 효율적인 국제적 규범 하에서 세계적인 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외교를 보다 강화시켜나갈 것이며 지역수준 나아가 세계수준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란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점잖게 외교적으로 관찰한 결과만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역사적 사실들이 제가 언급한 내용들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는 가장 적절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발표를 마치면서 제주포럼의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도 어울리는 적절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바로 현대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전 회장이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연결하고 또 그 경제적 연결을 강화시키고 시도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 정주영 회장은 지난 3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는 다양한 많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말년에 오늘 제가 언급한 바대로 남·북한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노력들은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최근의 정치적 노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튼튼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 정주영 회장의 과거 행보와 현재의 남북관계는 바로 경제적인 유대와 평화는 결국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동북아 공동 평화와 번영, 기업의 시각에서

손길승 (SK 회장)

저는 21세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천이 바로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 기술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와 동북아시아 시대로 만들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21세기를 사는 인류를 구원할 가치와 문화는 동북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동북아3국의 협력체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점점이 흩어진 채로는 유럽연합과 미주지역 경제 공동체의 도전에 맞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한·중·일 3국이 저마다의 이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그 협력을 결합하는 근간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자 그 문화의 교류와 협력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방향과 그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이 지역연합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과 그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의 입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글로벌리제이션과 리저널리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변화의 핵심은 바로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이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는 자본, 기술, 인력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돈으로 한국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가 더이상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을,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도 어느 나라의 돈이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사람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춘다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세계는 지금 역내 경제권을 통합하는 블록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장이 열려 있는 만큼, 기존의 자국 시장을 지켜내려는 움직임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에서는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상호보완과 완충의 시장을 만들어 이에 맞서려는 노력들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창설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미국에 대한 위기의식이었으며, 미국은 또한 유로의 출범에 맞서 NAFTA를 확대시켜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남미 국가들의 달러화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단일통화창설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지역경제권의 통합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지역협력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동

북아시아 지역입니다. 기원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동북아 3국의 교류 역사를 통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긴밀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지난 세기 초반 서로에게 주고받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2. 동북아 경제권의 필요성과 특성

그렇지만 대세는 동북아 3국의 상호협력과 통합의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리저널리즘의 도전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력과 시장통합이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역통합의 효과가 그 어떤 지역연합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불과 두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아직도 경제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동북 3성에서 화남지방에 이르는 황해 연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득수준이 1만 달러 이상으로 향상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시장의 역동성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게다가 동북아 3국은 한자문화권 또는 유교문화권으로 묶여지는 문화적 동질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3국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난 30여 년간 걸쳐 축적한 산업발전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과 강력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21세기 자국의 이익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지역

연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이 지역의 연합은 EU나 NAFTA를 능가하는 강력한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세계경제질서를 3국 구조로 전환시키면서 당당한 한 축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3국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북한을 지역연합체에 참여시키게 된다면,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값 싼 노동력이 추가되어 동북아 지역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경제협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역통합의 장애요인과 그 해결방안

한·중·일 3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호 긴밀한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연합과 나아가 지역통합을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와 난관이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삼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발전수준의 격차입니다. 물론 이것이 각 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다르게 만들어 보완적인 경제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삼국간 경제협력관계는 이 같은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세 나라가 모두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제분업을 극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격차가 큰 나라 사이에서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중·일 사이의 경제협력도 따라서 상당기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이 지역의 정치적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과거사 문제는 뿌리깊은 상호불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패권주의도 이 지역연합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북아 연대의 실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간

자 역할은 필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과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통합과정에서 베네룩스 3국이 수행한 역할을 생각할 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이상으로 독일과 프랑스도 역사적으로 골 깊은 반목과 경쟁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서 이해 조정자 역할을 한 것이 양국 사이에 자리한 베네룩스 3국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출범을 가능하게 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 몫으로 유럽연합의 본거지를 제공하고 당당히 그 중심센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의 이해 조정자 역할을 통해 동북아 연대를 실현시키고 그 수혜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와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투자환경을 정비해 낸다면,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경제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기업의 역할

따라서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첫걸음은 일단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접근이나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접근을 단숨에 이루려는 방법보다는 협력이 가능한 이슈나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적 접근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황사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 등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국의 지역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역할입니다. 경제블록을 이루기 위해서

는 경제발전 수준 격차의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적교류와 기술이전 그리고 시장개방 조치가 불가피해집니다. 이 같은 교류는 결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한국이 개발한 CDMA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협력하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의 중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입니다. 일본의 고도화된 선진기술 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한국기업의 기술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들을 나누며 중국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은 자국의 산업화를 급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3국의 21세기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할 때 이 지역 기업들의 상호협력은 그 양과 질에서 점점 더 긴밀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리저널리즘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동북아 지역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을 키워내며 타 지역의 도전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남북문제

한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남북분단은 동북아 지역의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남북대치로 인한 이념적 분계선이 지금까지 동북아 경제협력을 해양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게 하는 한계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비롯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는 경제협력의 축을 북한, 중국의 만주 지역, 시베리아 지역 등 대륙지역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을 때 동북아협력체제는 해양국가와 대륙국가의 단절과 대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을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틀 속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북한 경제의 성장입니다.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은 다소 회복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서방권 관계 개선 및 개혁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방의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매력을 느끼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도 없는데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로 인해 북한에 진출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경제의 돌파구도 결국 남한이 그랬듯이 수출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국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 간 상호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영속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방북 때도 절실히 느낀 점이지만 남북경제협력공동위 같은 제도적인 장치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비전 설정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제시되고 이와 함께 투자보장 협정, 신변안전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남북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생각하고 실제로 검토단계에 들어가면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SOC가 낙후되어 과중한 물류부담을 안아야 할 뿐 아니라 투자보장, 분쟁조정 등의 제도적 장치도

투자를 꺼리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는 토대 위에서 북한의 경제 활성화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전체의 경제력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남북문제인 것입니다.

6. 결 론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안정되어야 남북경협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경협은 최소한 5년 이후를 바라보며 투자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기에 있는 우리 기업 중에는 5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경제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될 것이며 보다 멀리 보고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어렵게 뚫 첫걸음을 탄탄한 대로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벌어졌던 국가 간의 경쟁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21세기 국력의 척도는 그 나라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경제력과 문화의 수준입니다. 결국 21세기 국가의 경쟁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승부가 나고 말 것입니다. 강한 기업을 가진 나라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기업이 많은 나라의 국민에게만 미래는 번영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래는 결국 이 지역의 경제협력체제가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입니다. 동북아 지역이 21세기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은 동북아 3국이 힘을 모아가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남북문제 등의 제약조건을 현명하게 해결해 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동북아 경제협력 비전으로서의 자유무역지대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1. 세계화·경제통합의 동시 확산

- 1)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이래 국경의 개념이 열리는 동시에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구촌 경제시대’가 개막
 - 상품교역의 자유화가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와 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국제거래도 보다 활발해졌음
 -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리가 가장 낮은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연구개발(R&D) 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임금이 가장 싼 나라에서 생산하여,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 경영전략이 확산
- 2) 세계화와 함께 지역 경제통합이 확산되어 현재 14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1990년 이후에 체결
 - 사례
 - 유럽은 1999년 역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27개국과 FTA를 체결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목표로 추진

- 멕시코의 경우 28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동남아국가들은 200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킬 예정

2. 동북아의 경제협력 현황

- 1) 동북아시아 각 국은 특수한 정치·안보적 토양 등으로 인해 역내 경제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
 -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간에 정치체제가 다르고 특히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몽골 등 체제전환국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확실히 정착하지 못했으며 러시아는 국토의 일부분만 동북아에 속함
 -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일천하고 구미형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이 미흡
- 2) 동북아의 경제규모를 한·중·일 3개국 기준으로 보면 GDP는 6조 2,97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0.1%를 차지해 인구비중 23.6%를 약간 하회
 - 일본이 세계 3위, 중국이 7위, 한국이 13위의 교역국이나 역내 교역 비중이 낮고 역외적으로는 대규모 흑자를 나타냄
 - 세계총교역 비중: 12.8%(1조 6,600억 달러 / 13조 달러)
 - 역내교역 비중: 19.3%(3,281억 달러 / 1만 6,991억 달러)
 - 대역외무역흑자 규모: 1,358억 달러
 - (일본: 1,134억 달러, 한국: 176억 달러, 중국: 48억 달러)
- 3) 한·중·일 3국간 교역은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일본은 대중 무역적자를, 중국은 대한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연쇄구조인데 경제적 보완성이 높고 경제통합의 잠재력과 기대효과가 큼
 - 3국의 산업발달단계가 달라 일본은 자금, 기술 공여국의 기능을 수행

하고 중국은 원료공급 및 생산기지 역할을 하며 한국은 중간단계임 ·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근접성도 높아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채널과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경우 경제 및 교역신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임

〈표 1〉 한·중·일 3국의 주요 경제지표(2000)

구 분	세 계	한·중·일				
		한 국	중 국	일 본	계	
인구(십만명)	60,807	475	12,618	1,265	14,358	
비중(%)	(100.0)	(0.8)	(20.8)	(2.1)	(23.6)	
GDP(억\$)	313,598	4,575	10,798	47,595	62,968	
비중(%)	(100.0)	(1.5)	(3.4)	(15.2)	(20.1)	
교역액(억\$) 비중(%)	수출	63,580 (100.0)	1,723 (2.7)	2,492 (3.9)	4,793 (7.5)	9,008 (14.2)
	수입	66,620 (100.0)	1,605 (2.4)	2,251 (3.4)	3,795 (5.7)	7,651 (11.5)
	계	130,200 (100.0)	3,328 (2.6)	4,743 (3.6)	8,588 (6.6)	16,659 (12.8)

자료: 미CIA Factbook(인구), IMF(GDP)의 추계치, WTO annual report 2001(2001. 5).

〈표 2〉 한·중·일 3국간 교역현황

(단위: 억 달러, %)

구 분	한국 → 일본	한국 ← 일본	한국 → 중국	한국 ← 중국	일본 → 중국	일본 ← 중국
1999	158(29.6)	241(43.4)	136(14.6)	88(36.7)	234(16.2)	430(16.2)
2000	204(29.0)	318(31.8)	184(34.9)	127(44.3)	293(25.2)	542(26.0)
무역수지 (흑자국)	113(일본)		56(한국)		249(중국)	

주: () 내는 전년비 증감률, 무역수지는 2000년 기준.

자료: 한↔일·중은 KOTIS, 중↔일은 IMF DOTS.

3. 동북아 비전으로서의 자유무역지대

- 1) 세계화의 조류에 편승하여 동북아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동북아의 핵심국가인 한·중·일 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긴요
 - 동북아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는 APEC에 이은 ASEM의 출범, 1997년 ASEAN의 초청으로 시작된 ASEAN+3 정상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경제개방 움직임이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이 예정돼 있음
- 2)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동북아 국가들이 자유무역지대라는 장기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우선 동북아 3국간에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1967년 방콕협정을 통해 5개국으로 출범한 아세안이 오랜 기간의 협력활동을 거쳐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라는 결실을 얻고 있음

4. 경제협력체 구성 및 협력사업 방향

- 1)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우선 한·중·일 3국의 정부, 경제단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여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공동연구와 함께 교역·투자·기술이전·물류·환경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내협력 시범사업을 추진
- 2) 협력사업은 교역, 투자, 기술이전, 물류, 환경 등을 중심으로 역내교역의 증진, 기업의 원가절감, 또 궁극적으로는 생활수준 향상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설정
 - 협력사업 사례

- 한·중·일 3국간에 서류 없는 무역의 실현을 통해 통관원활화 및 역내무역 증진
 - 물류 부문에서는 연안수송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
 - 환경부문에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황해 보호와 동북아 양식장화 추진
 - 한·중·일 3국은 관세율 구조를 역내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 3) 협력사업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라는 장기 비전 하에서 추진될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증진될 것이며 남북경제협력 증진은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에 직결될 것임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번영의 조건, 금융시스템의 제도화

데이빗 쥐처 (David J. Zuercher)
Wells Fargo Bank 수석부사장

한국은 현재 자신의 경제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 제도들을 변화시키는 등 확실히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국내 은행들의 자본 구성을 새롭게 고치고 정부가 자산상태가 건전한 은행들 간의 합병을 유도하는가 하면 회사 운영이나 자산상태가 불량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 기업에 대한 대출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한국 은행들의 문제점들은 단시간 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을 격리시키는 힘든 작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더더욱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OECD 회원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국내 금융시스템이 거시적 수준뿐 아니라 미시적 수준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평가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은행들도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양질의 은행가를 육성해 내는 작업, 즉 인재육성 사업과 같은 힘든 작업들을 거의 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은행가들은 일반 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관행과는 전혀 상반되게 일반 서민들은 무시하면서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은 현대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중한 신용확대를 통해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한국과 같은 개발 경제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은행들, 은행가, 그리고 금융감독관들이 일상적으로 중앙은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은행의 한 부분으로서 일하는 은행가들은 사회의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한국과 같은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독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비자와 기업 시장을 서로 분리시키는 형태의 지불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자신이 소속된 은행에게 가장 많은 이윤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사용하는 지불시스템이 한국과 다른 아시아 은행들이 서로 다투어 도입하게 되는 모델로 변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과 대규모의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를 갖추게 된 경제가 부상하게 되면서 이러한 금융 모델을 채택하게 된 아시아 지역의 은행들은 그 규모가 매우 커지긴 했지만 내실 있는 이윤을 남기지 못함으로써 실속 없는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은행들이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격과 신용 구조에 있어 지나치게 공세적인 경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처 성숙되지 못한 자국내 금융 시장을 지나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특정한 차용인에게 신용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전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일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스템이 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결코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은행들이 제공한 대부의 상당부분이 대기업 회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양태를 보면 마치 재벌이나 대기업 집단들의 지분에 은행이 투자한 것처럼 은행대부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업은행들이 진행하는 금융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투자은행들이 진행하는 금융 행위들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인들이 확인했듯이 이들 은행들은 대부자가 떠안게 되는 투자위험을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개별 은행들이 모두 불량채권들을 떠안게 되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의 구분이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 간의 영역 구분이 어려운 만큼 미국 경제는 매우 발달된 성숙한 경제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서는 심각한 금융 문제가 유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신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금융 시스템은 적절히 통제된 서민 지향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은 현대의 은행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매우 다양한 수단들을 적절히 갖추고 있으면서 양질의 공동체에 소속된 은행들과 그 지점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이며 형태들입니다. 말하자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은행의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지역 기업인들에게도 충분한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물리적인 지점망과 전산망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은행의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은행은 바로 일반 서민이라는 튼튼한 기간 산업의 구조에 의존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준에 있어 잘 훈련되어 있고 잘 교육받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은행이 손님과 만날 때에는 이들 직원들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은행의 책임과 권위를 적절히 대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만이 가능해 집니다. 제도화된 이러한 형태의 공동체는 변칙적인 통제는 구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내부적인 감독체제와 통제체제가 운영될 경우에도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21세기 경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제도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화가 성공적으로 갖춰질 때만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는 서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또 충실히 진행될 때만이 이러한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II. 경제지도자 원탁회의

동북아시아의 공동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공동번영과 기업, 일본인의 견해

후카쓰 세이지 (FUKATSU Seiji)

Asia Forum Japan 이사장

오늘날 아시아 경제는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에 따른 경제침체상황을 탈피하고 거의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경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작년과 올해 모두 6%대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상당히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제외한 것으로 일본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은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에 고이즈미 내각이 탄생, 구조개혁을 내걸고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내각을 뒷받침해 회복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아시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일본 경기를 회복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군사적인 긴장이나 국내정치의 불안정 등 많은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과거 30년 간에 걸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미지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경제가 향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세계에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시아 경제권’(그것이 어떤 것인가는 별개로 하고)은 ‘세계의 성장중심’이라고 불리었으며 21세기 초엽에는 유럽경제권에 필적할 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일 확고한 ‘아시아 경제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규모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소위 ‘경제권’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 몇 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하지만 아시아 지역 전체에 상당히 완만한 ‘커뮤니티’의식이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아시아지역에 하나의 ‘경제 커뮤니티’가 성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 커뮤니티’는 자본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이나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 등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열린 ‘경제 커뮤니티’의 원은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북한에까지도 확대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특별히 의식하고 있어서 였다기보다는 경제발전의 산물로서 형성되어 온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향후 어떻게 잘 운영해 가며 안정과 번영을 유지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시아 경제는 회복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IMF나 세계은행 내부에는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멀었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에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미국식 세계경제시스템(환전·금융시장의 완전자유화)을 기초로 하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아시아식’ 경제운영에 맡겨두면 또 언제, 어느 때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요. 어느 쪽이든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눈부신 경제성

장’과 ‘통화위기’의 요인을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생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분히 조사, 분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션의 테마는 “CEO의 시점에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보다 더 견고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호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우호촉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분야의 최고담당자 간의 상호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에 더해 문화교류나 시민 레벨인 풀뿌리(grass-root) 간 교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지만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현재 정보혁명이 진전된 결과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 정책의 성립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한국 방문객 수는 지난 2000년에 약 2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일본 방문객 수는 약 128만 명으로 이 또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신장률이 10%를 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對)한국 감정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999년을 계기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친밀감을 느낀다”가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웃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수치가 51.4% 대 44%를 기록, 1998년 이래 약 10년 만에 일본인의 대(對)한국감정이 호전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나 여성의 높은 관심도는 ‘한국 붐’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입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문화교류의 영향이라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세에 한·일관계의 진전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대통령’으로 불리어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여전히 다양한 문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정확한 ‘평가’, ‘인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 ‘인식’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양국 국민이 서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양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양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인 편이어서 풀뿌리 레벨의 상호교류가 진전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해도 반드시 해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또한 내년 2002년에는 한·일 양국의 공동주최로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경제면에서도 최근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이 출범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제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되어 FTA 체결을 향해 한걸음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화, 경제의 각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관계 긴밀화를 위한 확실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면에서 다소의 우여곡절이 발생한다 해도 양국 국민 간의 풀뿌리 레벨의 상호신뢰에 입각한 각 분야에서의 밀접한 양국간 관계가 존재한다면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도쿄·서울 간의 전세비행기 구상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일시적인 서울·도쿄 간 노선의 혼잡 해소라고 하는 운수정책상의 대응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일 양국간의 상호교류 촉진에 크게 기여할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풀뿌리 레벨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가급적 신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전세비행기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네다공항과 김포공항 간을 연결하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노선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한·일관계는 일반적인 양국간 관계로부터 일보 전진한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시야를 확대해 보면 이 지역의 중심인 한국,

일본, 중국의 수도 간에 삼각 전세비행기편의 운항도 앞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부

21세기 제주 비전



I . <기조연설>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제주 위상

II .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제주 위상

우근민 (제주도지사)

1. 변화의 시대

우리는 변화의 시대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변화에 대한 피로감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규모와 속도도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이 변하고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단위가 변하고 규범적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던 경제적 국경이 약화되고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역할은 강화되고 국가를 뛰어넘는 범세계적 수준의 정책결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지녔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을 비교해 본다면 그 엄청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은 이제 모두가 수긍하는 것이 되었고 여성론적 가치관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삶의 안정성은 깨어지고 분배의 격차가 더욱 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쪽이 옳은지, 불안해하는 쪽이 옳은지 어느 누구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는 있으나 변화의 방향은 예측할 수 없다.” 세계가 변하고 세계를 보는 의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변화의 방향과 결과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다가올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두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될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변화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입니다.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그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사회적 능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상상력입니다. 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핵심에서 서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상상력,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긴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 동북아, 새로운 가능성

21세기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동북아시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요소도 많이 남아 있지만 누구도 외면하기 힘든 새로운 개념, 새로운 현상으로 동북아시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20세기 그 역사적 질곡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동북아시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대상으로, 2차 세계대전 때에

는 그 전쟁의 한 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의 현장으로 동북아시아는 20세기를 고통스럽게 경험하여 왔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이 걷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정착에의 거대한 진전임이 분명하지만 그 의미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잔재를 걷어내고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을 최종적으로 걷어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남북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교류, 협력의 확대는 21세기의 시대사적 요청이고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적 요청인 것입니다.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이 걷히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가고 상품·자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체제도 여러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의 외교적, 안보적 측면의 협력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은 동북아시아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치적, 안보적 측면의 협력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을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역사에서 배운 교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적 발상을 벗어날 수 없다면 동북아시아 통합의 움직임은 ‘대동아 공영권’의 불행했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뿐일지도 모릅니다.

21세기 새로운 동북아시아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

해야 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형태의 통합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20세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인 지역적 국가연합체들이 존재합니다. 또 계속 형성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연합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연합체들을 징검다리로 삼아 세계적인 경제통합과 평화체제 구축이 더욱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시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연합체들이 폐쇄적인 블록으로 변하여 세계가 이러한 블록 간의 경쟁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입니다.

21세기 새로운 동북아시아는 개방적인 체제로 세계적인 경제통합과 평화체제 구축에 봉사하는 형태라야 합니다. ‘대동아 공영권’의 파멸적인 역사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개방적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동북아시아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는지 아직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내 국가들을 얽매고 있었던 냉전의 잔재들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이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동북아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

동북아시아라는 개념 속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는 특별히 빛나게 됩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특수성

이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서 더욱 적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정학적 중요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제주의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중요성은 제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성의 요소일 수도 있고 위험성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제주는 오히려 그 지정학적 위험성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대규모로 제주에 주둔하게 되면서 제주는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한 대규모 전쟁터가 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그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20세기 제주 역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의 경험도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일정한 연관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와 동북아시아의 대두는 제주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가 성립하게 되면 제주는 그 지정학적 중심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불확실한 요소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건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일에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을 버리고 패권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제주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시 위험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일 일단의 팽창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제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면 제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팽창주의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제주는 국제적 위험성 앞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적 동북아시아 체제에 대한 제주의 관심과 지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을 최종적으로 걷어내게 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제주의 의지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제주의 위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의 문제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가 21세기 제주의 명운을 결정할 문제라면 그러한 체제의 구축에 제주도 나름대로의 기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여의 방법이 ‘제주, 평화의 섬’ 비전입니다.

제주는 평화적 동북아시아 체제를 지향합니다. 또 그러한 체제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체제를 지향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는 제주가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기능하겠다는 선언이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인 것입니다.

4. 제주, 평화의 섬

21세기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의 섬’ 비전은 두 가지 구체적 계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구체적 계기를 보면 ‘평화의 섬’ 비전이 지니는 제주 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의 첫 번째 계기는 1990년대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 열렸던 한·소, 한·미,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세계 외교 무대에 대화와 교류의 공간으로 제주를 화려하게 등장시킨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은 제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과 함께 관광산업이라는 제주의 산업적 특성도 ‘제주, 평화의 섬’이라는 비전의 적합성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은 제주에 있어서 평화라는 이념의 지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산업적 지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를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그 대화와 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제네바와 같은 위상으로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이 지닌 산업적 의미인 것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의 두 번째 계기는 20세기 제주 역사의 최대 비극이었던 4·3의 해결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화의 이념입니다. 평화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의 제시를 통하여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4·3의 갈등적 요소를 해소하고 탈냉전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이 지닌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은 새로운 정신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미래를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이해하는 상호관용의 정신 위에서 공동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제주, 평화의 섬’이 지니는 또 하나의 제주 내적 의미인 것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비전을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는 일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이 제주 내에서만 주장되는 것이라면 이 비전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의 국가적 승인의 기초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52조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의 국가적 승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일부 이루어진 바와 같이 남북간 교류, 협력의 논의가 제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에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제주평화포럼’도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 평화포럼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 포럼을 또 하나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 평화의 섬’의 의미와 내용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또 협조를 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제주의 비전과 제주도개발특별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평화센터’(가칭)를 창설하여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회의산업의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동북아시아 체제의 형성 움직임에 특히 주목하면서 각종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은 제주 내적 관계에서는 4·3해결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니 만큼 이 비전에 따른 사업을 4·3해결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주도 내에 남아 있는 냉전적 의식의 잔재들을 쓸어내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적 의식을 제주 내에서도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5.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외부적인 변화에 그냥 맡겨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1세기 시대적 변화 속에는 제주에 희망을 주는 가능성의 요소들도 분

명히 존재합니다.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개념 속에는 제주로 하여금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한반도의 변방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위치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 비전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의 위상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에서도 함께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보편적 정당성을 띠고 있는 방향 설정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과 함께 제주는 21세기 제주의 비전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경을 뛰어넘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이고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제주, 평화의 섬’과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능동적인 국제화 노력은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북미 지역과 함께 이제는 세계 경제 3대 축의 하나로 자리잡은 동북아시아의 발전은 전세계의 주목거리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역사적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나아가고 있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역시도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주는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의 구축에 이바지할 준비를 갖추어 가려 합니다.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제주, 평화의 섬’ 비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국제관광사업과 평화, 일반적 견해와 동북아시아의 사례

후란시스코 후랑기알리 (Francesco Frangialli)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

1

오늘 저는 “국제관광사업과 평화: 일반적 견해와 동북아시아의 사례”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경제발전, 국제적 이해, 그리고 평화 등에 공헌할 목적으로 관광사업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기본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적실성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1999년 10월 칠레의 샌디에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137개 회원국가들이 ‘관광사업을 위한 세계 윤리 규약’(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때 마음 속으로 가장 먼저 떠올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먼저 ‘관광사업을 위한 세계 윤리 규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세계 관광사업을 염두에 둘 때 저희 세계관광기구가 최근 수 년 내 달성한 업적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적이고도 혁혁한 발전의 성과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의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세계 규약의 의미를 비웃지는 않는다 하

더라도 이 규약을 계기로 관광사업계와 모든 협력 당사자들과 함께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준 틀과 게임의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규약은 총회에 참석한 107개 국가들이 경제적 발전 정도의 차별성과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된 참석자 모두가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만족시킨 규약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적 성과물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철학적 배경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본 규약이 관광사업에 있어 거래의 자유화, 지속 가능한 개발, 관광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의 통제, 관광객의 상호 교환을 통한 평화적 문화의 촉진 등과 같은 요소들간의 직접적 연계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규약은 세계 관광사업이 ‘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세계경제와 민간 기업체, 그리고 자유무역’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제약요인이나 전제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 내에서 거래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약의 서문에는 규약의 정신과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들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 기존의 다수 원칙들과 다수의 법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화에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 발생하는 거래들을 통제하는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와 누구의 보호 아래 관광사업 분야의 경영이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이 분야에 있어 경제와 자연 생태, 환경과 개발, 국제적 거래에 대한 개방과 사회문화적 일체성의 보호 및 유지라는 서로 대립적 개념

간에도 일정한 화해와 조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확신하고 있다.’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규약에는 방문자와 주최자, 그리고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산업 관계자들의 상호적이고도 균형잡힌 권리와 의무들을 다양하게 나열한 일련의 원칙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한 철학적 배경도 수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이 성공적으로 설정되기는 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규약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언어를 통해 이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장려되고 널리 보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법률적 절차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규약의 내용과 핵심적 기본 원칙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관광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일정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제안과 주권국가의 특권적 개념에 대해 좀더 전통적인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란이 세계관광기구 내부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일정한 합의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규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초래된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중재기관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 성격의 내용물들이 개정되거나 조정되어야만 할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에 유연성의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규칙의 집행을 위한 자발적 구조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개발도상국가의 영토 내에 새로운 대규모의 관광리조트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업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해당지역의 공동체 또는 NGO들 간에 서로 차별적인 입장이 강경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으며, 논쟁이 심화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을 유발시키게 되고, 그

결과 서로 간의 관계를 매우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경우들을 세계 여러 곳에서 흔히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과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원칙들이 존재하고 이 원칙들 때문에 내일 당장이라도 분쟁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이는 정말 거대한 발전이고 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제 희망이기는 합니다만 실행의정서가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일도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결국 ‘관광사업을 위한 세계 윤리 규약’은 우리들의 선의의 의도와 경건한 희망의 결정체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약은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혀 있고 책임감 있는 관광사업 분야를 함께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동반자들이 사용하게 될 규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규약은 세계 관광사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해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어느 정도는 국제법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관련기능들도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많은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광사업의 분야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개척자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2

세계관광기구에서 실제로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이 규약은 관광사업과 평화 간의 복잡하면서도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약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실제로 입증해 주고 있는 사실들 간의 실질적 관계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사업은 전반적인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만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도시 룩소르(Luxor)에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테러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이 있었고, 나미비아에서는 관광객

어린이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필리핀에서는 반정부 무장세력들이 관광객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각각의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관광사업이 급격히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관광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평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전조등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광사업은 방문객과 주인, 주최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을 확대시킴으로써 방문객 역할을 하는 해외 국민들과 주최자 역할을 하는 현지 국가 국민들 간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절대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알고 있거나 접대를 한 사람 혹은 접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대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존 스타인백이 이런 내용을 비꼬듯이 적어 놓은 것을 살펴보면, ‘관광객들 자신이 어디를 방문하든지 간에 방문한 곳에는 항상 경제적 부는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 세계에 있어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은 세계평화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왜냐하면 관광하면서 일단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알게 된 이국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특정지역, 특히 관광지역이 소규모 지역일 경우 현지 관광지의 주민들과 관광사업 운영자들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성공과 실패의 운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관광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같이 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정지역의 평화는 지역 주민과 관광사업 운영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반면 갈등과 대립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뻔한 만큼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이 중동지역에서도 입증된다면 한반도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사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역사적으로 볼 때 관광사업은 국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한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가 전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국가들 간의 관계들을 극적으로 화해시키는 등 상당한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과연 관광사업이 경제구조와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됨으로써 급격한 경제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관광사업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고립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 유럽국가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무역에 참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 전 지역이 성공적인 관광명소가 되며 세계 관광사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부족들간의 평화와 대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지역은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이웃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방문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국제사회가 예상치 못하게 어느 관광사업 협력에 돌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양국 간에 합의된 관광사업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쿠바를 관광하는 서방의 많은 방문객들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관광 수입은 쿠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아주 주된 수입원

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산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북한 지역을 이제는 관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휴전선 이북의 금강산을 이제는 직접 관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년여 전과 달리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들이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ASEAN 지역 국가들을 방문하고 관광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는 서방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광허용도 곧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수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의 여행객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카지노까지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옛 도시인 성 여리고(Jericho)와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는 1년 전에 바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록 오늘은 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서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처럼 화해와 평화, 공존이 가능한, 함께 살아가는 시절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중요한 사례를 한가지 더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과 평화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본 세계관광기구가 주도했던 주요 사업들 중의 하나에는 2000년 9월에 팔레스타인 성지인 Holy Land에서 개최된 ‘새천년 주간’(Millennium Week)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잠깐 동안의 지나가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미래가 평가해 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UN이 선언한 ‘국제 평화 문화의 해’(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의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조직된 이번 새천년 주간이 누가 보아도 크게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것에 대해 세계관광기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새천년 주간에는 이 지역의 가장 저명한 세계적 인사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관광사업 세계의 유명한 공·사적 지도자 집단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아라파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면서 이스라엘 관광부의 전임장관이기도 했던 모세 카스포브 장관 등이 참석했었습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는 베들레헴, 그리고 다음에는 텔아비브에서 개최되었었는데 이 행사는 요르단강과 사해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주변 3개국의 관련 장관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나란히 함께 서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러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와 관련하여 세계관광기구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광사업의 거래는 평화정착의 과정들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일단 평화가 확보될 경우 이에 관계된 개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은 관광사업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한가지 더 첨가하자면 만약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지속될 경우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은 엄청난 낭비와 폐허뿐이라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을 가능케 했던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요소들의 완전한 파괴, 많은 실업자, 호텔과 문화적 유물 및 유적들의 파괴, 종교 유적지들에 대한 접근의 제한, 국경지대에 대한 관광 금지, 가자 공항의 폐쇄, 해당 지역의 불안과 안전 위협이라는 극히 부정적 이미지들을 해외에 각인시키는 것 이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광산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 전체의 관광사업 경영자들이 미래의 번영을 위해 하나로 단결하면서 이

러한 불행에 맞서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킨 낭비적 요소들을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낭비적 요소들을 확실히 제거함으로써 새천년의 상징적인 해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새롭게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러한 결의는 역사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며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5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말씀드리면 지속되는 전쟁이나 내전, 그리고 반복되는 테러 등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성지와 세계 다른 지역들에 있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상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Charles Péguy가 ‘4월이 오는 작은 소리를 맞이하는 꽃봉우리의 희미한 실낱 같은 약속’에서 말한 ‘실낱 같은 희망’(faint hope)과 같은 희망이 있는 한 꽃봉우리에 물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이더라도 우리는 봄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관광사업과 평화를 서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관광사업이 평화를 가져다주듯이 때로는 평화가 관광사업을 초래하는 만큼 이 둘을 서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프랑스의 작가 André Malraux가 ‘희망이 없는 세상은 정말 참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회복 불능의 상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록 위기에 놓인 중동 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들이 특정한 사건들의 연속적 발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들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되기 전의 완전한 백지 상태

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비록 공동목표에 대한 합의들이 현재는 침체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긍정적인 환경이 도래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합의의 약효도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지방의 극단적인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동면하는 극지방의 동물들과 식물들처럼 관광사업도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이어 곧 봄이 오듯이 조금씩 조금씩 관광사업과 평화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오면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사업에 관계하는 세계의 국가들 및 관광사업의 관계자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모두의 번영을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6

관광사업의 성장과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촉진시키는 것들간에 존재하는 긴밀한 상호관련성은 우리가 세계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조합하여 서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로 이곳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광기구는 세계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결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 년 동안은 세계관광기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 북한, 일본, 몽고, 그리고 한국 등 모든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빠짐없이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세계관광기구는 최근 이들 회원들에게 자국의 관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증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조언들을 정기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 세계관광기구의 활동들은 이들 지

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뿐 아니라 지역 평화를 고양시키고 이들 국민들간의 이해도를 증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천년에도 바로 이러한 목표들을 실행해 나갈 것이며 새롭게 충전된 활력을 기반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세계관광기구가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은 관광사업이 남북간의 관계고리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며 따라서 남북간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의 힘찬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것만큼 남·북한 지도자들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분명히 남북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근접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관광기구의 잠정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0년도 한해에 국제적으로 여행한 여행객 수가 6억 9,800여 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을 관광한 여행객 수는 이들 중 1억 1,100만 명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과 태평양 지역 중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은 6,400만 명에 달하는 국제적 여행객들을 수용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여행한 전체 여행객의 57% 수준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20년까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중국이 개별 국가로는 제일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사업의 미래가 매우 밝고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문화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관광명소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거대한 지역들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 북한의 금강산과 같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 일본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고대 도시들, 몽고의 광대한 광야, 한국의 아름답고도 풍부한 문화적 유산들은 세계에서도 유일한 것들입니다. 세계관광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유산과 자연 유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알리고 개발하는 데 아주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이들 유산들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 관광사업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력히 주창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개별적인 국가들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해서도 관광사업의 기술적 지원을 계속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관광기구의 회원국 138개 국가들의 여타 지역에 비해 중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정도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내 관광객이나 국제 관광객 등 관광객 수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사업의 다양화를 목표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중국의 사천성(쓰촨성), 산둥성(산둥성), 그리고 운남성(윈난성) 지역 등의 관광사업 개발 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성(하이난성), 귀주성(구이저우성)과 안휘성(안후이성) 지역의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계획안도 현재 준비 중이며 관서성(간수성)과 흑룡강성(헤이룽장성) 지역으로부터는 관광사업 개발 계획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계관광기구의 준 회원인 홍콩과 마카오도 기구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기구의 공식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세계관광기구가 2000년 11월부터 국가협력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제별 관광사업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UN의 원조가 북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2001년 여름에는 북한의 칠보산에 대한 관광사업 개발과 관광촉진 방안에 대한 임무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세계관광기구의 대표들이 최근에는 몽고의 관광사업 개발 요구들을 평가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유역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은 중국내 한인 자치구인 연변지역,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동부 몽

고 지역, 러시아연방의 프리몰스키 지역 등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경제개발을 위한 6개 분야 사업들 중의 하나로 관광사업이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관광기구가 관광사업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세계관광기구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각별합니다. 오늘날까지 세계관광기구는 두만강 유역 지역의 관광사업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안내서를 4개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 전문가 및 기고가, 저널리스트, 관광사업 운영자들을 위해 두만강 유역의 관광이 익숙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사업 마케팅에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관광사업 중에서 유일한 대륙 간 관광사업 프로젝트인 고대 실크로드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문화, 교역, 상업이 서로 교차하고 교류함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함께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크로드가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던 시기에는 동북아시아도 매우 번창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실크로드 관광사업은 지역 간 관광사업은 물론이고 지역 내 관광사업으로부터도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실크로드 개발과 관련된 관광사업이 생산해 낸 결과물들을 널리 공지할 목적으로 관광사업과 관련된 국제적 공동체들을 대상으로 실크로드를 따라 수 차례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관광기구는 1995년 일본에서는 실크로드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안내서를 출간했으며 1996년 중국 서안(시안)에서는 실크로드 관광의 다양한 여행지와 경유지들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한 관광 시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 운영자들을 함께 모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기술적 지원 이외에도 관심이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의 개최도 조직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관광기구가 2000년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개최했던 학술대회는 자연 유산과 문화 유산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000년 2월에 개최되었던 세계관광기구의 학술대회는 일본 와카야마의 시라하마에서 열렸고 ‘미래를 향한 관광사업 발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학술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적 유산과 문화적 유산의 보호’가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관광기구는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캄보디아 시엔 립에서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관광기구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섬 국가이거나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이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은 파괴되기 매우 쉽다는 점과 이들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적 성장의 추동력으로서 관광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섬으로 구성된 국가들에 대한 관광사업 개발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계관광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중국 하이난 지방의 산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섬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난 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세계관광기구는 이번 제주포럼이 개최되기 직전에 이곳 제주에서 관광사업과 섬의 경제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바로 개최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생태관광사업(Ecotourism)을 개발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생태관광사업과 관련된 활동들은 지난 20년 만에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UN은 지구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2

년을 ‘국제 생태 관광사업의 해’로 선언하였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국제 생태 관광사업의 해’를 맞이하여 진행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기념행사들과 활동을 준비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국제기구들 중의 하나로 지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관광기구는 2002년 ‘국제 생태 관광사업의 해’를 맞이하여 진행할 기념사업들 중에 생태 관광사업을 주제로 한 지역별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간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되는 세계 생태 관광사업 정상 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도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생태 관광사업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는 이들 지역별 학술대회들 중 가장 먼저 개최되는 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국제 생태 관광사업의 해’를 기념하는 각종 지역별 학술대회의 막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학술대회는 2002년 2월 몰디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학술대회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계관광기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들 가운데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세계관광기구 지역 지원 사무소가 일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일본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무소가 이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사무소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치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세계관광기구 지역 지원 사무소는 지역 내 개별 국가들의 관광사업 실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지원 사무소로서도 해당 국가들이나 지역에 매우 유용한 기술적 지원들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설치된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 지원 사무소는 인적 자원 개발, 자연 유산과 문화적 유산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실크 로드 관광 사업이 생산하고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촉진 문제 등에 사무소의 업무를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관광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관광사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이 세계적 관광지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광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해 세계관광기구가 그동안 다양한 지원들을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한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서울과 오사카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관광기구 총회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4차 총회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많을 것이며 ‘최초’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4차 총회는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이며 2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함께 주최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역시 공동 주최하게 될 2002년 FIFA 세계월드컵 대회와 맥락을 같이 하고자 하는 세계관광기구의 기대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지난 월드컵 대회 우승국이면서 저의 모국인 프랑스가 2주 전에 열린 2001년 대륙간컵 대회 예선에서 한국에게 5:2로 승리했습니다. 다시 제14차 세계관광기구 총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총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한국으로 온 관광사업 대표자들을 서울에서 오사카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문제입니다. 2001년 9월 28일 서울에서 오사카로 이동하는 600명 이상의 세계관광기구 대표들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이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과 오사카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제14차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역대 어느 총회에 비해서도 가장 성공적인 총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매력적이고도 따뜻한 호의에 대해 매우 좋은 추억들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조건, 환경친화적인 ‘제주형’ 으로 추진돼야

현경대 (국회의원)

1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경쟁력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IMF체제를 겪으면서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해졌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육성하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크게 자유무역지대와 특별경제지대로 구분되지만 기능이나 역할은 같다. 이곳들은 특별법이나 특별 내규로 해당국가의 국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관세 당국의 통제권에서 제외되고 상품과 재화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보장돼 말 그대로 관세의 부과에서 자유로운 자유무역이 가능해진다.

홍콩 등 국제경제에서 큰 위상을 갖춘 자유무역지대는 최소한의 관세 절차, 재정 및 조세상의 특권, 투자 인센티브 등이 보장되어 있다. 공항이나 항만시설 등 원활한 운송수단을 비롯해 도·소매 물류복합단지, 국제적 금융시설, 첨단산업, 호텔 등도 완벽하게 갖춰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제주도를 국제자유항 또는 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1963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과거 국내외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주도는 홍콩 등 외국의 국제자유도시들보다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40여 년에 걸친 수 차례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 관광명소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비즈니스·무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키로 하고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의 기초는 제주도를 2010년까지 천혜의 관광 여건을 살린 국제관광자유도시로 육성하고 2011년 이후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첨단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구로 '제주국제개발청'의 설립이 고려되고 있고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여당의 정책기획단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에는 관광, 1차 산업, 문화·예술, 교육, 과학·기술, 물류·유통, 금융서비스 등 7개 분야에 걸쳐 제주도 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 보고서는 우선 제주도를 비즈니스, 주거,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개발하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제주도를 중앙,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건의하고 있다.

자유로운 국내·외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한편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

해선 제주도 내 금융부문을 감독할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별도 설립해 적극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쇼핑을 허용하고 내국인 카지노 개방정책은 현재로선 국민정서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되면 대규모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뤄져 호텔 등 관광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기를 띠는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인천대 송희연(宋熙季) 교수는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관광수입으로 누적 외화수입이 800~1,000억 달러에 이르고 100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

그러나 적지 않은 제주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 청사진을 못마땅해 한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경우 외래문화에의 동화와 종속을 초래해 결국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단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구 증가로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킬 것이며 향락산업이 번성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수입개방으로 사치풍조가 만연돼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도 많다.

현재 제주도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중대한 몇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추진되는지 철학적 이념이 서 있지를 앓고 그럼으로써 그 밑그림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간을 다루는 계획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에서부터 그

정신사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야 개발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을 설득하여 정책오차를 예방하며 개발추진에 요구되는 지지와 참여를 견인할 수 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개발철학이 분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구상에서부터 마스터플랜에 이르기까지 온통 두루뭉실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중구난방이다.

둘째, 정책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다. 주어진 여건과 수준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차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된 차선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은 무엇이 진정한 차선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우리의 여건과 수준, 한정된 자원의 규모에 대한 분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도 없다.

셋째, 국제적 수준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 혁신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려와 준비가 미흡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 준비를 계기로 제주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자치단체의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과 지방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도시들만이 세계적인 지역 혁신체제 구축에 성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법·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저절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지는 않는다. 국제자유도시는 개방적인 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제주 도민들에 의해 제주 도민들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다. 제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이 결여된 국제자유도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보다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구상은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개발정책 보다도 제주의 운

명을 단숨에 바꿔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에 따른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회·환경적 규제는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돼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갖가지 장치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4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례법은 단순히 몇 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이용관리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대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계되는 법률을 분석해서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 둘째, '규제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 넷째, 제주도개발특별법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규제완화지역설치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도규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는 방식 등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중 세 번째 안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방식은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주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률상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특별조치를 고려할 수 있고 (2)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 범주 안에서 청정 제주의 환경과 국제적 자

유도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3)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통제수단을 최소화하고 제주 도지사에게 제주도의 특별한 개발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할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인 ‘특별법제정’ 방식은 (1) 제주도를 직접적으로 규제 자유지역으로 선포하는 효과가 있고 (2) 규제자유지역의 개념을 법률에 설정하고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와 설명을 함으로써 제주 도민과 전국민 나아가 범세계적인 설명과 홍보의 효과를 특별법의 제정으로 직접 피할 수 있으며 (3)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가지는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4) 제주도에 관한 법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법률을 만들 것인가와 함께 규제자유지역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가 법제화되기 위하여는 (1)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2) 목표로 정한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며 (3)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4) 이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틀과 그 내용을 확정해서 (5)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현행 법령이나 제도 및 그 운용 현실들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6) 이를 위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맡은 존스랑라살르사는 제주공항 확장을 비롯해 도로 확장,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투자계획까지 모두 포함해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3조 1,130억 원의 정부예산과 1조 3,100억 원의 민간자본투자 등 4조 4,23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4조 6,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지난날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국책 사업 중 전문가들이 뽑고 있는 대표적인 실패작으로는 시화호, 새만금, 청주공항, 경부고속철도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고 과도한 사업비로 나라 재정을 압박했다. 이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후 시행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말 그대로 애물단지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업들에 쏟아 부은 돈은 천문학적 숫자이고 이제는 되돌릴 수도 그렇다고 계속할 수도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국내의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나 이에 대해서도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를 개발하다가 이런 저런 문제에 직면하여 차질이 생기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문제일 뿐 아니라 제주도의 다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방안과 차질 없는 집행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

이웃 오키나와의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오키나와의 국제도시 형성추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키나와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바탕을 두고 '류큐왕국 대교역 시대 역사성 정립과 자존의 확립 → 오키나와 전쟁의 비극 진실규명을 통한 평화(전쟁·빈곤·환경파괴 등への 반대까지)에의 기원과 평화지역화 → 평화의 세계적 전파를 위한 국제교류로의 확장 → 국제도시 형성구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별정책들을 통합하여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국제도시라는 큰

들을 이루어나가도록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국제도시 형성구상은 사후에 발생할 역기능을 저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델로 구성되고 있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적극적 개방화 전략의 다른 표현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기왕에 개방할 바에는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개방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치열한 경쟁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스미스(Smith)는 ‘글로벌하다’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차원적 동시공존임을 주목한다. 세계화는 ‘하나의 지구촌’을 지향하지만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사회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데 아우르는 과정이다. 개방은 오히려 차별화의 공간을 중시한다. 지구촌 시대에는 지방의 정체성이 차별적으로 특성화될수록 그만큼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진정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미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을 개발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싱가포르, 홍콩과는 역사적 경험, 지정학적 위치, 시대적 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적인 것을 찾아내어 가꾸고 키우는 ‘제주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고 제주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라면 분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천혜의 청정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은 제주도가 가진 비교우위를 포기하는 행위다. 따라서 제

주도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형 첨단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미래

이해찬 (국회의원)

제주평화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이틀 동안 진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격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주를 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좋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모습을 보면 소극적 의미의 섬이 갖고 있는 개념만으로는 결코 제주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6·15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다름 아닌 우리 제주도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제주 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행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주도에서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냉전에서 화해의 정치로 세계가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세계경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진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역사적 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작업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좋은 내용, 보다 알찬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통신이 신체의 피처럼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을 큰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시작하는 국제자유도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는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섬이자 동북아시아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진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우선 금년에는 저희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사업을 전담하여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법규와 예산을 금년 정기국회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특별전담기구에 의해서 관련사업이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까지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기구가 금융, 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업무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겨 나가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민주당이 최대로 지원하고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전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던 제주도가 이제 평화의 가장 선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번 평화포럼을 통해 조성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동북아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과 제주의 역할

김세원 (서울대학교)

1. 세계화 속의 지역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질서는 40여 년 동안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간의 상이한 체제가 병존하는 데 따르는 갈등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변주의(multilateralism)와 EC가 선택한 지역주의(regionalism)간의 대립이었다.

이 두 과제는 20세기 말을 계기로 사실상(*de facto*) 해결을 보게 되었다. 내가 ‘사실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이 뒷받침하는(*de jure*)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의 해체와 유럽 내 사회주의의 소멸과 같은 국제정치적 변혁은 계획경제를 택해 온 중부 및 동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체제전환을 통하여 국제적 시장경제로 통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다변주의만을 고집해 왔던 미국은 1990년대 초에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의 수립을 실현함으로써 당시까지의 입장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GATT-1947의 관련 조문(XXIV조)이 다소 보완되어 GATT-1994로 발전했을 뿐이며 원칙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중정책(two-track policy)이 의미하듯이 미국이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꾸어 다변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진행되어 온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나는 여기서 ‘세계화’의 의미를 한마디로 ‘하나의 세계시장 경제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비교우위의 논리가 시사하듯이 시장경제는 그 속성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을 포함하는 경제거래의 확대를 가져오고 거래대상국들의 복지증대에 기여한다. 여기에 더하여 신자유주의적(neo-liberalist) 사고의 확산은 경쟁촉진, 규제완화, 민영화 및 대외시장개방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화를 통하여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WTO의 활동은 전 산업에 걸쳐 국가 간 인위적 장벽의 점진적인 제거와 함께 국제거래의 운영과 관련된 세계적 기준들(world standards)의 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하나의 세계시장을 형성해 갈 전망이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지역주의를 이해할 것인가.

우선 자주 등장하는 지역주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지역 내 국가들 간에 다른 제3국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경제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국제경제협력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고 과거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유행했던 특혜관계(preferential relations)는 WTO의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에 어긋남으로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결국 지역주의의 핵심은 WTO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지역 내 특정국가들 간에 추진하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으로 종합할 수 있다.

GATT XXIV조(및 GATS V조)는 최혜국 대우(MFN)에 위배되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을 일정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WTO에 통보한 지역 경제통합의 수(數)는 이 기구 회원국 수와 거의 맞먹는 130~140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WTO(과거 GATT)가 GATT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우는 5개 내외에 불과하다. 심지어 EC마저도 과거 GATT 내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국제

무역협상(1960~1961) 과정에서 사실상(*de facto*) 인정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역주의가 과연 다변주의와 양립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해답, 다시 말해 무역전환(*trade diversion*) 또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의 문제는 이제 학자들 간의 탁상논쟁으로 전락하였다. GATT-1994에 이르러 지역주의에 대한 WTO의 감시기능이 다소 강화되기는 했으나 이 기구가 실질적인 통제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역주의의 처리 문제가 꾸준히 의제(*agenda*)의 하나로 등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지역주의는 그 속성상 보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다. 경제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역외(*extra-regional*) 제3국의 입장에서는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을 내세울 수가 있다. 반면에 참가국들은 역내(*intra-regional*) 경제적 장벽의 제거를 통해서 시장확대에 따르는 여러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의 물결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후자, 다시 말해 역내 자유화에 그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본다. 경제적 연방(*economic federation*)의 단계에 들어선 EC가 실질적으로 1국 경제와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유무역 지역(FTA: Free Trade Area)의 초기 단계에 있는 NAFTA가 북미 3개 회원국에게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EC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경제규모, 경제발전 정도 또는 기술수준 등에 있어서 격차가 두드러진 국가들 간에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 제기되는 가장 큰 과제는 통합에 따르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제는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A(Free Trade Area of Americas)의 설립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주의는 세계화라는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 속에 또 다른 축소판 세계화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다변주의에 기초하여 국

제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다면 지역주의는 이 테두리 내에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다변주의보다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WTO(과거 GATT)가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을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에 대한 예외로 인정해 준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역주의가 과연 보호주의적인가 아니면 자유무역주의적인가에 대한 평가는 국제경제거래의 추세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가 대외협상권(extra-regional bargaining power)을 강화해 주는 데 있다고 믿는다. 협상권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규모와 부존자원의 상태를 배경으로 한다. EC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지 않았던들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권을 행사하고 또 국제경제에서 오늘날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는 없다고 본다. UR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이 NAFTA를 설립했고 이 기구를 배경으로 EC와의 농산물 협상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미국이 FTAA 설립에 집착하는 취지 중의 하나도 바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 동북아 경제의 국제경제적 특성

동북아라는 개념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분명한 경계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몽골이나 극동 시베리아는 물론 ASEAN 제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나중에도 설명하는 것과 같이 특히 문화적 동질성, 지역적 근접 및 역사적 공유대(共有帶)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대만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이 지역은 경제체제, 경제발전 정도, 경제규모 및 자원부존 등의 측면에서 격차가 큰 국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다른 3개국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은 동유럽 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체제전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장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중국은 그들 특유의 체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간 중국이 조만간 WTO에 가입할 예정이므로 역내 경제거래의 확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역내 경제 통합에도 상이한 체제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경제발전수준 역시 이들 국가 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만이 선진경제에 속하며 한국과 대만은 소위 신흥공업경제(NIEs: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에, 그리고 중국은 개도국에 각각 해당한다. 공통적인 현상의 하나로 이들 모두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여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각국 경제에 특유한 구조적 장애로 인하여 최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비대한 정부의 역할이나 경직적인 금융산업의 기능이 문제되고 있으며 한국 및 대만에서는 아직도 확고한 시장경제의 규율(market discipline)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은 아직도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말 한때 동아시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이 또다시 부각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역동성(dynamism)에 있다.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일본 경제를 제외한다면 3개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5~9%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20년에 이르러 미국 경제의 규모를 앞지를 것이라는 성급한 보고서도 나오기는 했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이 기간에 세계 GDP 총액에서 9%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교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여하간 동북아시아 4개국이 2020년경에 이르러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5% 내외에 달하여 NAFTA 및 EC와 함께 세계 3대 성장축(growth pole)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동북아시아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긍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자원의 부존상태이다. 다른 경제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대의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미개발 천연자원의 보유지역이기도 하다. 소득규모나 인구 등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가 역내에서 어떻게 경제교류의 증대를 통하여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잠재력을 현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우선 동북아시아 4개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은 이 지역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의 예측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한 예로 동아시아 8개국(동북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및 필리핀을 포함하는 ASEAN 4개국)의 수출이 국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7.2%에서 2020년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EC의 경우에는 39.1%에서 29.6%로, 그리고 NAFTA의 경우에는 16.9%에서 13.6%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의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 예측기관에 따라 다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이 수출증대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공업화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차지할 중요한 위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한 예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의존도(수출액/GDP)를 비교하면 대만의 45% 내외를 비롯하여 중국의 경우는 약 30%,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33~35%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의 분업구조를 분석하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EC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음

며 또 수출입을 비교할 때 불균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4개 국가의 총 무역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1990년대 말 기준) 수출에 있어서는 13~14%인데 반하여 수입에 있어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30% 내외에 이르고 있다. 한국 및 일본이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증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일본에 대한 이 지역의 높은 의존도를 반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ASEAN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은 총체적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 지역 국가들에게 미국은 1~3위에 위치하는 중요 수출국가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부분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미국에 대한 수출로 메우는 그야말로 “불편한 분업체제”(uneasy division of labor)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아시아 NIEs의 수출주도적 성장전략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및 대만을 비롯한 NIEs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는 물론 소재, 부품 및 공업용 원료를 비롯한 중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수출 품목인 전자 및 가전제품, 기계류, 자동차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의 경우에 관련 중간재나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설계기술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NIEs 내에서 가공(加工)을 거친 완제품의 주요 수출대상 시장 중에서 미국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R. Vernon이 주장한 제품수명주기설(product life cycle theory)이 들어맞는 것 같이 보인다. 한 상품이 개발, 성숙 및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상품생산의 비교우위는 점차 선진경제에서 NIEs로 그리고 다음에는 후진경제로 이전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지이다. 전자제품

의 예를 보더라도 역내에서 초기에는 일본이, 그 이후에는 한국이나 대만이,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수출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적 상품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는 핵심 중간재나 자본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내분업(intra-regional division of labor)의 발전에 있어서 한계를 예고해 준다. 중국이 막대한 부존자원을 배경으로 자연자원을 대규모 수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공산품 중심의 수평분업 체제가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무역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지적했듯이 수평분업 속에서 일종의 수직분업이 굳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요인이 기술격차에 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역내 해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더라도 일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미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의 확보나 기술 및 경영 know-how의 습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그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아시아내 일본의 중요 해외직접투자 대상지역은 ASEAN 제국과 중국이다. 물론 대상 지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크게 차이가 있다. 특히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주로 임금상승을 비롯한 생산비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장수출을 통한 생산거점의 확보를 취지로 하고 있는데, 판매는 현지시장이나 제3국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지 생산공장은 핵심부품이나 소재는 물론 자본재를 주로 일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일본은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이들 아시아지역을 수출시장의 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 역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록 소규모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ASEAN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 동기는 시장확보에 두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국내 임금상승 및 노사분규 증가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기업의 현

지공장은 본국(한국)의 기술, 중간재 또는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단순히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동북아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1개 이상의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만은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외교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남·북한 두 나라가 동아시아 내에서 어떤 경제권을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해 왔다. 중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경제권이면서 동시에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대만은 중국의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불안정한 국제적인 지위로 인하여 지역주의에 편승할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아 내에서 과거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선진경제라는 위치 때문에 지역주의에 앞장설 수가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에 크게 완화되고는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상 열거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역내 경제거래의 증대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동북아 국가들이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변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의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들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APEC과 ASEM이다.

그러나 이 두 국제모임은 협력의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능에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이 두 모임이 표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이다. ‘개방’과 ‘지역주의’라는 서로 상반될 수도 있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표현은 ‘모여서 협력을 모색해 보자’는 의도 이외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APEC이 2010~2020년간에 걸쳐 역내 무역 및 투자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지만 현재로

서는 그 실현을 기대하기 힘들다.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적 여건은 물론이거니와 WTO의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의 처리에 부딪치고 있다. ASEM 또한 비슷한 운명을 따르고 있다. 몇 가지 협력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나 과연 ASEM의 발전방향이 어딘지 총체적인 목표설정 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두 정례적인 국제회의는 그 나름대로 의의는 갖고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고도 많은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어 소위 ‘수의 법칙’(law of numbers)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EC의 경험에서도 얻을 수 있듯이 경제협력의 강화를 거쳐 경제통합으로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nations)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이 회원국들의 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역(逆)으로 경제적 이익이 경제협력의 강화나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코 아니다. EC가 유럽연방주의자들(European federalists)이 유럽 정치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첫 단계로 탄생했으며 가장 우선적인 취지가 ‘평화의 정착’에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럽 내 세력균형의 실현과 함께 ‘전쟁을 사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physically impossible)함으로써’ ‘평화의 정착’을 이룩하고자 하는 회원국들 간의 합의가 1952년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그리고 1958년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출범을 뒷받침했다.

동북아 내에서도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내 관련국들 간에 정부수준에서 경제통합을 추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영구적인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정치적 의지에 대한 합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국제회의의 다른 분과에서 정치·안보 문제를 토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이상 논하지 않고자 한다. 단지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회원국들 간에 정치·외교 협력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추가하고 싶다.

좀더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시킨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시장경제 체제가 역내에서 보편적인 질서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EC가 과거 1980년대에 남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입조건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요구한 적이 있다. 사실 경제통합은 물론 경제협력의 강화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이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 경제적 격차는 NAFTA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결정적인 장애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시한부적 보완 또는 보장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활한 시장경제의 운영은 단지 중국에 국한한 문제만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정도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다같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이 1980년대 초 이후 연평균 8%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개혁과 함께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른 활력에 크게 힘입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최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낙관론과 회의론이 엇갈리고 있다. 전자는 동남아제국의 외환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데 반하여 후자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부실화(不實化), 지역 간 및 계층 간 소득격차 그리고 저생산성 등과 같이 그간 쌓여온 구조적인 문제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 경제는 아직도 시장경제의 발전방향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추진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은 효율성 제고와 확대된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국가들 간에 경제통합이 추진될 수는 없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은 무엇보다도 소유(所有)체제에 있어서의 사유재산제도 그리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분권화체제이다. 그간 국영

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기는 했으나 1990년대 말 현재 고용인 수는 9,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가가치면에서도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이 국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WTO 가입은 중국에게 개혁의 마무리를 통하여 대외개방의 확대와 시장경제의 정착을 이룩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에서 정치적인 요인들이 그간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제는 자기완결적인(self-fulfilling) 시장경제의 속성이 오히려 정치체제 자체를 좀더 유연하도록 자극하는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예상되는 변화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밖에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내부적인 경제문제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소위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는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 특유(unique)의 ‘제도피로’(system-fatigue)에서 비롯되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버블경제의 붕괴가 기업·금융 부실로 이어지면서 경제침체를 가져왔으나 그 이면에는 일본 경제가 아직도 개인주의와 자율에 기초한 확고한 시장경제체제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경제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유연성에 있다. 이 유연성은 시장경제의 장점인 동시에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구조건이기도하다. 계획경제가 거의 사라진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일본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는 성장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자기 완결적인 산업구조, 수입제한적인 유통구조, 일본 특유의 기업경영 제도, 정부·기업 간 유착관계 등이 그 중요한 예들이다. 서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이 강도 높은 구조조

정을 추진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동북아 내에서 경제통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구조조정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역시 구조조정은 최대의 과제이다. 구조조정의 취지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한국 경제가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고 그 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질서 혹은 규율(discipline)을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 기업·금융 부실의 연결고리는 기업이나 금융산업이 지켜야 할 규율을 소홀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전경제 내에 확산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목표는 관행, 법 및 질서를 포함하는 제도를 재설정(institution-rebuilding)하는 것이다.

그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외환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 또 1999년 이후 성장, 물가 및 국제수지 상태를 비롯한 중요 거시경제적 지표도 비교적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수출의 부진, 환율의 불안 또는 금융시장의 경색현상 등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금융, 공공부문 및 노동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의 추진에 앞서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어야 할 과제들이다.

4. 경제통합의 전 단계 과제

이미 살폈듯이 동북아 지역은 상당한 정도로 ‘자연적인 경제지역’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4개국들 간 가까운 지리적, 문화적 및 역사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 및 개방의 추진을 비롯한 지역 내 정치적 변화에도 크게 힘입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연적인

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불편한 분업’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좀 과장된 표현을 빌린다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거래가 관련 거래 대상국들에게 이익의 배분면에서 큰 격차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정부 간 합의를 통해서라도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내 경제통합의 추진은 세계화 추세 속에서 이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발전방향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합’이란 지역 내 관련국가들이 정부수준의 합의에 의하여 경제거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경쟁질서의 도입을 취지로 하는 공동정책 및 공동제도의 수립을 통하여 하나의 큰 시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결코 서두른다고 실현될 수는 없다. 관련국들이 현실적인 장벽들을 단계별로 제거해 나가고 이와 함께 관련국들 간에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꾸준하고도 의식적인 노력을 전개할 때 비로소 동북아 경제통합이라는 이상(理想)은 달성 가능한 목표로 등장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는 경제통합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이다. 동북아 각국은 아직도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시장기능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 동북아 내 경제거래에 있어서도 시장실패가 가져오는 불신(不信)을 바로잡으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한·일(韓日)간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3개국 간 경제 통합의 추진에 관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일본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수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보면 최근에 개발된 기법(技法)들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장벽의 제거가 가져오는 이른바 FTA(자유무역지역)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경

제통합은 어디까지나 회원국 정부 간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공동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경제통합의 추진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불편한 분업’의 진행을 시정하려는 정부 간의 합의를 들 수 있다.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보다도 1997년 이후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외환위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NAFTA나 EU의 Euro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내에서만은 경제통합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자극제로 등장했다.

유럽통합의 선구자의 한사람인 J. Monnet는 ‘위기를 경험해야만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동시에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남겼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탁상공론으로만 논의되던 동북아 경제통합이 이제 ‘절박한 과제’로 다가왔다. 문제는 결코 서두를 수 없다는 데 있다.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유럽통합이 멀게는 중세기 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논쟁 그리고 가깝게는 두 차례 세계대전이 가져온 피해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유럽 내에서 창안된 경제통합의 모형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유럽과 동북아라는 두 지역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경제통합의 추진은 실패를 거듭하기 마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내 경제통합은 통화-금융협력 및 통합 그리고 개발지원과 같은 실물자원의 이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는 아시아 통화기금(AMF: Asian Monetary Fund) 그리고 후자는 동북아 개발은행(NADB: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두 접근은 다 같이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제안들이 담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로 Euro의 모형에 기

초한 동북아 공동 통화의 창출과 같은 성급한 제안은 이미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는 ‘강도 높은 협력’에 그 비중을 두어야 하고 이러한 협력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일에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EC가 출발 초기에는 데카르트식(Cartesian) 접근을 택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영·미(英美)식의 실리주의적(pragmatic) 접근도 동시에 병행을 했다는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는 이러한 단계별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단지 이 단계에 동북아 국가들이 합의를 이루고 또 이 단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추가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AMF나 NADB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기구가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통하여 경제통합의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좀더 높은 차원의 정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동북아 경제협력이사회(NAECC: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창설을 제안한다. 동북아 회원국들(가능하다면 대만과 북한까지도 포함하는)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 이 이사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그 산하에 경제부문별로 각료회의를 둘 수 있다.

이 이사회의 기능은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의 강화를 통해 공동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 동북아 제국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제는 무엇보다도 상호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정상회의에서 얻어진 결론에 따라 이 테두리 내에서 분야별 각료회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국이 안고 있는 경제적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토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다. AMF나 NADB는 이 이사회 산하의 상설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사회의 총체적인 기능은 현재 OECD의 전신인 구(舊)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의 경우에 비교할 수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로 이 이사회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동북아 제국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필요한 협조나 조언을 교환할 수 있으며 AMF나 NADB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 동북아 내에서 강도 높은 경제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일한 선진경제인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그동안 경제협력의 강화를 취지로 하는 제안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소극적이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일본이 과거 패권주의에 대한 동북아 지역 내 저항을 의식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는 입장’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적 여건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EU의 성공적인 발전 그리고 NAFTA의 출범 및 FTAA의 설립 추진 등은 지역주의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일본은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아시아 제국이 경험한 외환위기는 금융산업이 취약한 일본으로 하여금 금융, 통화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일본이 정부수준에서 통화협력과 관련된 제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최근 일본 내에서 비록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일본 간의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된 논의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이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추진이 실현되려면 일본 경제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좀더 많이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귀족의 신분은 의무를 수반한다(Noblesse oblige)’라는 격언이 말해 주듯이 여유 있는 일본이 좀더 많이 양보할 때 동북아 지역 내 협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 일본의 좀더 큰 기여는 이 지역 내에서 수요확대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는 물론 일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결국 동북아 지역 내 공영(共榮)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로 일본 내 소비시장의 확대를 통한 이 지역 내 ‘불편한 분업’ 관계의 시정뿐만 아니라 AMF나 NADB 설립에 대해 일본의 경제규모에 맞는 재정적 기여는 원만한 협력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5. 기대되는 제주경제의 역할

동북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주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3개국을 가장 가까운 거리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태평양으로 향하는 관문(關門)에 자리잡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잘 보존된 제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은 관광자원은 물론 휴양도시 또는 회의(會議)도시로서 활용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제주 사람들은 물론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제주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제주 개발이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의지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인 제2차 종합계획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를 국제자유도시(international free city)로 발전시킴으로써 법적 지위(legal status)까지 바꾸려 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금년(2001) 내에 개발계획의 방향이 확정될 예정인데 이 계획이 이 글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발전과 연계되기를 바라고 싶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의 강화나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통합의 추진은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본다. 만약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출범한다면 제주는 회원국들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력체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회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NAEECC, AMF 및 NADB 관련 시설들을 들 수 있다. 제주는 단순히 동북아 제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통하여 ASEAN 제국까지도 잇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주는 우선 다기능 도시(multi-polis) 또는 3중 항구 도시(airport, seaport 및 teleport)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자연적 조건은 물론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조건까지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를 거듭하게 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류(logistics)시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금융, 회의, 휴양 및 관광시설 등이 필요하다.

제주 개발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체계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여론의 저항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이다.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한 것은 자연 및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지(外地)자본의 도입이 제주도 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 때문이다. 그동안 제주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단순한 기우(杞憂)만은 아니었다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주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지자본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여건에서 제주에 진출하기를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의 수립에서 도(道) 당국은 이러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해 이 계획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와 함께 제주의 역할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개발 마스터플랜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제주가 이미 경험한 피해의식 - 예를 들어 환경파괴나 외지자본에 의한 단기적 이윤추구 등 - 을 제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한마디로 이 계획에서는 자연보존이라는 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제주가 동북아 지역 내 물류, 정보·통신, 각종 국제회의 및 학술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되어야 한다.

동북아 시장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세계적 시장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수요의 측면에서 제주에게 다시없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잠재적 시장수요를 가정한다면 제주는 공급측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로, 항만, 공항 등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의 개선과 확충은 기본 과제라고 믿는다. 제주 개발은 한마디로 현재 사회간접시설의 대폭적인 재

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인들이 제주를 다기능 도시로 이용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외국 방문객들도 제주를 즐겨 다시 찾게 된다. 아직까지 제주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여유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 과연 제주라는 ‘국제자유도시’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추세를 활용하는 방법은 오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으며 결국 제주가 특화(特化)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동안 많은 의욕적인 제안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제주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려면 이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자연적인 여건에 바탕을 두어 1차 산업(예로 감귤을 비롯한 일부 특수농작물과 수산물)과 3차 산업(주로 관광산업)에 특화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이 두 산업 간의 연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다면 앞으로 국제회의산업, 국제금융도시, 정보·통신기술센터 및 국제해양기술센터 등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을 정보화(informatization)와 지식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주 경제가 특화할 수 있는 산업들은 거의 모두가 특수한 부문들이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병행해야 한다. 제주가 학술, 연구와 함께 우수한 전문인력 배출 도시로서 또 다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외 자본과 기술을 제주에 유치하려면 관련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곳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 환경 친화적인 농작물이나 일부 수산물의 예를 든다면 세계적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연구소와 전문교육기관이 제주 내에 있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면 각종 외국어의 구사(驅使)는 물론 국제적인 식견과 소양을 갖춘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국내외 우수한 젊은이들이 제주에서 교육받고 연구하기를 동경할 때 특화산업의 육성은 뒤따르게 마련이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제주도,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고진부(국회의원)

2001년 6월 현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분이 발표하신 평화관광,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고견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를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국제중개 및 화해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주도를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로이 오가는 국제적인 실물경제의 명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21세기 제주를 장식할 화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나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고전적 의미의 개념을 뛰어넘어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범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실현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의 21세기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평화의 섬을 떠받들게 될 중요 정책으로서 제주도에게 특별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이 바로 제주 국제자유도시화 사업입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화란 평화의 개념인 자유로움,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로움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평화의 섬 구상과 일맥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앞에서 발표하신 세 분들이 언급했듯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조건,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배경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이란 공허한 이름만 붙여놓고 이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배려가 가시화되지 않은 채 선언적 의미에만 집착하여 제주 도민들이 자기 도취적인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책의 성사 여부가 여론 형성의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혜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을 만들기 전에 국민적 여론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다소 안이하게 대처해 온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상황과 여건들도 조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해 주고 이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 위한 과정들 중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성과물들을 계속 생산해 내어야 할 것이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하고 세계화시킴으로써 제주도가 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차별성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전세계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해야 만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아가 국제적 여론도 이끌어 냄으로써 실효성 있는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가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제주도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지난 세월에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이념적 갈등마저도 해소할 수 있는 기초를 마

련했고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 그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준비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제주도를 국제자유항 또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기는 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경대 의원이 언급했듯이 국내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의 확고한 의지가 미흡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당히 현실성있게 진지하게 제도적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기초안과 공청회작업 등을 거쳐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준비 작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혜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발전과 개선을 위한 비판들도 대안을 동반한 건전한 형태로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하고도 추상적인 문제제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적 개발, 제주도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개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권익을 보존하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발과 법 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나가는 한편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제주 도민이면서도 당당한 세계시민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임하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될 경우 제주도가 외래문화와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00년 역사의 화려한 한민족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화를 전세계로 전파시켜 나가야 한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추진전략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제주도의 개발사업을 되돌아보면 준비단계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추진단계에서 도민 참여보장과 역기능 부각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려는 이번 기회만은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II. 제3분과회의

평화와 번영의 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제주도, 「평화의 섬」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김부찬(제주대학교)

무엇보다도 먼저 제주평화포럼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조직위원회와 많은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포럼에 참석하여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의 지역 연합과 다양한 지역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좋은 논의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제주도 지방정부는 제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2가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제주도는 창조와 정의의 공동체로 육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가 평화, 번영, 그리고 복지의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 평화의 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개념이 제시되고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된 것이 벌써 10여 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일부로서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규정하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이들 목표들이 달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주평화포럼과 같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반

복되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번 포럼 이후에는 곧 ‘제주평화포럼’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여 년 동안 제주 국제자유도시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주 평화의 섬 계획과 마찬가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제주라는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련 작업들을 범 정부 차원에 심도있게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찬 연설에서 이해찬 의원이 언급했듯이 정부 여당과 제주도는 공동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제투자를 유치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 전담 기구도 곧 발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아직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나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제주도 지방정부 및 제주도의 언론 매체들이 일반 도민들과의 대중적 수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대화 결여, 그리고 이로 인한 도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원 교수가 언급했듯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결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조건을 이미 구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

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될 경우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추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일부분으로서 제주가 기능해야한다는 김세원 교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준에서 주도적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과 작업들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할 것입니다. 국제화된 시각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제주도가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김세원 교수가 언급했듯이 현실적으로는 국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수준, 그리고 경제적 개발정도에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지대로서 제주도의 위상이 어느정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주를 진정한 자유무역지대로 만드는 데 집중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러한 계획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내용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즉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큰 그릇을 어떤 색깔, 어떤 모양, 어떤 맛의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를 국제회의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국제금융 도시로 만들 것인지, 정보교류의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 계획은 친환경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환경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의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한 채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제주도의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제주 도민들의 능력과 역

량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제주도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도로 훈련된 양질의 학문적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을 양성해 내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 속에는 자유 교육도시의 개념들이 반영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제주 도민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일반의지와 역량들을 이 계획에 결집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관광사업 촉진, 경제발전 가속화, 국제적 이해도와 국제적 수준의 고양, 평화 문제 등을 언급한 Francesco Frangialli 씨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가 큼니다.

그리고 관광과 무역의 자유화, 지속적인 발전, 관광사업에 대한 통제된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 민간 관광교류를 통한 문화적 평화의 증진 등과 같은 요인들 간에는 아주 유용한 상호 연계성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왜 제주 평화의 섬 건설 계획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진행되어져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 그리고 왜 무엇보다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신뢰하고 건설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유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종합토론 □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 오코노기 마사오 (OKONOGI Masao)

일본, 게이오대학

이틀 동안의 회의 참석에 대한 느낌과 한·일 간의 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언젠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6월에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측의 필요성에 의한 결과로 성사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측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한 북한의 전략, 전술적 필요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한은 치열한 체제경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이 한국의 협력과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한국의 협조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재건과 체제유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측면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결코 남북정상회담을 진행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필요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에 초대했듯이 김정일 위원

장의 한국 답방도 북한의 필요 때문에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강상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국의 부시 정권 등장이 남북관계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협상이 성공하려면 협상 당사자들 간의 분명한 요구를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상호간의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미국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당근과 채찍 전략이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잘 수행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이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은 채찍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 나갈 경우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도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역할 공유보다는 역할 분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확실한 사찰을 진행하거나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한국 내부의 보수파들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확인작업과 그 과정들이 생략된다면 남북간의 신뢰회복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북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부시 정권의 등장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들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북한 핵사찰이나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시 정권이 채찍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상황하에서도 북한은 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일본도 곧 북·일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간에 합의가 이뤄져도 과연 한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적절히 사찰 할 수 있으며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찍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경입장의 부시 정권하에서 이러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다면 일본으로서도 상당한 신뢰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북·일 간 국교협상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염두에 둔다면 한·미·일 간의 협조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역할 분담을 통한 협조가 적절히 진행된다면 북한의 개방과 태도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시 정권의 출범 그 자체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기반을 근거로 하여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협조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1세기 미국의 아시아 연계망의 중심지로서 한국과 일본이 기능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의 연계망이 새롭게 형성되고, 연해주, 대만 등 아세안 지역 국가들로 연계망을 확산시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일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역시 한국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일 간에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여 나갈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21세기에 한·일 양국이 함께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비록 양국 간에는 교과서 문제와 같이 골치 아픈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이익과 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방향으로 양국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자유무역지대가 생기고 자유무역지대가 한·일 양국의 전 영토로 확대되어 갈 수만 있다면 영토 문제와 같은 갈등들도 해소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차별성을 확대시켜 나가기보다는 차별성은 최소화하고 공통된 측면들은 확대시키는 형태로 양국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대한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때 김정일 위원장의 한국 답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진다면 제주도에서 회담을 가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김대중·김정일 2차 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 일본의 총리도 제주도에 초청하여 함께 만난다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일관계도 함께 잘 진전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펜서 김 (Spencer Kim)

미국 Pacific Century Institute 소장

세계적 수준에 있어 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을 대신하여 중국을 냉전적 경쟁의 적대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소련과 경쟁하고 대결해온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미·중관계를 이러한 내용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게 있어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규정해 왔지만 미·중 양국이 동반자로서 함께 작업해 온 측면들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모순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자유무역의 개념을 위해 헌신하는 듯하지만 동시에 세계의 지배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여전히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역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보통 행위자로서 존재

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들을 만드는 절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심판관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자신의 세계적인 권력과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만큼 국제무역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경제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세계적 경제력에 버금가는 국제적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일본이 추진하는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존재에 대해 미국을 대신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켜 나가는 앞잡이로서 일본이 이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자노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 위상에 대항하여, 중국과의 연합을 보다 가속화시킴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있어 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미국과 대항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 중국 내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투자도 대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전쟁범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군국주의적 행태들을 계속 부인하는 한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또한 세계적 지도국으로서 일본의 존재는 아시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셋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특히 중국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 등 역사적 사실들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의 위신을 실추시키려 하고 있다. 아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학살된 중국인의 수가 마오쩌둥 시절에 학살당한 중국 인민들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겠지

만, 중국은 일본의 학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규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일 압력에 저항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 김태지 (전 주일대사)

동북아시아의 장래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페리 장관은 동북아시아 내지 아시아 지역은 불안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 정도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태도와 남북관계가 주요한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북아시아 지역이 항상 불안정한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이 지역 내 긴장감을 확산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역 안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발전되면 국력이 신장되고 국제적 위상도 향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경우 주변 국가들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일 양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제 움직임은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가 난처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실력행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미국, 일본의 대응으로 인한 힘의 대결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긴장의 확대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제가 발전되면 민주화도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민주화와의 인과관계는 불가피

한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제는 북한이 뒤로 후퇴시키지 못할 만큼 남북관계가 대화와 화해의 단계로 진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김대중 정권이 퇴임하고 난 뒤에도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에는 한국의 잘못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은 과거 정권의 업적은 무시한 채 새롭게 시작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화해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시키는 모습이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과거 정권의 정책들을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과거 정권의 실적과 긍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고 그 실적 위에서 새 정부의 성과를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관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외교에서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의 반대입장이 강경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협상에 이용하는 전략적 자세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내 반발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에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부시 정부도 남북관계를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측 입장과 주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1990년대부터 많은 합의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합의된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간에 한번 합의된 것은 계속 준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될 때만이 남북관계는 대결보다는 화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관련하여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작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목적의식, 그리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한 이후에 관련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는 우리들 내부의 준비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배타적 의식을 버리는 의식 변화가 우선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의식 개혁이 사전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의 접촉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세계화, 국제화된 인식 등을 위한 의식화, 지식화 작업을 새롭게 진행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소 광범위한 작업들은 바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간산업의 개념으로서 우선적으로 육성되고 개발되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

현재의 남북관계는 다소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는 다차원적이고도 중복된 ‘공조된 갈등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공조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 공조의 갈등, 그리고 남북간의 공조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를 유지하다 보면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남북간에도 대화가 용이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남북간 공조의 갈등적 요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유의해야 할 갈등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남간의 공조의 갈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장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듯이,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남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내의 공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의 공조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본적 자세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내용보다 자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조란 의견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창이 아니라 이중창이고, 4중창이고, 합창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들을 염두에 둘 때, 첫째, 평화공존과 공영, 즉 평화정착이라는 공통이익이 한국과 북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공통분모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易地思之하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하게 진행되는 대화, 접촉과 협의 과정에서 진실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적 가치 하에서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비공개로 협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솔직한 입장들이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합의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결코 승패의 개념이 적용되어

저서는 안 됩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며 한국의 여야관계에서도 이러한 측면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사전협의를 조율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들이 적당히 진행되어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그 사전협약이 진정한 의미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특히 한·미 공조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실무급 회담은 물론이고 TCOG과 같은 협의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솔직한 입장을 털어놓고 진정한 해결책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주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남남 공조를 진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건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것처럼 말로만 진행되는 대화가 진행되어저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는 초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또 실제로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개되었던 남·북한 갈등과 기타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을 당시 이러한 국회 특별위원회나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여야의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만 국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 단지 대안 없는 논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은 국민적인 정치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 협의하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시작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 발생시에는 물론이고 여야 영수간에 합의한 초당적인 긴밀한 협의를 정부가 사전협의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다양한 차원의 공조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이번 모임이 제주평화포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는 남북평화포럼, 동아시아평화포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제주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며 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결과를 수렴해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평화선언을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번 포럼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두 분들이 이미 참석했고, 미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참석할 의사를 표시했던 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분이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근민 지사가 제창한 평화연구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면 이 세 분들을 명예고문의 형태로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민족이 온 좋게 가지게 된 천혜의 보물섬입니다. 관광의 보물섬, 깨끗한 환경의 보물섬, 문화의 보물섬인 것입니다. 세계 섬문화 축제를 통해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세계 평화의 보물섬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제네바, 즉 평화를 창출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정상회담의 메카, 평화연구의 중심지, 국제적 회담과 논의의 중심지로서 제주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오코노기 교수가 지적했듯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로서 제주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상회담 당시 2차 정상회담의 장소로서 서울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을 모험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을 우리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6·15남북공동선언에 2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로서 서울을 분

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일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후에 제주도로 와서 2+1 또는 2+2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제주도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고려민항을 타고 직접 평양으로 돌아감으로써 제주·평양 간의 하늘길을 직접 트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변 4국이 인정하는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가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섬 선언과 관련하여 사실 10여 년 전부터 제주국제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제주 평화의 섬 확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제주평화포럼에서 평화의 섬 선언을 진행함으로써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한라로, 평화와 민족화해와 통일이 움트는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심재훈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전 서울지국장)

외신기자들이 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기자들은 남의 말을 듣고 질문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기자들이 나서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들도 역사의 현장에 있고 또 평소에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느낌을 정리해서 발표하자는 가벼운 기분으로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주평화포럼의 분위기는 저의 이러한 선부른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자들의 입장이나 논의들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판단과 분석을 진행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 느낀 것은 중요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분석이 중요한 핵심적 내용들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어설픈 잘못된 해석은 전혀 다른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페리 전 국방장관의 언급처럼 1994년 핵 위기 당시에도 저는 기자로서 많은 내용들을 분석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핵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페리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당시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강경한 조치를 실제로 취했다면 최소한 약 100만 명은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변의 핵 시설을 동결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북한은 약 5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지적, 그리고 1994년 핵 합의를 이루지 않았고 동결에 성공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북한이 약 50여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이라는 지적을 들었을 때 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저희 기자들은 이러한 위기감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CNN의 기자도 북한 핵위기 당시의 한국내 분위기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 핵위기 자체보다도 핵위기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위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지 결코 앞에서 언급한 진정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국 내 주요 인사들은 쌀 값 폭등만을 우려하고 있었지 결코 북한의 핵 폭탄이 가져다줄 엄청난 위기와 재앙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저희 기자들도 중요한 사건의 현장 속에서 생생한 내용들을 보도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상황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사건의 핵심을 간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자로서 흥미로운 일이기는 했지만 크게 반성해야 할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

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중 간 관계가 아무리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만은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저희 기자들에게는 좋은 시사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포럼에 참가함으로써 기자로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견해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신 국내외의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제주도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제주도가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더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짐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발전된 형태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희 기자들로서도 그동안 갖고 있던 보도 시각과 보도의 내용들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더욱 좋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종합토론소결 □

문정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종합토론을 마무리하고 이틀 동안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틀 동안의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메시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지금은 어렵지만 한반도에도 평화는 올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도 평화는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영이며 이는 평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어야만 번영이 있을 수 있고 번영이 있어야만 지속적인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가 있어야 평화가 올 수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야 평화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안보공동체가 있어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의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공동평화와 공동번영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 제주도가 그 중심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평화포럼, 남북평화포럼 등 이름은 무엇이던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모든 제주 도민의 지혜와 단결을 집결시켜서 제주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번영의 수레바퀴요 다른 하나는 제주 남북평화센터, 또는 세계

평화센터라고 하는 평화의 수레바퀴입니다. 번영과 평화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제주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래, 세계의 미래는 참으로 밝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틀 동안 포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음양으로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많은 단체와 기관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총서 1

동북아시아 공동 평화와 번영

인 쇄: 2002년 2월 25일

발 행: 2002년 2월 28일

편 자: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부성옥

발행처: 도서출판 오름

등록번호: 제2-1548호(1993. 5.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0-6 통일시대연구소빌딩 301호

·전화: (02) 585-9122, 9123 / 팩스: (02) 584-7952

·E-mail: oruem@oruem.co.kr

·URL: <http://www.oruem.co.kr>

ISBN 89-7778-153-1 93300

정가 15,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